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학제개편 방안

박창현·문무경·김아름·정다영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학제개편 방안

저 자

박창현, 문무경, 김아름, 정다영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박 창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문 무 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아 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정 다 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2-07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학제개편 방안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청사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22-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정부는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가책임교육 강화방안을 제안하였고, 모든 아이들의 성장의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할 것을 약속하였다.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교육책임을 확대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국정과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진은 새 정부가 제시한 영유아단계 국가교육책임제의 쟁점을 학제, 유보통합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과 정책전략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유보통합, 학제개편,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구하였고,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이 연구가 모쪼록 국정과제 추진의 기초자료로 새 정부의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자문으로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과 다양한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2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7
3. 연구방법	18
4. 용어의 정의	21
5.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23
6. 선행연구	24
II.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의 배경 및 정책 현황	33
1. 국내외 현황과 정책의 흐름	35
2. 관련 법령	78
III. 영유아 단계 국가책임교육에 대한 국민 여론 분석	89
1.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91
2.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	108
IV. 영유아 단계 국가책임교육을 위한 정책 제언	131
1. 정책 방향과 과제	133
2. 정책 전략	145
참고문헌	149
부록	155
1.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양육자 의견 조사	155
2. 빅데이터 분석: 맘까페 목록	170



표 목차

〈표 Ⅰ-6- 1〉 유보통합/유보 일원화 관련 연구	24
〈표 Ⅰ-6- 2〉 유아 무상·의무교육의 관련 연구	26
〈표 Ⅰ-6- 3〉 유아교육 학제 개편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29
〈표 Ⅰ-6- 4〉 만 5세 초등취학 연구 및 토론회 논의	31
〈표 Ⅱ-1- 1〉 유보통합/유보 일원화 정책의 흐름도	39
〈표 Ⅱ-1- 2〉 2000년 이후 학제개편안 및 만 5세 초등취학 제안 논의	42
〈표 Ⅱ-1- 3〉 학습준비도 척도	43
〈표 Ⅱ-1- 4〉 취학 전 발달 지표	44
〈표 Ⅱ-1- 5〉 학교 가기 전 안내서	45
〈표 Ⅱ-1- 6〉 유·초·중 통합학교 운영 현황	48
〈표 Ⅱ-1- 7〉 유초연계 시범학교 사례	50
〈표 Ⅱ-1- 8〉 유초연계 프로그램 사례	54
〈표 Ⅱ-1- 9〉 유아교육, 보육제도 비교표	55
〈표 Ⅱ-1-10〉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을	59
〈표 Ⅱ-1-11〉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령별 원아 수(2021)	61
〈표 Ⅱ-1-12〉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자 유형별 현황(2005~2022)	63
〈표 Ⅱ-1-13〉 연도별 초등학교 미취학자 유형별 현황(2005~2022)	64
〈표 Ⅱ-1-14〉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기관에서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수준과 교육기간	69
〈표 Ⅱ-1-15〉 OECD 24개국의 유아 및 초등교육 학제	75
〈표 Ⅱ-2- 1〉 학제 관련 법령	79
〈표 Ⅱ-2- 2〉 의무교육 관련 법령	82
〈표 Ⅱ-2- 3〉 무상교육·보육 관련 법령	85
〈표 Ⅱ-2- 4〉 조기입학 및 입학유예 관련 법령	87
〈표 Ⅲ-2- 1〉 응답자 특성	109
〈표 Ⅲ-2- 2〉 현재 재원 중인 기관 선택 이유 및 이용시 불편한 점	110
〈표 Ⅲ-2- 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에 대한 인식	111
〈표 Ⅲ-2- 4〉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구분되어 있어 불편한 이유	112
〈표 Ⅲ-2- 5〉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단계적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112
〈표 Ⅲ-2- 6〉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찬반 입장 및 이유	113

〈표 Ⅲ-2- 7〉 유보통합시 가장 우선적으로 동일화를 바라는 항목	114
〈표 Ⅲ-2- 8〉 유보통합시 연령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통합 형태 선호도	115
〈표 Ⅲ-2- 9〉 (영)유아학교 명칭 선호도	116
〈표 Ⅲ-2-10〉 (영)유아학교 명칭 선호도에 따른 이유	116
〈표 Ⅲ-2-11〉 (영)유아학교 구축시 가장 기대되는 점	117
〈표 Ⅲ-2-12〉 (영)유아학교 구축시 담임 교사 자격 조건 선호도	118
〈표 Ⅲ-2-13〉 교육과 보육 내용을 개선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	119
〈표 Ⅲ-2-14〉 놀이중심 유아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120
〈표 Ⅲ-2-15〉 놀이중심 유아중심 누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121
〈표 Ⅲ-2-16〉 (영)유아학교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개편에 대한 선호도	121
〈표 Ⅲ-2-17〉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122
〈표 Ⅲ-2-18〉 학제개편에 대한 인식 및 이유	123
〈표 Ⅲ-2-19〉 우리나라 현행 학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인식	125
〈표 Ⅲ-2-20〉 만 3-5세 유아 단계를 기본 학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인식	125
〈표 Ⅲ-2-21〉 만 5세 유아의 초등준비 수준에 바람직한 대안 인식	126
〈표 Ⅲ-2-22〉 만 5세 자녀 조기입학에 대한 인식	127
〈표 Ⅲ-2-23〉 만 2세 영아반과 만 3세 유아반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	127
〈표 Ⅲ-2-24〉 만 5세 또는 초등 1학년의 초등학습적응 준비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28
〈표 Ⅲ-2-25〉 유아 초등학교 학습 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128
〈표 Ⅲ-2-26〉 3-5세 무상교육 운영시간 선호도	129
〈표 Ⅲ-2-27〉 3-5세 무상교육 범위 선호도	130



그림 목차

[그림 I-3- 1] 정책토론회 유튜브 화면	19
[그림 I-3- 2] 정책토론회 포스터	20
[그림 II-1- 1] 교육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추진 과제 및 추진 체계(2023.1.5)	36
[그림 II-1- 2] 교육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핵심추진과제 (2023.1.5.)	37
[그림 II-1- 3] 취학/취원율(2011-2022)	58
[그림 II-1- 4] 연도별 학교급별 취학률(1980-2021)	59
[그림 II-1- 5]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2001-2021)	60
[그림 II-1- 6] 유·초·중등 학생 수(2012-2022)	61
[그림 II-1- 7] 유·초·중등 학교 수(2012-2022)	62
[그림 II-1- 8] 연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2000-2021)	63
[그림 II-1- 9]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자 유형별 현황(2011-2021)	64
[그림 II-1-10] 연도별 초등학교 미취학자 유형별 현황(2005-2020)	65
[그림 II-1-11] 3-5세 ECEC 등록률 및 변화(2020)	66
[그림 II-1-12] 3-5세 ECEC 사립 기관 비율(2019)	67
[그림 II-1-13] 취학전 교육 등록률(2020)	67
[그림 II-1-14] 유·초·중·고등 교직원수(2011-2021)	68
[그림 II-1-15] 영유아교사 학력과 양성과정(2019)	69
[그림 II-1-16] 학급당 아동 수(2012-2022)	71
[그림 II-1-17]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2-2022)	72
[그림 II-1-18]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2020-2021)	72
[그림 II-1-19]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	73
[그림 II-1-20] OECD 교사 1인당 취학전 아동 비율(2020)	74
[그림 II-1-21] 유아무상교육보육 가능시간 및 연령(2018)	76
[그림 II-1-22] 완전 취학 연령 범위(2020)	77
[그림 II-1-23] 3-5세 GDP대비 아동에 대한 평균 지출 비율(2019)	78
[그림 III-1- 1] 조사 방법 및 절차	91
[그림 III-1- 2] 데이터 정제 과정	92
[그림 III-1- 3] 학제개편 관련 전체 버즈 발생량 및 발생 추이	93

[그림 III-1- 4]	학제개편 관련 주요 정책별 버즈 발생량 비교	94
[그림 III-1- 5]	학제개편 관련 주요 정책별 긍·부정을 비교	95
[그림 III-1- 6]	유보통합 관련 전체 버즈 발생량 및 발생 추이	95
[그림 III-1- 7]	유보통합 연관 키워드	96
[그림 III-1- 8]	유보통합 관련 긍·부정 반응 및 월별 부정 비중 변화	97
[그림 III-1- 9]	유보통합 관련 맘카페 주요 의견: 긍정 반응	97
[그림 III-1-10]	유보통합 관련 맘카페 주요 의견: 부정 반응	98
[그림 III-1-11]	만5세 초등취학 관련 전체 버즈 발생량 및 발생 추이	99
[그림 III-1-12]	만5세 초등취학 연관 키워드	99
[그림 III-1-13]	만 5세 초등취학 관련 맘카페 주요 의견	100
[그림 III-1-14]	만 5세 초등취학 주요 이슈 및 이슈별 VOC	101
[그림 III-1-15]	K학년제 및 유아의무교육 관련 전체 버즈 발생량 및 발생 추이	101
[그림 III-1-16]	K학년제 및 유아의무교육 관련 주요 연관 키워드 및 VOC	102
[그림 III-1-17]	K학년제 및 유아의무교육 정책 관련 맘카페 부정 의견	103
[그림 III-1-18]	K학년제 및 유아의무교육 정책 관련 맘카페 긍·부정 비중 및 주요 의견	103
[그림 III-1-19]	유아무상교육 정책 발생 버즈량 및 버즈 발생 추이	104
[그림 III-1-20]	2022년 유아 무상교육 관련 주요 이슈 및 이슈별 VOC	105
[그림 III-1-21]	유아무상교육 주요 연관 키워드 및 VOC	106
[그림 III-1-22]	유아무상교육 관련 맘카페 주요 부정 의견	106
[그림 III-1-23]	유아무상교육 관련 맘카페 주요 긍정 의견	107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51년 시작된 6-3-3-4 단선형 학제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 학제개편, 의무교육, 무상교육 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
 - 만 5세 취학 논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로 경제인구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자하는 경제적 접근 속에서 제안되었으나 아동의 발달 비고려 등의 이유로 철회되었음에도 정권이 바뀔때마다 그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 이는 학제개편을 교육과 경제개혁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임.
- 영유아단계 교육과 보육 정책은 양질의 교육과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 현장,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위원회 및 토론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새 정부가 제시한 영유아단계 국가교육책임제의 쟁점을 학제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이와 관련된 관련 정책 쟁점에 대해 부모 및 국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나. 연구내용

-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강화와 유·초등 시스템 개편의 관점에서 학제개편에 관한 문헌고찰 및 분석
 - 학제개편의 개념, 정책의 배경과 흐름, 쟁점 등을 중점으로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영유아 학제, 유보통합, 무상·의무교육정책 개관, 관련 법제도 및 현황 분석 등을 진행하였음.
- 소셜 빅데이터 분석, 학부모 의견 분석, 정책토론회를 통한 정책 요구 분석
 -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소셜 빅데이터 분석, 부모의견 조사,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음.

-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분석하고, 부모 의견 조사를 통해 정책요구를 파악하였으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책에 대한 쟁점과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음.

□ 유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국가책임교육 강화방안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

- 유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국가책임교육 강화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다. 연구방법

□ 문헌조사

- 국책연구기관 정책연구보고서, OECD 등 해외 자료 분석,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영유아대상 관련 정책의 배경, 법 제도 및 통계 현황 정리를 통한 학제개편에 관한 이론적 고찰하였음.

□ 설문조사

- 유치원, 어린이집 부모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총 1000명에게 관련 정책에 관한 온라인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음.
- 유효표본 987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대해 양적통계분석을 실시하였음.

□ 소셜 빅데이터 조사

- 학제개편, 만 5세 초등취학, 유아의무, 무상교육 등에 대한 국민 여론 분석을 소셜 빅데이터 조사 방법을 통해 진행하였음.
-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책 관련 관심도 및 버즈량 추이, 연관어 분석을 통한 여론 동향 파악, 정책에 대한 긍·부정 요인 분석 등을 진행하였음.
- 데이터 건수에 기반해 트렌드와 이슈를 확인 가능한 문서량 추이 분석과 특정 주제에 대한 긍·부정 키워드를 바탕으로 성향을 파악하는 감성 분석을 실시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 연구 수행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현장 전문가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 진행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음.

□ 정책 토론회 실시

-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의제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2. 영유아 단계 국가책임교육의 배경 및 정책 현황

□ 국내외 현황과 정책의 흐름

-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제 강화와 높은 공공성, 양질의 교육·보육이 요구되며 학제개편, 만 5세 취학, 무상의무교육 등은 전 정부에 걸쳐 이어지는 논의임.
- 유초연계는 학제개편의 관심이 증가함과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발달에 근거하여 만 5세 취학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 국내 유초연계는 통합학교(이음학교), 프로그램 연구 등을 통해서 고찰해볼 수 있는 한편, 국외 유초연계는 자격기준 강화, 의무기준, 교육과정, 법령 등의 국가수준에서 고찰이 가능함.
- 유보통합은 영유아기에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논의하고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응만으로 진행되어 교육기회 및 지원, 절차상의 문제, 학부모 부담 등 다양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유아 무상·의무교육은 현재 취학전 보육과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누리과정으로써 공통의 교육·보육 활동의 통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기관, 설립·운영 요건, 관장부처 등에서 상이한바 대부분의 영역에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아동들의 취학·취원율, 교직원, 기관 수 등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정리하였음.

□ 관련 현황과 법령

- 교육기본법상 학교제도에 유아교육이 포함되어있으며, 학교의 종류에는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별도의 수업연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현재 유아교육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취원 의무가 없음.

- 향후 의무교육이 된다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 같이 취원을 강제하는 여러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 의무교육 실행을 위해 국가는 모든 유아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유아학비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액만 명시하고 있을 뿐, 무상교육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재의 유아교육은 의무교육도 아니고, 완전한 무상교육도 아니라고 볼 수 있음.

3. 영유아 단계 국가책임교육에 대한 국민 여론 분석

□ 소셜 빅데이터 분석

- 최근 1년간 유보통합 버즈량은 72,851건, 반면 8월 11일간 만 5세 초등취학 버즈량은 350,302건으로 온라인 맘카페 내 만 5세 초등취학 관련 관심도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유보통합, 정책 발표 이후 부정 여론에서 긍정적 여론으로 변화하는 추세 보였으나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발표와 함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짐.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수준의 향상으로 질 높은 교육 가능, 어린이집 지원 증가에 대한 기대 등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부정 의견으로는 교사 일원화로 인한 교육 질 하락, 유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평, 유치원 교사 역차별 논란 등이 존재함.
- 만 5세 초등취학관련, 맘카페 내 부정 평가 약 96%로 불만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맞벌이, 돌봄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만5세는 입학하기에 이른 나이라는 평, 사교육 심화 우려 등 다양한 반대 의견이 제시됨.
- 맞벌이, 돌봄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만5세는 입학하기에 이른 나이라는 평, 사교육 심화 우려 등 다양한 반대 의견이 제시됨.

- K학년제는 만5세 입학제와 동일시 되며, 약 96%의 높은 부정 평가를 보임.
 - K학년제는 아동 발달 수준에 대한 걱정, 사교육 심화, 아동 돌봄 공백 우려를 원인으로 반대 여론이 매우 큼.
 - 단, K학년제가 의무교육을 끝자로 함에도 불구하고, ‘유아의무교육’ 키워드는 K학년제 대비 긍정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만 5세 입학의 대안책으로 여겨짐.
- 유아무상교육은 타 학제 개편 정책 대비 긍정 인식이 약 52%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남.
 - 유아무상교육은 타 정책 대비 긍정 인식 높으나, 재정 투명성 확보, 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 경쟁력 상향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유아 전면 무상교육’과 ‘유아의무교육’은 세금 증가 우려로 각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향이 나타남.

□ 학부모 인식 조사

-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구축, 학제개편 및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은 일부 상이하게 나타남.
-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찬성과 중립의 입장과의 비교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 보다 더 명확한 시행과정을 요구하고 있음으로 파악됨.
- 영)유아학교 구축에 대해서는 중립과 동의하는 수준으로 집중되었음. 그러나 명칭, 기대되는 점, 우려되는 점등에서 상이한 반응과 의견을 나타냄.
- 만 5세 초등 취학에 대해서는 반대의 견이 확실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아동발달의 문제, 당사자들의 의견 반영의 부재 등을 이유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 학제개편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찬성하는 입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임.
- 만 5세의 초등학습 적응 준비반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유초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으로 나타남.
-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온종일을 요구하며 다양한 수준에서 요구하고 있음.

4.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을 위한 정책 제언

1)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을 위한 유보통합 정책

□ 정책 방향

- 유보통합, 정책 발표 이후 부정 여론에서 긍정적 여론으로 변화하는 추세 보였으나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발표와 함께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음(부정 비중- 7월 68.0%). 즉, 정부의 주요 정책들과 유보통합 정책들이 연동하므로, 정부의 지지율과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충분한 국민 대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연구의 부모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정도가 정부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책홍보가 지금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부모들은 현재 유보통합 정책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조정과 국민통합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았음.
- 부모들은 유보통합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수준의 향상으로 질 높은 교육 가능, 어린이집 지원 증가에 대한 기대 등으로 긍정적 반응이었음.
- 반면, 부정 의견으로는 교사 일원화로 인한 교육 질 하락, 유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평, 유치원 교사 역차별 논란 등이 있었음.
- 부모들은 거의 절반 정도는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별다른 불편은 없지만, 영유아교육기관이 접근성이 편하고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질이 우수하며 교직원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음.
- 부모들이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는 모든 유아가 평등하게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이고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에는 현재보다 교육보육 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음.
- 유보통합을 통해 우선적으로 동일하게 되기를 바라는 요인은 교사의 자격과 처우, 교사 대 아동비율, 부모 비용 부담이었음.
- 부모들은 유보가 분리되어 가장 불편한 점이 동일한 연령(만 3-5세)임에도 두 기관의 이용시간과 비용, 교사 등의 차이가 있어 불공평함으로 인식했고,

유보 기관의 차이를 교육과정과 교사, 주관부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동일 연령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기를 바라는 것임.

- 유보통합시 연령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통합으로는 만0-5세 교육부에서 모두 통합이 36.2%, 만 3-5세 유아교육(교육부), 만0-2세(복지부 또는 타부처)로 연령별 이원화가 33.5%로 거의 비슷했지만 만0-5세를 교육부에서 모두 통합하자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았음. 만0-2세를 교육부에 통합해야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로 유보통합을 할 때 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찬성하는 이유는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부로 통합이 되면 학교 정체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었고, 반대하는 이유는 학교라는 명칭 자체가 영아 돌봄에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음.
- (영)유아학교를 구축하게 될 때, 담임교사가 갖추었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로는 아이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 인성이 좋은 교사, 영유아교육 전문성이 높은 교사였음.
 - 학부모들은 만0-2세반이나 만3-5세반이나 모두 교사의 학력은 4년제 대졸 출신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음. 학력과 전문성은 상관이 높으므로 추후 유보통합을 고려할 때 만0-5세 (영)유아학교의 교사들은 모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할 필요성이 있음.
- (영)유아학교의 학급당 유아수의 비율은 부모가 원하는 비율만큼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와 최대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합적이고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학급당 유아 수의 경우, 부모들은 만0-1세 영아는 약 2명, 만 2세는 약 4명, 만 3세 유아는 약 7명, 만 4세 유아는 약 9명, 만 5세 유아는 15명이라고 응답, 전체적으로 만0-5세 학급당 유아 수 10명 이하 구성 요청
-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인성교육과 놀이중심교육활동, 사회정서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음.
- 부모들은 방과후과정/오후 돌봄에서 프로그램이나 돌봄의 구조가 지역에 따라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기를 원하였으므로, (영)유아학교들이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고, 기관의 자율성을 보다 충분히 주는 방향을 개편해야 함.

- 정부의 지지율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교사 자격, 시설 통합 등에 대해 추진단과 추진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함.

□ 정책 과제

- 정부-교육청/지자체-유아교육과 보육계, 학부모, 국민들과의 소통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및 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고 발족하여,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해야 함.
- 재원,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 등의 세부적 문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다 빠르고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함.
- 미래비전을 그리는 새로운 방식의 유보통합 로드맵 구성이 필요함.
- 0-5세 교육부 통합의 의미를 함께 논의하고, (영)유아학교 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함.
- 교육부 중심의 0-5세 유아학교 모델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함.

2) 유보통합과 함께 고려할 유아무상교육

□ 정책 방향

- 유보통합을 논의하면서, 무상교육의 개념과 범위, 연령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장기 로드맵 하에서 차근차근 실행해나가는 것이 적합함.
 - 본 연구에서 국민들은 유아 무상교육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 긍정적으로 보였으므로, 우선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
- 고려해야 하는 점으로 재정 투명성 확보, 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 경쟁력 향상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유아 전면 무상교육’과 ‘유아의무교육’은 세금 증가 우려 등을 선택하였으며, 부모들은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모든 아이에게 실현되고,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재정지원하고 교육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며, 특성화/특별활동비를 제외한 모든 돌봄을 무상으로 해야한다는 점에 모두 긍정의견을 제시하였음

- 만3-5세 무상교육 운영시간의 적절한 정도에 대해 모든 시간(온종일)을 선택한 대에 따라, 유아무상교육을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정책과 함께 진행하여 부모 만족도를 높이며 정책의 추진 동력으로 삼아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를 정비하고, 보다 나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책 과제

- 재정지원을 표준유아교육비까지 늘릴 계획이 있다면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임시회제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만0-5세 유아학교 시스템에서 만3-5세 무상교육을 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기본과정과 방과후과정, 친환경 무상 급간식에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학제개편: 영아 공보육, 유아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뒤, 유아 의무교육 고려 가능

□ 정책 방향

- 만5세 입학연령 하향화 정책과 K학년제 등 학제개편에 대해 부모들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제안해야 할 것임.
- 유아의무교육의 선결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질 때 학제개편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는 유아의무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이므로, 유아의무교육 체제를 장기로드맵으로 잡고, 유아무상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임
- 3-5세 유아학교 체제 내에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여 기간학제화를 추진하고 국가책임 유아교육을 이상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정책 과제

- 현재는 유아의무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이므로, 유아의무교육 체제를 장기로드맵으로 잡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유보통합과 유아무상교육에 중

점을 두는 것이 보다 적합함.

- 학제개편은 초중고 시스템의 학제 개편에 집중을 하거나(줄이거나 통합하거나) 유-초 연계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등학교 준비는 단순 한글, 수 교육 보다, 의사소통교육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 정서교육, 신변처리 교육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와 홍보를 강화해야 나가야 함.
- 마지막으로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은 학제개편 논의에서 지양해야 함.

5. 정책 전략

□ 유보통합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내 국민참여 플랫폼 마련 및 유보통합 정책 홍보 및 소통 체제 강화
 - 가짜뉴스 정리, 국민대상 정책 홍보(K-TV, 육아방송 등 활용)
 - 온/오프 상시 소통창구 마련으로 민원 해결
- 교육부의 유보통합추진단(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정책 결정,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역할, 교육청(지원청)의 인력배치, 지자체 관련 부서와의 연계방안, 지원조직과의 세밀한 연계방안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
- 만0-5세 (영)유아학교 단계적 구축 방안 마련, 가칭 영유아교육법 신설
 - 만0-2세 영아학교, 만3-5세 유아학교 명칭에 대한 합의 과정도 필요
 - 만0-2세 돌봄 기반 영아학교 교육과정 수립
 - 미래 유아학교 모델 구축
- 유보통합 시, (영)유아학교의 정체성 확보와 교육보육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 학급당 유아 수 상한 10-14명 이하 법안 제정
 -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이 어려운 이유는 사립과 민간 기관이 유아 수를 줄이면 운영상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므로 이를 지원 정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 방과후과정 및 오후 돌봄의 지역화, 다양화, 자율화 방안

- 만0-5세 교육과 돌봄 제공을 연령별로 이원화, 현행 유아교육법 2조 방과후 과정 개정, (가칭) 영유아교육법에 반영
 - 만3-5세는 교육과 오후 돌봄 체제, 만0-2세는 돌봄 체제로 구성, 학부모와 영유아가 체감하기에는 교육과 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된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촘촘한 체제 구축(인력 배치 등)
- 누리과정, 유아학교 교육과정으로 명칭 변경
 - 누리과정을 폐지하고 ‘유아학교 교육과정’을 유아학교 교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
 -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의 구체화 필요: 인성교육과 사회정서교육, 놀이교육의 강화
 - 단위 유아학교 자치 강화, 교육과정 자율성/다양화 내실화
- 만0-2세 표준보육과정 유지, 만0-2세 영아담당 교원이 운영하도록 자격 신설
- (영)유아학교의 교수학습 방법과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 역량 강화에 관한 개념 재정립뿐 아니라 관련 연구 필요
- 미래세대 기초교육을 위한 교원양성체계 제안
 - 영유아 교사 학력 학사 이상으로 추후 상향
 - 전문학사의 경우 심화과정을 추가로 이수 과정 제안
- 교원 자격을 획득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 교육부로 유보통합을 할 때 교원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들을 안심시키는 과정이 필요
 - 만0-5세 (영)유아학교 교원의 정원, 자격, 처우 등에 관한 심층 연구수행
- 교사 정원 조정 필요
 - 1교실 2교사 제도(비담임제도 포함) 등을 포함한 교사 정원 조정 정책을 학급당 유아수 정책과 연동하여 시행
- 유보통합 재정 규모와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 제안

□ 무상/의무교육

- 단계적 완전무상, 유아 기간학제화 안착, 재원 마련 계획 수립
 - 유보통합 재정 규모와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 제안
 - 유아 무상교육, 의무교육의 장기 로드맵 구축
- 학부모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도 높으므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화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할 것을 제안함.

□ 학제개편

- 유보통합 기반, 무상교육에서 의무교육 체제 구축이 가능한 단계에, 유아단계 기간학제화 실현, 장기 로드맵 마련
 - 추후 1 또는 2+5 정책 제안: 유아의무교육 4세 또는 4-5세, 초등 5학년제 제안, 기본단계와 초등단계로 구분, 기본단계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으로 구분
- 만 5세를 초등학교에 보내거나, 입학연령을 낮추거나, 조기입학을 추진하는 관련 정책들은 추후 지양
- 만 5세 초등준비는 놀이중심 유초연계방안 마련으로 해결, 연구 및 프로그램, 강화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용어의 정의
- 05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 06 선행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만 5세 초등취학 문제로 학제개편과 국가책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51년 시작된 6-3-3-4 단선형 학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왔으며, 만 5세를 초등에 보내자는 주장은 정권교체기가 되면 교육개혁으로써 논의되다가 포기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박창현, 김근진, 윤지연, 2021). 만 5세 유아 대상 학제개편은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1996년 김영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 시기를 거치며 논의되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만 5세를 기간학제에 포함할 것이 제안되었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박창현, 김근진, 윤지연, 2021).

2000년 이후, 유아교육 학제개편의 논리는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로 경제인구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자 경제계나 산업계에서 학령인구를 모두 한 살씩 낮추는 경제적 접근 속에서 제기되어 왔다(박창현, 김근진, 윤지연, 2021). 유아발달 단계나 유아교육의 시각이 아닌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에 맞춰서 그에 대한 타당성, 우리 사회에서의 저출산 현상을 유아교육체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어왔다고 볼 수 있다(박창현, 김근진, 윤지연, 2021).

교육부는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가책임교육 강화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하였고(교육부, 2022. 7. 29), 학제개편 및 유보통합 정책의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모든 아이들의 성장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할 것을 제안하였다(교육부, 2022. 8. 9). 이를 통해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교육책임을 확대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교육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22. 7. 29),

또한 교육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단을 설치하여 교육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 등에 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며, 만0-2세에 대해서도 교육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22. 7. 29),

이상의 정부 정책은 만 5세 초등 취학 철회의 대안으로 마련되었으며,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만 5세 초등취학 철회의 대안으로 유아의무교육, K학년제, 유보통합연계 의무교육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이상의 대안들을 논의하고, 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정책 제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만 5세 초등취학 문제는 철회되었으나 여전히 K학년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유치원 마지막 단계 무상교육과 초등 취학전 기초학습준비반(홍후조, 2022)에 대한 논의, 입직연령 하향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 중이다.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는 만 5세 초등 취학 철회를 요구하는 단체 및 국민들의 요구로 일단락되었으나, 여전히 정책의 창이 열려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될 주제로 보여진다.

이런 맥락에서 만 5세 초등취학 철회의 대안으로 제안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관련 정책에 관한 국민 및 학부모, 정책핵심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새 정부가 제시한 영유아단계 국가교육책임제의 쟁점을 학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 쟁점에 대한 부모 및 국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대안과 정책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국민/학부모 의견을 파악하고 정책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강화와 유·초등 시스템 개편의 관점에서 학제개편에 관한 문헌 분석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강화와 유·초등 시스템 개편의 관점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문헌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학제개편의 개념, 정책의 배경과 흐름, 쟁점 등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영유아 학제, 무상의무교육정책 개관, 관련 법제도 및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 소셜 빅데이터 조사와 부모 의견 조사, 정책토론회를 통한 정책 요구 분석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소셜 빅데이터 분석, 부모의견 조사,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첫째,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정책의 감성분석, 관련어 분석을 실시하여 여론에 나타난 국민들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 의견을 분석하여 정책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정책토론회를 통해 학계, 행정가, 현장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쟁점과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다. 유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국가책임교육 강화방안의 방향과 전략 제시

유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국가책임교육 강화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조사

연구 설계 및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영유아대상 학제개편 관련 정책의 배경, 법 제도 및 통계 현황 정리를 통한 학제개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책연구기관 정책연구보고서, OECD 등 해외 자료 분석,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설문조사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에 관한 온라인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치원, 어린이집 부모 각각 500명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효표본 987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대해 양적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소셜 빅데이터 조사

학제개편, 만 5세 초등취학, 유아의무, 무상교육 등에 대한 국민 여론 분석을 소셜 빅데이터 조사 방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학제개편, 만 5세 초등취학 및 정책 대안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책 관련 관심도 및 버즈량 추이, 연관어 분석을 통한 여론 동향파악, 정책에 대한 긍·부정 요인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건수에 기반해 트렌드와 이슈를 확인 가능한 문서량 추이 분석과 특정 주제에 대한 긍·부정 키워드를 바탕으로 성향을 파악하는 감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언론 및 맘카페 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 또는 국민들의 정책적 요구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예산과 시간적 한계를 반영하여, 2022년 만 5세 초등 취학 및 이후 사후 정책에 대한 집중 분석하였다.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연구 수행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현장 전문가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 진행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마. 정책 토론회 실시

본 연구에서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의제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2022년 11월 11일, 대한교육법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 겸 정책토론회의 형식으로 ‘영유아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학자, 행정가 등이 함께 모여 해당 정책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 특히 영유아단계 국가교육책임제와 관련된 여러 안건과 쟁점에 대한 법적 접근에 중점을 두고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그림 I-3-1] 정책토론회 유튜브 화면



자료: 토론회 유튜브 주소 육아정책연구소 KICCE: <https://www.youtube.com/watch?v=Tq13sZuTQwk>

[그림 1-3-2] 정책토론회 포스터

육아정책연구소 KICCE 5차 정책토론회

대한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

영유아 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 방안 모색

주최 | 대한교육법학회 · 육아정책연구소

2022. 11. 11.(수) 11:00~18:00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영상회의실(유튜브 방송 동시 진행)

유튜브 채널 육아정책연구소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33G4GX9rLe53_X25tpeSvg

프로그램

시간	발표 및 내용
11:00~12:00	【개인연구 발표】 사회 박신욱 경성국립대학교 교수 주제 : 최근 교육법의 동향 발표자 : 박남기 광주교대, 황홍규 서울과기대, 전지수 한국외대, 조원용 중앙선관위, 권영태 한양여대 ESG연구소, 박호근 한국체대
13:00~13:30	【등록】 등록 및 온라인 접속
13:30~13:50	【개회식】 사회 장승혁 한국고충 교원정책국장 ■ 개 회 사 하운수 대한교육법학회장(부산시교육감) ■ 환 영 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축 사 강인수 대한교육법학회 명예회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13:50~15:00	【제1부】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 사회 노기호 군산대 교수 [1 주제]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 영유아학교 체제 실현 방안 : 무상/의무,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발표자: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호근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前 서울시의원) 지혜진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준비팀장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15:00~17:00	【제2부】 주제 발제 및 집담회 사회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대주제] 영유아의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2 주제]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법적 검토 발표자: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3 주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법적 과제 발표자: 박해경 前 전남도청 인권보호관 토론(소주제별 발표): • 윤달현 대한교육법학회 ▶ 영유아 학부모의 교육·보육 기관 및 내용 선택권 등에 대한 법적 검토 • 황홍규 서울과기대 ▶ 유보통합 등의 정책적 검토 • 전지수 한국외대 ▶ 유아 의무교육 도입과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법적 검토 • 박신욱 경성국립대 ▶ 사립유치원의 상속 증여 및 양도 등에 대한 법적 검토 • 김법원 고려대 ▶ 유보통합에 따른 소관부처 이관 시 주요 법률 개정 사항 검토 • 김 용 교원대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및 신분 등에 대한 법적 검토 • 하봉은 경기대 ▶ 영유아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검토 질의응답
17:00	학술대회 폐회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영유아단계 국가교육책임제

본 연구에서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은 모든 아이의 성장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는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교육을 중심으로 실행하고 더 나은 교육과 돌봄 체제로의 개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 학제개편

본 연구에서 학제개편은 현행 6-3-3-4제의 형태의 기간학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의미하며, 특히 유아교육 영역에서는 5세, 4-5세, 3-5세로의 기간학제의 확대를 의미한다.

다. 만5세 초등취학

본 연구에서 만5세 초등취학은 2022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입학 연령 하향화 정책으로 만5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으로 의무교육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교육책임제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기존 만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여 1~3월생, 4~6월생 등 만 5세를 출생 월에 따라 4구간으로 나눈 뒤 4년에 걸쳐 입학 시기를 당기겠다는 것이나, 토론회 및 연구들에서 국민들과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다루며(장명림, 2006; 육아정책연구소, 2022), 발달, 절차, 재정 상의 문제 등으로 반대되어 폐기되었다.

라. K학년제와 유아의무교육

첫째, K학년제는 영유아 교육 및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제도로, K는 유치원

(Kindergarten)의 알파벳 앞글자에서 따온 것으로 유치원 연령대에서부터 의무교육을 시행해 취학 전 단계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다만, K학년제는 유아의무교육과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계는 K학년제를 반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은 찬성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무교육의 의미는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로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6-3-3-4제를 기간으로 하는 정규학교를 확대하여 유아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무교육은 의무교육 대상아동의 완전취학¹⁾을 근본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무상교육의 형태를 취한다. 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교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완전무상교육을 전제로 한다.

마. 유아무상교육

본 연구에서 유아무상교육의 의미는 유치원 정규교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는 유아교육을 의미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유아무상교육을 완전무상교육, 전면무상교육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현재는 부분 무상교육이나, 교육부로 유보통합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는 유아 공교육체제를 만들어 학부모가 체감하고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교육 시스템의 기초적인 의미로 유아 무상교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바. 유보통합/유보일원화

본 연구에서 유보통합은 유보일원화와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만3-5세 대상의 유아교육의 기간학제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 소관의 유아학교 체제로의 일원화를 의미한다.

1) 완전취학(Full enrolment)은 이 OECD지표(2020)에 한 해 90%를 초과하는 취학률을 의미한 것으로 정의

5.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본 연구의 범위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에서 학제개편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와 관련된 키워드들인 국정과제 유보통합, 만 5세 초등 취학, K학년제와 유아 의무교육, 유아무상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국가책임교육은 문제인 정부에서도 사용하던 용어이므로, 추후 윤석열 정부의 국가책임교육을 국정과제인 유보통합과 함께 차별화된 개념적 정리가 필요하며 정책의 목표 설정을 보다 분명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보고서에서는 영유아 국가책임교육에 관한 국민 및 학부모 의견 조사에 중점을 두어 교직원 등의 의견을 예산 등의 한계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관련 정책의 법적 쟁점을 다루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부모는 영유아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고려하는 양육자이므로 부모의 의견은 곧 영유아의 의견과 같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보통합, 학제개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부모들이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정부의 정책 홍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설문조사의 결과는 현재 부모와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에 주 목적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 이에 전문가들의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과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로드맵과 정부가 안정성을 가지고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 국민들 또는 부모들의 인식은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준비, 유초연계 부분도 일부 다루었는데 이는 K학년제나 유아의무교육과 관련된 키워드기 때문이다. K학년제와 유아의무교육에는 국가책임의 의미도 있으나, 학부모의 관점에서 초등학교로의 부드러운 전이, 학습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용어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연구의 내용에 포함하였다.

6. 선행연구

가. 유보통합/유보 일원화

유보통합(이하 유보 일원화)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근거법령과 관할부처, 교사 자격 및 양성, 신분, 근무조건, 교육과정, 시설기준 등을 통합함으로써 동일 연령의 영·유아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일주, 2016)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연구들을 통해 그 시사점이 중요하게 조명되고 있다. 박창현·김근진·윤지연(2021)은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무상·의무교육으로써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박은혜·장민영(2014)은 8개 국가를 중심으로 유보통합 요소별(행정체계, 접근성 재정, 교육과정, 법, 교원, 기관) 통합 현황을 문헌연구로 비교하였고, 공병호·최인화·한유미·김현정(2019)은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 및 통합 시스템 연구에서 유보통합추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스웨덴과 뉴질랜드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한편,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을 기준으로 유보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김수향, 임경심, 홍혜경; 2014; 고가은, 2019)를 실시하여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표 I-6-1〉 유보통합/유보 일원화 관련 연구

저자	제목	내용
박은혜, 장민영 (2014)	한국과 OECD 국가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환경과 효과 분석: 재정,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및 가정 환경을 중심으로	- 8개국 중 6개 국가의 유아교육·보육이 교육부의 행정 체계 아래에 관리되고 있음 - 무상교육체제 아래에 원비 상한제가 적용될 때,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게 나타남 - 모든 기관 유형에 국가재정이 갈게 지원되는 국가는 7개국이었으며, GDP 대비 유아교육·보육예의 지출은 덴마크와 스웨덴(1.4%)이 가장 높게, 일본(0.4%)이 가장 낮게 나타남 - 6개 국가에서 교육부 관리하에 의무교육 시작 전까지 영유아에 대한 일원화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함 - 교육부의 일원화된 행정체계 하에 유아교육·보육이 관리되는 7개국은 일원화된 법령을 갖추고 있었음 - 영국을 비롯한 4개국에서 유아교육 담당교사의 자격기준을 초등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뉴질랜드를 비롯한 4개국은 유아교육·보육담당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함

저자	제목	내용
		- 유아교육·보육이교육부로 일원화된 6개 국가 중 3개 국가에서 연령통합형 기관 유형이, 나머지 3개국에서는 다양한 기관 유형,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연령에 따라 이원화된 기관 유형을 적용하고 있었음
공병호, 최인화, 한유미, 김현정 (2019)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 및 통합 시스템 연구	-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학력, 경력, 처우 등의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의 문제는 유보 일원화 정 책을 통해 지원체계를 통합하여야 해결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음 - 평가와 질관리의 측면에서도 특별한 점검이나 감사, 평가 위주가 아니라 일상적인 질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영유아와 교사의 권리보장의 관점도 평가에 반영되어야 함 - 우리나라와 같이 외부지표와 기준에 맞추는 평가보다는 보육교직원 스스로 성찰하고 지속적인 발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평가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김수향, 임경심, 홍혜경 (2014)	유보통합 교사양성체제에 대한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 간 인식비교	- 영유아보육기관의 교사들을 양성할 때에 일원화되고 전문화된 양성기관 및 양성학과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함 - 유보통합과 관련한 방향설정 및 제도를 마련할 때 그 서비스의 질, 교사로서의 자긍심·보수교육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인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고가운 (2019)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의 통합(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인식 연구	- 유보통합 과정에는 이원화 체제에 대해 교사 및 학부모가 상반된 의견을 띄고 있음 - 행정적 효과, 수요자 혜택만으로는 이원체제의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어려움 - 정부가 유보통합과 갈등 수준을 완화시키고,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전달방식을 통해 유보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행정과정의 효율화나 아동 서비스 질 향상에 집중하여 전달해야 함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 (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 유보통합/유보일원화에 대한 내용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리 - 무상·의무교육화를 통해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를 개편시켜야함 - 유보통합으로 공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확대해야하며 합법적인 지원체계 정비 필요함

자료: 1) 박은혜, 장민영(2014). 한국과 OECD 국가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환경과 효과 분석: 재정,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및 가정 환경을 중심으로.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5(2). pp. 79-103.

2) 공병호, 최인화, 한유미, 김현정(2019).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 및 통합 시스템 연구. 한국생태 유아교육연구소.

3) 김수향, 임경심, 홍혜경(2014). 유보통합 교사양성체제에 대한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 간 인식비교. 유아교육연구. 32(3). pp. 379-400.

4) 고가운(2019).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의 통합(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인식 연구. 인문사회21. 11(6). pp. 17-32.

5)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나. 무상/의무교육

의무교육은 대상아동의 완전취학상태를 근본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무상교육의 형태를 취한다. 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교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완전무상교육을 전제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창현, 김근진, 윤지연, 2021).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 또는 보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는것에 있다(대한교육법학회, 육아정책연구소, 2022).

유아 무상·의무교육정책은 1994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1997년 법제화되어 1999년 저소득층 가정의 만 5세를 대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2013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으로 시행하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대상이 소득과 상관없이 만 3~5세로 확대되었다(나정, 2014). 이 시점으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으로의 목적이 강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유아 무상·의무교육은 재정지원과 교육·교사의 질 측면에서 그 논의가 주로 다뤄지고 있다. 김진석(2016), 하봉운(2016)은 재정 변천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서영인·김병주·안종석·김정훈·하봉운(2020), 김병주(2011)는 유아교육의 재정 지원이 여러 가지 이점을 설명하여 재정확보의 중요함을 보고하였다. 한편, 이덕난(2017)은 무상지원과 관련한 법의 규정을 검토하며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한교육법학회, 육아정책연구소(2022)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유보통합, 유아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은 물론 재정지원, 법령의 정비까지도 논의하였다.

〈표 I-6-2〉 유아 무상·의무교육의 관련 연구

저자	제목	내용
김병주 (2011)	만 5세 무상교육을 위한 비용 추계	-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투자의 효과가 유아기에 크다는 Heckman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유아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감소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함
김지원, 남수경 (2020)	유아교육재정 확보제도의 변천과정과 초·중등교육비에 대한 영향 분석	- 누리과정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완전한 국가 책임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가 보인다고 보고함

저자	제목	내용
김진석 (2016)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무상보육으로 인한 갈등은 해마다 그주체를 달리하며 계속되어 2013년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 2014년은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함 - 결국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0~2세 무상보육을, 시·도교육청이 3~5세 누리과정을 책임지 게끔 하였음을 보고함 - 무상 교육·보육 정책의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이 이루어 지는 것이기에 이를 의무지출항목으로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함
하봉운 (2016)	유아무상교육보육 (누리과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에 대한 예측 실패로, 2014년 누리 과정비 증가액이 교육부의 교부금 증가액을 초과하면서 교육 재정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추가 재원에 마련에 대한 중앙정부 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보고함
이덕난 (2017)	이명박 정부 누리과정 무상지원 정책에 대한 합리성 검토: 유아교육·보육 공통과정 (누리과정)의 명칭과 목적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무상지원과 관련한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검토함 -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도입목적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합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서영인, 김병주, 안종석, 김정훈, 하봉운 (2020)	교육재정 종합 진단 및 대책 연구	- 소득계층에 따라 유아교육비 지출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상황 에서 가구 소득과 상관 없이 보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 는 것은 그 의미가 크며 학교 준비도에 도움을 주는 유아교육 을 통해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봄 - 현재의 무상교육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함
대한교육 법학회, 육아정책 연구소 (2022)	영유아 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 방안 모색	- 교육·교사의 질, 재정지원의 정도, 관리주체의 통합이 유보통 합에서 가장 고려해야할 요소임 - 현재 교부금 사용의 방향성을 지적하였음 - 국가가 개인으로 그 책임으로 돌리면 안되는 점을 지적, 출산 율을 올리고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위한 방법이 유보통합이 라는 의견이 제시 -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동과 보호자들 에게 교육 및 보육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무상교육의 범위를 정비하고 학교제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 기위한 관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특히 동시에 특수교육대 상자에 대한 의무교육도 조화롭게 다루어 져야함

- 자료: 1) 김병주(2011). 만 5세 무상교육을 위한 비용 추계. 교육재정경제연구. 22(3). pp. 205-221.
 2) 김지원, 남수경(2020). 유아교육재정 확보제도의 변천과정과 초·중등교육비에 대한 영향 분석. 교육정치학 연구. 27(3). pp. 165-187.
 3) 김진석(2016).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4) 하봉운(2016). 유아무상교육보육(누리과정). 교육비평. 37. pp. 19-36.
 5) 이덕난(2017). 이명박 정부 누리과정 무상지원 정책에 대한 합리성 검토: 유아교육·보육 공통과정(누리과정)의 명칭과 목적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pp. 93-121.
 6) 서영인 외(2020). 교육재정 종합 진단 및 대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7) 대한교육법학회, 육아정책연구소(2022). 영유아 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 방안 모색. KCCE정책토론회집.

다. 학제개편

학교제도(학제)는 국가 교육제도의 하나로서, 국가의 교육목표를 실현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의 단계와 계통에 따라 교육의 목적, 교육기간, 교육내용, 취학연령 등을 구분하는 이른바 학교간의 종적 연결 구조와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의 기능을 계열 간·학교 간으로 이어주는 횡적 연결 구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김홍주, 양승실, 김순남, 박승재, 이쌍철, 이성희, 김갑성, 류성창, 김은수, 2006).

학제개편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들이 교육체제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최근 미래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됨에 따라(임후남, 김진숙, 심연미, 2021), 현 학제를 목표와 내용, 방법 등의 세부적인 변화,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교체제로의 전환까지 요구되는 개념이다(김홍주 외, 2016).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참여정부에서 ‘학제개편’논의를 시작하면서부터 관련한 학제개편 연구들(김영철, 박재운, 김홍주, 윤종혁, 김태은, 2006; 박재운, 양승실, 윤종혁, 김태은, 김성기, 김용남, 황준성, 박진아, 2007; 김성기, 김현자, 황준성, 2019)이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후부터 단선형 학제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유아교육과 평생교육의 강화를 위해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긴 기간 하나의 학제로 운영된다는 경직성에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교육혁신위원회, 2007).

정부의 논의는 김영삼 정부의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교육국제화 대비방안으로서 9월 신학기제 검토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정부가 학기제 개편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여 관련 논의에 물꼬를 트여준 것이라면, 노무현 정부는 2011년에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학기제 변경을 검토했다(김기식, 박선나, 2019). 노무현 정부 당시 학기제 개편을 논의하면서, 현 학제가 개인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부적합함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는 학제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영어교육 강화,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등 중산층의 교육욕구를 반영하려 했으며 교육에 시장논리를 적극 도입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를 차별성으로 두는 교육정책을 시도했다(조상식, 2008). 이어 박근혜 정부는 교육정책은 무상교육의 확대, 초등학교에서의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자유학기제 시행 등을 공약으로 세워 학제에 대한 변화를 추진하며 정부는 개편 논의를 이어왔다. 올해 윤석열 정부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극복,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며 그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행 학제의 논의는 교육의 유연성과 학제의 개방성이 확보되고, 교육체제 내에서 학생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는 연계성을 가져야한다는 논의를 다루고 있다.

〈표 I-6-3〉 유아교육 학제 개편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연구자	분류	내용
장명림 (2006)	유아교육 학제 논의	• 필요성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조기 실현을 위한 -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유아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 필요 -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 필요 • 주요 쟁점 - 유아교육 학제화의 의미 - 만 5세 취학연령 하향화 논의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문제
문미옥 (2006)	유아교육체제의 변화 전망	• 배경 - 영유아기 인구의 격감 - 여성 사회 참여율 증가 - 평생교육의 하향적 확대 - 유아교육의 공교육 제도 완전 확립 전망 - 초등학교 조기 취학자 지속적 감소 및 취학 유예 증가 - 정부의 유사중복기능 통합에 의한 효율성 및 지원체제 정비강화 - 유아교육기관의 책무성 강화 -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유아교육제도 확립 - 일제 잔재의 청산을 위한 명칭 변경의 필요 • 발전 과제 - 유아교육제도의 개념 범주에 '보육' 개념 채택 - 유아교육의 공교육 확립 - 보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 간 연계성 강화 -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의 변경 -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의 조정 - 유아교육·보육의 일원화체제로의 개편 - 학제에 '유' 단계를 포함한 개편 - 초등학교 취학연령: 단력적 시행 - K학년제 논의 폐지
이수광 (2014)	영유아기 학습복지	• 영유아기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학습 전 영역에 걸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필요

연구자	분류	내용
정미경 (2017)	수업연한 조정 논의	- 필요성 - 수업연한: 아동발달수준이 고려되지 않음 - 낮은 입직연령과 빠른 퇴직연령: 인적자원 활용의 미흡 - 논의 - 수업연한 조정은 막대한 비용과 조정기 학생의 불이익 및 사회적 혼란이 예상됨. - k-5학제, 5-5-2-4제, 5-4-3-4세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
강지원 외 (2021)	유아교육·보육 체계 개편 논의	- 유아교육 및 보육 체계의 이원화, 복잡한 지원 체계 - 예산 편성의 어려움, 불투명한 예산 활용 기능성 - 향후 공급 계획 수립의 어려움 - 유아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 시설유형 및 운영주체에 따른 격차 발생
최은영, 차기주 (2021)	유아교육·보육 논의	- 지역별 공적 인프라 격차: 지역에 따른 국공립 기관의 접근성에서 격차를 보임, 유아교육·보육 무상지원의 수준 및 부모부담 비용에서도 격차를 보임 - 영유아 교육기관의 질 관리 및 모니터링 부족, 정부 재정의 투입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 부족 - 유아교육·보육 재정지원의 안정성 논란: 누리과정 재정지원 주체에 대한 논란, 유아학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의 역할, - 유아교육·보육 이원화로 인한 갈등 및 단절로 인한 집행의 어려움
김경애 외 (2022)	유아교육 주요 쟁점	- 유아교육 단계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를 받아 안정적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함 - 교육 불평등 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의 유아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강화되어야함

자료: 1) 장명림(2006). 미래형학제개편과 유아교육학제논의. 육아정책연구소.
 2) 문미옥(2006). 유아교육체제의 변화 전망과 학제 발전과제 토론문. 교육체제변화전망과 학제. KEDI.
 3) 이수광(2014). 행복교육을 위한 공공교육의 새로운 프레임, 2014년 제1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행복교육 현장 토론회 자료집.
 5) 정미경 외(2017).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6) 강지현 외(2021). 돌봄 추진체계 중장기 개편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7) 최은영, 차기주(2021).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유형별 주요 의제 분석: 7. 유아교육 및 보육 공공성 강화와 질 제고. 한국교육개발원.
 8) 김경애 외(2022). 더 나은 삶으로서의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만 5세 초등취학에 대한 논의 역시 연구와 토론회에서 계속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개편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며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함, 절차적 정당성이 설명되지 못함이 주요 반론이다. 한편, 만 5세 초등입학은 대부분의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경제인구 부족을 대비하고자 제안해왔다. 결과적으로 이 제안들 역시 여러 단체에서 과도한 비용·아동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음을 이유로 반대되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초등 조기입학자가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유예 및 과령아동은 2014년에 증감이 있었으나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 현재 부모들에 의해서도 선택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6-4〉 만 5세 초등취학 연구 및 토론회 논의

저자	제목	내용
장영희 (2005)	유아를 위한 바람직한 학제개편의 방향 (현안 진단을 위한 유아교육 정책 토론회)	- 만 5세 취학은 유아가 학습에 대한 부담과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놀이와 활동중심의 유치원 교육 보장 혜택이 이어지기 어렵게 되는 것임. 따라서 유아의 발달이 문제라면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되어야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임
장명림 (2006)	미래형 학제 개편과 유아교육 학제 논의	-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함 - 초등 조기입학 허용됨에도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입학 유예자는 증가하는 상황
장명림 외 (2011)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 체제 개편 연구	- 양육비 부담 경감의 가능성이 있으나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함 - 양육부담 경감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한다고 예상하나 초등돌봄 기능 미흡의 의견이 존재, 연구결과와 미흡 - 입직연령 인하효과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효과에 대한 결과 미흡
정미경 외 (2017)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	• 필요성 - 늦은 사회진출을 취학연령 하향조정으로 확충하려함 - 만 6세 아동들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조기초등입학의 목적을 가지려함 • 논의 - 아동발달수준이 높아짐이 만 5세 취학을 가능하게 할만큼 타당하지 못함,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아직 발달시기임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교육계는 유아의 초등학교 학습 준비도 및 능력 부족, 초등학교 생활 적응 능력 부족이 제시함 - 조기 산업인력 확충이 일자리를 확실히 보장할만큼의 근거가 되지 않음
만5세초등 취학저지를 위한법국민 연대, 국회 (2022)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 문제제기 -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아동들에게 평등한 교육 제공을 위함 • 논의 - 시대역행, 실현가능, 학부모 니즈 파악의 문제 - 절차적 정당성 문제 - 아동의 발달특성 고려의 문제, 영유아의 과도한 조기교육 노출우려 - 교육철학·교육과정 전문성, 교육격차에 부합성 문제

주: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의 내용을 재구성함.
 자료: 1)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법국민연대, 국회 (2022).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2) 장영희(2005). 유아를 위한 바람직한 학제개편의 방향.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L
 3) 장명림(2006). 미래형 학제 개편과 유아교육 학제 논의. 육아정책연구소.
 4) 장명림 외(2011).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 체제 개편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5) 정미경 외(2017).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II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의 배경 및 정책 현황

01 국내외 현황과 정책의 흐름

02 관련 법령

II.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의 배경 및 정책 현황

1. 국내외 현황과 정책의 흐름

가.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과 유보통합

만 5세 입학연령 하향화 정책 철회 이후, 교육부(2022.8.9.)는 학제개편과 유보통합 관련 향후 추진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모든 아이의 성장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출발선 단계 국가책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교육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는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교육부, 2022.8.9.).

또한 교육 중심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유치원 어린이집 모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만0-2세에도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에 집중하게 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과정 개선, 돌봄 환경 조성 등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즉, 더 나은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로의 개편을 고민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흐름은 보다 구체화 되어 2023년 교육부의 주요업무추진계획(2023. 1. 5.)에 반영되었다. 교육부의 주요 업무추진계획의 부제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국가교육책임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교육부, 2023:1). 교육부는 국가교육책임 실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보추진 준비팀(‘22.9.14.)을 발족하고 유보통합에 필요사항을 분석해왔으나, 교육개혁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고, 교육주체와의 수평적 파트너십 기반 구축

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23:1).

정부는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기를 직면하여, 교육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업무추진의 방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에 두고 추진과제와 비전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3:2-3).

[그림 II-1-1] 교육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추진 과제 및 추진 체계(2023.1.5)



자료: 교육부(2023. 1. 5).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p. 3.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관련 내용은 정부의 핵심추진과제 중, 가정맞춤의 영역에 담겨 있으며,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공정이라는 기치 하에,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질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과 돌봄에서의 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축하고, 2026년까지는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완성할 것을 기획하며 큰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가정맞춤에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추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늘봄학교가 초등 돌봄의 영역이라면, 현 정부의 영유아단계 교육개혁은 ‘유보통합’ 정책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유보통합 정책은 현 정부의 영유아단계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인 것이다.

[그림 II-1-2] 교육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핵심추진과제 (2023.1.5.)

② [가정맞춤]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방향	모든 아이를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과 돌봄에서의 격차 해소 로 출발선 공정 보장
목표	2023년에는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4개 교육청 늘봄학교 시범운영
	→
	2026년까지 유보통합 단계적 완성 늘봄학교 전국 확대

1 교육개혁 ④ 유보통합 추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하고, 교부금 등을 활용해 **교육의 질 제고**

※ 관계부처 합동 ‘유보통합추진단’ 및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설치(‘23.1월)

로드맵	1단계(‘23~‘24) : 격차해소, 기반마련	→	2단계(‘25~) : 통합 본격 시행
학부모	단계적 교육·돌봄 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교사	처우 개선, 자격·양성 체계 개선방안 마련		개편된 자격·양성과정 적용
시설	안전한 환경 조성		시설 기준 개선안 적용
조직	교육 중심의 중앙·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지원
재정	재원(유특회계·국고·지방비) 통합		통합된 재원으로 운용
법령	관련 법률 일괄 제·개정(‘24)		제·개정 법률 시행

-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관리 체계 통합방안**’(‘23.상) 및 ‘**어린이집 유치원 간 격차 완화방안**’ 마련(‘23.하)

※ 유보통합 기반 조성 계획을 담은 ‘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 수립(‘23.2월)

자료: 교육부(2023. 1. 5).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p. 6.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보통합추진단 및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을 재설계하고, 교부금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교육부, 2023: 6). 이에 대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 1단계는 '23-24년에 격차 해소, 기반 마련 단계, 2단계는 '25년 이후에 통합 본격 시행으로 나누고 있다. 1단계에서는 단계적 교육, 돌봄 부담을 완화(학부모), 처우개선, 자격 및 양성체제 개선방안 마련(교사), 안전한 환경 조성(시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에 접어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개편된 자격과 양성과정 적용, 시설기준 개선안 적용 등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교육부, 2023: 6).

이를 위해 1단계에서 조직은 교육 중심의 중앙,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재정은 재원 통합, 법령은 관련 법률 일괄 제개정을 목표로 하고, 2단계에 접어들어서는 조직은 일원화된 관리체제로 지원, 재정은 통합된 재정으로 운용, 법령은 제개정 법률 시행을 하고자 한다(교육부, 2023: 6).

2023년 상반기에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하반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완화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의 계획은 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에 담아 2023년 2월에 수립, 공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교육부, 2023: 6).

이상의 유보통합의 정책이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의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약 30여년 간의 관련 정책의 흐름이 있었고,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유보통합 정책의 창이 현 정부에 열리게 된 것은 지난 수십년간의 수많은 정책적 논의, 공약과 국정과제로 연결되는 정부의 노력으로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껏 논의되어 온 유보통합의 목적도 영유아기에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자는 정책 아이디어에서 제기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도 고민해 온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전세계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논의하고 실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국가의 맥락에 알맞게 이원화를 유지한 국가도 있고, 통합한 국가들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유보통합 정책이 무르익지 않은 사회적 상황, 교육기회 및 지원, 절차상의 문제, 학부모 부담 등 차이 등의 문제를 유보간 좁히지 못하고, 지금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벌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이정옥, 류승희, 임수진, 2018). 지금까지의 유보통합 정책의 흐름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흐름도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표 II-1-1〉 유보통합/유보 일원화 정책의 흐름도

구분	내용
출발	- 유치원 : 만3-5세 중산층 자녀 교육기능. 1949년 제정 "교육법" 근거, 교육부 관할 - 어린이집 : 만 0-5세 취업모 자녀 보호기능으로 출발. 1991년 제정 "영유아보육법" 근거, 보건복지부 관할 ※ 두 기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근본 원인, 만3-5세 유아 중복지 관리 부처 간 갈등
김영삼 정부 (1993-1998)	1995년 5·31교육개혁안 발표 ⇒ 기존 교육법(1949년 제정)을 교육기본법, 초·중·고등학교법, 고등교육법의 교육3법 체제로 개편안 추진 1996년 "국민학교 취학전 1년 만 5세 무상교육 추진 범국민연대"(18개 단체, 상임공동대표 임재택)에서 유치원 만5세 무상교육 도입 요구 1997년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31개 단체, 상임공동대표 임재택) 결성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3-5세를 유아학교로 통합 추진,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제 정비 요구 1997년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방안 발표 및 유아교육개혁특별추진위원회 구성 ⇒ 결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입장 차이로 무산 1997년 12월 초·중·고등학교법 제정, 유아교육진흥법 개정, 만5세 순차적 무상교육 규정
김대중 정부 (1998-2003)	- 유보통합 일원화 및 유아교육법 제정 공약 발표 ⇒ 공약 불이행 2000년 교육부장관 자문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결성 - 유아학교 체제구축을 위한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 발표(2000) - 유아교육법안 정부 입법, 유아교육발전계획 마련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 추진 - 보육계와 여성계 반대로 유보통합 무산
노무현 정부 (2003-2008)	- 유보통합 일원화 및 유아교육법 제정 공약 발표 ⇒ 공약 불이행 2000년 교육부장관 자문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결성 - 유아학교 체제구축을 위한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 발표(2000) - 유아교육법안 정부 입법, 유아교육발전계획 마련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 추진 - 보육계와 여성계 반대로 유보통합 무산
이명박 정부 (2008-2013)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 보육업무 이관 2012년 3월 만5세 무상교육 시행 및 누리과정 고시 2013년 3-5세 무상교육 시행 및 누리과정 시행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비용부담 문제로 부처간 및 교육청-자자체간 갈등 심화 ⇒ 소위 "보육대란" 야기
박근혜 정부 (2013-2017)	-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발표(2013),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유보통합모델안 개발 유보통합 추진방안 확정 - 임기 내 완성을 목표로 단계적 추진

구분	내용
문재인 정부 (2017~ 2022)	- 정권 교체 : 유보통합 정책 중단, 유보격차 해소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어린이집 관리 전환 대선공약 추진 ⇒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강력한 반대 직면 2019.1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2018-2022) 제정 ⇒ 현 정부의 “보육대란” 해소를 위한 임기응변의 한시법 제정 시행 2021.09 사회서비스원 법률 제정- 보육 포함, - 현재 : 돌봄국가책임제(여성계-보육포함) / 유치원 ⇨ 유아학교간 발의 중(강득구의원실) ⇒ 기관 유형에 따른 격차 증가, 사교육비 증가, 영유아 교육 불평등 심화
윤석열 정부 (2022~)	2022. 07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국정과제 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주: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표 II-2-2>를 재구성함.
 자료: 1) 임재택(2021). 21세기 교육대전환의 첫걸음!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교육체제 구축 방안, 미래세대를 위한 영유아교육체제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2021. 11. 16), pp. 16-17.
 2) 제20대 대통령실(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p. 85.

나. 학제개편, 무상/의무교육

1) 학제개편

만 5세 초등취학 논의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가장 크게 대두되어 오고 있는 논의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육아 관련 부담 완화, 선진국에 맞춘 입직연령 설정을 위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하향화하려 하였다(이군현의원실, 2006). 그러나 당시 아동의 발달과 유아교육, 교원양성과 관련해 논란이 되었다.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OECD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며, 만 5세는 발달적 특징상 교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초교입학이 적절치 않고, 초등교사의 보육 업무가 늘어 부담이 되며, 학습 부담으로 오히려 유아기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군현의원실, 2006)이라는 논거를 들어 반대했다.

이명박 정부 또한 고령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단축하는 학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새누리당·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가 모인 당정 협의를 통해 초·중등 교육 연한을 현행 12년(6-3-3)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만 5세 취학도 제안되었으나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고, 아동들의 정서발달 특성

상 부적절하다는 여론으로 무산되었다(권새나, 2022; 대전일보, 2022; 세계일보, 2022).

2017년 학제개편안은 안철수 후보, 조희연 후보의 학제개편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안철수 후보의 학제개편안은 유아교육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동시에 의무교육기간으로 포함시키며, 초등교육기관인 초등학교를 만 5세에 시작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유아교육을 2년으로 줄이는 것은 초등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입학연령을 현재보다 1년 앞당기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당시 학제개편안들은 현 학제의 비효율성, 여러 형태의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의 교육기관과 상호 연계 결여, 미래교육·산업 및 노동시장, 국제적 역량 비함양 등의 문제를 지적한 데에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학령을 앞당기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가져오면서까지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심지어는 조기 진급 및 졸업의 체제를 통해 일부 해소가능한 부분이 존재하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학제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김성기, 2017).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학제개편안은 취학전 만 5세 유아교육을 의무화하며 초등학교를 5학년제로 하여 수업 연한을 1년 단축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5-4-3(K-5-4-3)제를 제안했다. 만 5세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되, 중학교 과정을 1년 연장하여, 중4학년을 북유럽·영국·아일랜드의 갭이어(gap year)에 준하는 과정에서 착안한 ‘전환학년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고등학교는 현행을 유지하되,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하고 무학년·4학기제 운영을 제안했다. 안철수 후보와 같이 학제개편 취지를 동의하나 전면적인 학제개편보다는 현행 체제를 일정 부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다 현실적인 안 제시를 고려하였다(임재희, 2017).

이후 정세균 후보는 문재인 정권 당시의 학제개편 논의를 다루고 있다. 2021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해야함을 밝혔다. 학제개편에 관련해 변화된 시대, 아동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6-3-3학제를 4-4-4로 바꾸는 등 다양한 학제를 허용, 이어 만 5세 초등입학까지 제안했다.

올해 윤석열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과 만 5세 초등입학 방안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영유아 관련 단체 등을 통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

회(2022)에서 정책 강행의 문제, 유아의 발달 특성 및 부모 부담, 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OECD, 2021)이 만 6세 취학을 시작하는 데에 반하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적 정책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I-1-2〉 2000년 이후 학제개편안 및 만 5세 초등취학 제안 논의

구분	학제개편안	핵심내용	세부내용
1951	제1차 교육법상 학제개편안	6-3-3-4제 단선형 학제	
1987	교육개혁심의회 학제개편	유-5-3-4-4제 제안	
1996	김영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 학제개편	기간학제에 만 5세 포함 제안	무상교육 실시 법적근거 마련
2006-2007	노무현 정부 이인영 의원 학제개편안	만 5세 초등입학 제안	사교육 부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사회 입직연령 해소를 목적으로 하였음
2008	이명박 정부 학제개편안	만 5세 초등입학 제안	중산층의 교육욕구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교육에 시장논리를 적극 도입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차별화로 하였음
2014	박근혜 정부 학제개편안	만 5세 초등입학, 교육 연한 10년 제안	누리과정, 고등 무상교육 제안, 초등학교에서의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을 시도하였으며, 자유학기제를 확대하였음
2017	안철수 후보 학제개편안	(초등5)+5(중고교5)+2(진로탐색2) 제안	현 학제의 비효율성, 미래교육산업 및 노동 시장, 국제적 역량 비함양 등의 문제를 지적한 데에 의의를 가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제개편안	K+5+4+3, 논의 만 4-5세 의무교육, 기간학제 확대, 초등 5년 단축,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 설치, 0-3세 보육/4-5세 유아교육 이원화 방안 제안	개혁의 폭을 최소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제안을 고려함
2019	서울시교육청 2+5 정책 논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재정/복지계열	만 5세 초등입학, K-grade정책 제안	
2021	정세균 후보 학제개편안	만 5세 초등입학 제안 4+4+4	국가책임 강화와 다양한 학제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
2022	윤석열 정부 학제개편안	만 5세 초등입학 제안	국가책임 확대, 아동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할 목표로 함
개편에 대한 반론	주요 반론 : 사회적 혼란과 갈등, 절차적 정당성이 설명되지 못함,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 만 5세 초등입학에 대한 반론 : 영유아의 발달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글로벌 흐름 역행		

주: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의 내용을 재구성함.

이상의 논의에서처럼, 입직연령을 낮추어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관점에서 영유아단계 학제개편을 논의하는 경향이 한 축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논의의 한 축은 영유아의 학교준비도와 유초연계, 영유아단계 의무교육을 통한 공공성 강화에 대한 논의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입직연령을 낮추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하자는 관점에 대한 비판은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의 보고서에서 다루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초등과의 연계, 초등준비에 대한 논의에 보다 집중하고자 한다.

가) 취학 전 준비의 개념

유아교육 영역에서는 취학 전에 학교와 학습을 준비해야한다는 관점에 대해 이 중적 관점이 존재한다. 준비는 해야하지만, 또 준비를 위해 유아의 현재의 놀이와 삶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유아교육 영역에서 초등학교를 준비한다는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발달에 근거하고 있다.

취학 후 아동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생활은 아동의 전반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습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지표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학습준비도(Readiness to learn)의 개념은 아동들이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측정하여 아동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학습준비도는 학습적 지식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준비와 신체적 건강을 포함하며,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적응 등을 다루는 요인들이 포함되어있다.

〈표 II-1-3〉 학습준비도 척도

연구자	내용
이은혜 (1979)	• 학교준비도 검사도구 - 수개념: 수세기, 수의 위치 및 순서, 양적 개념 - 감각개념: 형태 및 색 개념, 지각운동 능력 - 사회적 반응: 신체 및 주변에 관한 기초 지식 습득,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 연상적 어휘: 단어의 의미, 연상 이해 능력, 일반상식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1991)	• The Dimensions of School Readiness - 신체 건강 및 운동 발달 - 사회·정서적 발달 - 학습에 대한 접근 - 언어 발달 - 인지 및 일반적 지식

연구자	내용
Murphey, Burns (2002)	• Ready Kindergartners - 사회 정서 발달: 또래 및 성인과의 상호작용, 정서표현, 분리 불안, 일과 적응 - 학습에 대한 태도: 규칙과 지시 준수, 주의집중집단 활동 참여, 적극성 - 문제해결력, 성인 자원 활용, 주도성, 호기심 - 의사소통: 의사표현, 지사요청-정보 이해, 대화 참여 -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이해력, 기억력, 식별력, 사고표현력, 상상력
박연정, 정옥분 (2008)	•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 단체생활태도: 기본생활습관 및 태도 - 정서교류능력: 자기타인 이해, 정서 표현 - 일상생활지식: 기초지식 - 학습활동능력: 문해력, 의사소통능력, 신체기능
방소영, 황혜정 (2015)	• 학교준비도 검사 - 지식: 일반적 지식, 언어적 지식, 수리적 지식 - 기능: 소근육 기능, 기초생활 기능, 표현 기능 - 적응: 활동 적응, 부적응 행동, 또래 적응, 환경 적응 - 성향: 학습 성향, 타인 이해 - 태도: 규칙 준수, 생활 습관

자료: 1) 이은해 (1979). 학교 준비도검사 표준화를 위한 조사연구.

2)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1991). The 1991 National Education Goals Report: Building a Nation of Learners. Washington.

3) Murphey, D. A., & Burns, C. E. (2002).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 Practice, 4(2).

4) 박연정, 정옥분(2008).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개발 연구. 인간발달연구. 15(1). pp. 23-47.

5) 방소영, 황혜정(2015).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검사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 53(1). pp. 29-47.

예컨대,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논의된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 보면,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해 체크리스트, 가이드북 등을 통해 적응 및 준비를 위한 다양한 기관들의 기여를 볼 수 있다. 발간물들에는 입학 바로 전날 준비 목록부터 학교 입학 후 생활에 대한 일상과 교육을 미리 배우고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1-4〉 취학 전 발달 지표

분류	내용
대근육 운동	• 공을 던지고, 잡고, 튕겨 차기 • 빠른 속도로 달리기 • 기어오르기 • 두 발로 물건을 뛰어 넘기 • 한 발로 균형 을 잡고, 서서 발끝으로 걷고, 강충강충 뛰기 • 다리를 바꿔가며 계단을 오르내리기 • 건너뛰기 및 뒤로 점프하기
소근육 운동	• 옷을 입고 벗기 • 큰 버튼 잡고 풀기

분류	내용
	- 수저를 사용하여 음식 먹기 - 연필(과 같은 도구)사용 하기 - 가위, 구슬, 퍼즐 등 작은 물건 다루기
의사소통	- 말하기를 좋아하며 단어 조합을 하지만 부족한 발음이 있을 수 있음 - 노래부르고 일상을 이야기함
인지능력	- 지시사항을 이해함 - 일의 순서를 알고 계획함 - 숫자와 문자의 대부분을 이해함 - 주제별로 대상을 정렬하고 분류함
사회적 및 정서적 기술	-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고 공유함 -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고 역할놀이를 함

자료: OTHC(2018). Developmental Milestones Before Starting School.

〈표 II-1-5〉 학교 가기 전 안내서

분류	내용		관련 도서
학교 준비하기	학교에 대해 생각하기	- 학교에 대해 말하기 - 학교 생활 연습하기 - 책 읽기	Read With Biff, Chip and Kipper: Let's Get Ready For School
	학교 생활을 위한 기술	- 이름 배우기 - 화장실 이용하기 - 옷 입기	
등교 준비하기	등교 전날 밤	- 모든 것(소지품, 유니폼 등)을 준비하고 다시 확인하기 - 학교에 대한 흥미유도하기	
	등교 중	- 충분한 시간을 남기고 학교에 도착하기 - 첫 등교 사진 찍기 (부모와)빨리 헤어지기	
	등교 후	- 아이가 매우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기 - 책가방을 확인하는 등 안내, 의사소통을 확인하기 - 노는 날 정하기(또래 아이 모임)	
교육과정	주요 학습 영역	- 의사소통 및 언어 - 신체 발달 - 개인의 사회적, 정서적 개발	Read with Oxford: I Can Read! Progress with Oxford: Number Problems
	특정 학습 영역	- 글 배우기 - 수학 - 세상 이해하기 - 표현 예술 및 디자인	
독서	Phonics (파닉스)	- 읽기 중심의 언어 학습법으로 아이들이 글자와 소리, 간단한 단어 읽기를 위해 - 조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	Read with Biff, Chip and Kipper: My Phonics Kit

분류	내용		관련 도서
	이해력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휘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지원하기 위함.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춤	Julia Donaldson's Songbirds: Usman's Books
	학교 도서	읽는 체계를 관리함. 매주 두 권의 책을 집에서 읽도록 함	
수학	EYGS (Early years outcomes,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1부터 20까지 숫자를 셀 수 있고, 많거나 적은 수를 알 수 있음 - 두 개의 한자리 숫자를 더하거나 뺌 - 반으로 나누기, 두배 등의 개념을 익힘 -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크기, 무게, 용량, 위치, 거리, 시간, 돈에 대해 이야기함 - 패턴을 인식하고 만들고 설명함 - 일상적인 물건과 모양의 특징을 탐구하고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설명함	- Read With Biff, Chip & Kipper: My Telling the Time Activity Kit - Oxford First Illustrated Maths Dictionary
	일상 생활과 연결한 수학	아이들의 이해와 계산을 돕기위해 숫자세기, 구슬, 블록과 같은 물건을 사용하도록 함	
	가정에서의 도움	- 시간: 서로 다른 일이 일어나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계를 읽음 - 계산: 물건이나 동물을 몇 개 혹은 몇 마리 보았는지 세어 봄 - 돈: 가게에서 비싸고 싸고를 포함한 이야기 하기 - 모양 찾기: 주변에서 원, 삼각형, 사각형 같은 모양을 찾음	
부모-학교의 연계	학업 참여	- 교과과정이나 학교 생활의 다른 측면에 대한 학부모 회의 참석 - 자녀의 숙제 돕기 - 일기를 들어 주기 - 등·학교 확인 - 학교와 소통하기	
	학부모의 밤	- 대부분의 학교에서 개최하는 부모-교사의 만남 - 아이에 대한 회의와 올해의 목표, 논의를 함 - 아이에게 학교의 생활을 묻고 교사에게 묻고 싶은 것을 질문, 학부모의 밤의 내용을 말해줌	

자료: Oxford(2018). Guide to Starting School. p. 2-7.

ECEC의 목표가 모든 유아의 발달, 보육 및 취학전 교육에 준비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에 있는 바 해외 국가에서 이를 위한 ECEC의 보편화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취학 전 교육 등록률이 꾸준히 증가 되어온 바, 2020년 대부분의 OECD회원

국에서 취학 1년전 교육에 완전 취학 상태를(90% 이상)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한국,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호주, 튀르키예의 5개국이 완전 취학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지만 2030년에는 거의 모든 국가가 완전 취학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취학 전 교육의 흐름이 완전 취학 상태로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국내에서도 해외의 유초연계 교육을 함께 살펴보아 국내의 교육을 보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OECD, 2022).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연계는 아동의 발달과 연속성, 취학 후 적응성 등을 이유로 그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현재 유초연계의 내용은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교육환경을 중심으로 연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유초연계 동향에서 통합교육 수업과 통합교육학교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져 이와 관련한 사례를 조사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유·초 연계교육과 관련하여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 초등학교 체제는 교육내용 및 방법, 환경, 운영방식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 급간의 원활한 전이를 위한 연계를 중요시하고 있다(장명림, 2014). 현 정부에서도 유·초 연계를 강조하고 있어, 유아교육분야에서는 현재 통합학교의 구성, 이음학교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나) 유·초 연계 동향

학교급간의 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속성에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두 학교급간의 연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유아의 원만한 적응 및 발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학제를 통한 유초연계교육은 통합학교(이음학교)를 통해서 고찰해볼 수 있다. 통합학교(이음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급이 다른 두 개 이상 학교가 인력·시설·기자재 등을 통합해 운영하는 모델이다. 1997년 교육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된 후, 주로 농산어촌 학교로부터 시작해 전국 100여개가 통합학교로 운영 중이다(교육부, 2020). 중·고등 통합학교를 제외한 초·중 포함 통합학교 중 유치원을 포함한 유·초·중 통합학교는 5개교에 불과하다.

〈표 II-1-6〉 유·초·중 통합학교 운영 현황

지역명	학교명	비고	지역명	학교명	비고
서울 2개교	강빛초·중이음학교	유초중	전북 7개교	선장초·선도중학교	
	해누리초·중이음학교			미산초중학교	
인천 6개교	연평초·중·고등학교	유초중		선유도초중학교	
	청호초·중학교			금구초중학교	
	경연초·중학교			송풍초·용담중학교	
	덕적초·중·고등학교			부남초중학교	
	대청초·중·고등학교			운암초중학교	
	서도초·중·고등학교			구림초중학교	
경기 9개교	양성초중학교		전남 6개교	안천초·중·고등학교	
	목동초·기평북중학교			화정초·여수개도중	
	양감초중학교			원촌초·구례산동중	
	군남초중학교			유치초·장흥유치중	
	대광초·중학교			금정초·영암금정중	
	양수초중학교			장천초·영암서호중	
	울면초·중·고등학교			금당초·금당중	
	하량초·중학교	유초중	경북 9개교	부남초·구천중학교	
강원 2개교	향산초·중학교	유초중		송라초중학교	
	퇴계초·중학교			모서초중학교	
	상승초·상서중학교	유초중		낙동동부초·낙동중학교	
충북 10개교	한송초중학교			동로초중학교	
	수산초중학교			남정초중학교	
	제천덕산초중학교			지품초중학교	
	회인초·중학교			양북초중학교	
	연풍초·중학교			무을초중학교	
	청풍초중학교		경남 3개교	한산초중학교	
	충주대소원초·중학교			금오초·중학교	
	생명초·중학교			진영장등초·중학교	
	가덕초·중학교		제주 5개교	신창초중학교	
	산척초·중학교			저청초중학교	
충남 6개교	은산초중학교			무릉초중학교	
	가야곡초·중학교			신산초·중학교	
	단천초·중학교			우도초중학교	
	남면초·중학교		총	65 개교	

자료: 1) 서울: 교육부(2020). 통합운영학교 현황. 에듀프레스(2021).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7092>.

2) 인천: 교육부(2020). 통합운영학교 현황. 일간경기(2019).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969>.

3) 경기: 교육부(2020). 통합운영학교 현황. 비전21뉴스(2022). <http://www.vision21.kr/mobile/article.html?no=201526>. 김포타임즈(2022). <http://www.gimp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21>.

4) 강원: 교육부(2020). 통합운영학교 현황. 강원도민일보(2019).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968805>.

5) 충북: 충청북도 교육청(2022). 통합운영학교 현황.

6) 전북: 전라북도 교육청(2022). 교육행정자료(각급 학교 현황)

7) 전남: 전라남도 교육청(2022). 통합운영학교 현황.

8) 경남: 경상남도 교육청(2021). 통합운영학교 현황.

9) 충남, 경북, 제주도: 교육부(2020). 통합운영학교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초통합학교의 현황은 적으나, 각 시도교육청 단위와 학교 간의 연계, 대학기관·연구기관들의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이용한 사례들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충청북도교육청은 2018년도부터 새내기 학생들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유·초 연계교육 징검다리 선도학교를 모집·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학교는 배부된 예산을 활용하여 학교 급별 징검다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징검다리 교육은 입학을 경험하면서 아동들이 겪는 적응의 어려움을 교육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원 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교과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개발한 것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원과 함께 만5세 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유·초 연계 통합과정인 꿈자람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매년 유치원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초연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개발된 꿈자람과정 모델은 누리과정 생활주제와 초등학교 1~2학년군 대주제와의 관련성 있는 소주제를 추출하여, 만5세 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구성되어있다. 만5세 2학기 꿈자람 과정은 교육내용, 생활지도, 교육환경 등의 학교생활 전반적인 분야에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7개 생활주제와 '초등학교에 가려면' 생활주제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충청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A초등학교와 A단설유치원은 일부 교사들의 자생적인 놀이문화가 학교전체로 확산되어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준 사례로 교사들의 통합교과 속의 놀이 지도방법에 대한 고찰로 출발되었다. 체험 중심의 놀이 활동으로 전래놀이 활동, 나들이, 현장학습, 세시풍속 활동 등을 진행한다.

한편, 충청북도에 위치한 B초등학교와 B병설유치원은 교육가족 모두가 가르침과 배움이 즐거운 '아름다운 동행' 교육을 실현하는 '배움공동체학교'로 2015년 행복씨앗학교로 선정되어 역량 있는 민주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모델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연계 교육 대상자인 유아-교사-학부모간의 유기적 협력을 중시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특성을 활용하는 사례이다. 유치원 생활주제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교육과정

을 재구성하여 연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유치원과 5학년의 어깨작 활동, 1학년과 6학년의 어깨작 활동, 공동 체험 학습 및 행사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추가로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적응, 진단활동까지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위치하고 있는 C초등학교와 C병설유치원의 사례는 서울형 혁신학교와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운영하면서 초1,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선도학교로 인성교육, 감성교육, 지성교육의 교육환경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형 협력교사제와 더불어 교사제를 지원한다. 서울형 협력교사는 초등학교 입문기 시기의 학생들을 위해 학생 개인별로 수준별 방법이나 전략 등을 지원하는 강사이며, 더불어 교사는 교육과정 시간에 학생 개인별 특성과 배움 속도에 맞춰 수업, 성장 등을 이끌기 위한 상호 협력 교사이다. 이에 해당학교는 서울형 협력교사와 더불어 교사제를 지원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실내·외 환경구성, 놀이시간 운영,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운영되고 있고, 한글을 접하는 첫 단계 교육환경을 도서관놀이터로 설정하여 한글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글 배움터’, 수학 협력놀이 활동을 통합하여 수학놀이를 재구성한 ‘수학 배움터’, 1학년은 생태놀이, 2학년은 신체협력놀이를 활용한 ‘슬기로운 배움터’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있다.

〈표 II-1-7〉 유초연계 시범학교 사례

대상	주요내용					
충청북도 교육청의 징검다리 교육과정	- 유치원 혼합연령 1개반과 5학년 전체 운영, 1학년과 6학년 전체 운영 - 공동환경 조성·공동교육 활동 등 함께살이 및 학교적응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생활교육 운영 - 누리과정영역과 교과과정영역을 연계하여 운영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꿈자람과정 모델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과 관련성					
	생활주제 (대주제)	소주제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유치원과 친구 (학교와 나)	학교생활	친구와 서로 도우며 공부하 기(2차시)	· 학교둘러보 기(2차시) · 친구에게 관 심갖기(3차시)	· 학교놀이하 기(2차시) · 친구와 놀이 하기 (2차시)	전래놀이하기 (4차시)
	나와 가족 (가족)	가족	가족간의 예절 지키기(5차시)	집안일 조사하 기(2차시)	가족과 함께하 기(4차시)	가족놀이하기 (4차시)

대상	주요내용						
	우리 동네 (이웃)	가게	이웃과 인사하 기(2차시)	우리 마을 돌 러보기(3차시)	이웃 생활 표 현하기(11차 시)	달팽이 놀이 하기(4차시)	
	동식물과 자연 (봄,여름, 가을,겨울)	· 새싹 · 가을 날씨와 생활 · 동물	· 안전한 생활 하기(2차시) · 동물보호하 기(3차시)	· 계절 날씨와 생활(2차시) · 동물의 세계 탐구하기(5차 시)	· 민속놀이하 기(3차시) · 동물표현하 기(12차시)	자연으로 표 현 활동하기 (4차시)	
• 유치원 꿈자람과정							
A초등학교· A단설유치 원	생활주제	활동명				초등학교 교과와의 관련성	
	교통기관	(1-6) 교통 기관 글자자식 (1-7) 바퀴 수가 달라요 (1-5) 모양 조각으로 교통기관 구성하기 (2-1) 차레를 지켜요 (2-2) 정류장을 이용해요 (2-3) 표가 필요해요 (3-5) 자동차를 만들어요 (4-3) 신호등이 말해요 (4-11) 약속을 지켜요 (4-15) 배려할 수 있어요				수학 국어 학교 행복한 학교생활	
• 전래놀이: 월별 전래놀이 계획 및 실시							
	월	전래놀이명		월	전래놀이명		
	4	1주, 고무줄(산토끼) 2주, 비석치기 3주, 고무줄(씨앗)		9	1주, 깃대 쓰러뜨리기(모래놀이터) 2주, 고무줄(장난감 기차) 3주, 강강술래		
	5	4주, 대문놀이 1주, 남생이놀이 2주, 너리기편지 3주, 개고리타령 4주, 손치기 발치기 5주, 고무줄(자전거)		10	1주, 실꾸리 톨톨 2주, 어깨동무 씨동무 3주, 가마타기 4주, 쥐야쥐야		
		6	1주, 가벼우냐 맹공 2주, 고무줄놀이(가자가자 감나무) 3주, 황소씨름 고등어씨름 4주, 덕석물이		11	1주, 손바닥 씨름 2주, 실구대 소리 3주, 사방치기 4주, 꼬마야 꼬마야	
	7		1주, 달팽이 잔놀이 2주, 고무줄(송아지)		12	1주, 엉덩이씨름 2주, 8자놀이 3주, 실뜨기 4주, 팽이치기	
	• 나들이: 월별 나들이 계획 및 실시 세시활동: 4, 6, 9, 12월 세시풍속과 관련한 활동						

대상	주요내용				
	월	놀이주제	내용 및 방법	준비물	장소
	3	봄 보물찾기	꽃노과 봄꽃 찾기	루페	운동장
	4	호암지 봄나들이	유치원 손잡고 호암지 나들이	물, 간식	호암지
	5	전통시장 나들이	전통시장 나들이 (옹달샘 시장)	물, 돈	전통시장
	6	나무 관찰	나무 와 꽃(장미 등) 관찰하기	루페	운동장
	7	농작물 수확	유치원과 초등학교 텃밭을 돌아보고 농작물 수확하기(토마토, 오이, 옥수수 등)	바구니	텃밭
	9	목화 수확	유치원에 핀 목화 수확하고 씨 빼기 활동	바구니	텃밭
	10	호암지 가을나들이	유치원 손잡고 호암지 나들이	물, 간식	호암지
		벼 수확	반별로 재배한 벼를 함께 수확	홀데	텃밭
	11	배추 수확	배추 수확	비닐봉투	텃밭
	12	1년 돌아보기	· 유치원교실에서 1년의 나들이 돌아보기 · 유학실에서 버블쇼 감상하기	PPT	유학식
	월	명절	세시풍속 관련 활동	준비물	
	4	삼짇날	· 장 담그기 · 호암지 봄꽃놀이	요리도구	
	6	단오	· 황소씨름 대회 · 단오부채 선물하기 · 화채 만들기	단오부채 화채 재료 요리도구	
	9	추석	· 강강술래 · 송편 나누어 먹기	송편	
12	동지	· 새해 달력 선물하기 · 동지현말 배우고, 버선 소원나무 만들기	버선모양 소원지		
B초등학교· B단설유치 원	· 즐겁게 배우는 학교, 행복한 꿈을 키우는 학교, 공감하고 소통하는 학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학교 · 소속감·유대감을 이용해 적응력을 향상시킴 · 교육과정 재구성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생활주제	주제	대주제	소주제	
	봄	봄 날씨 느끼기 봄 날씨 알기	학교	학교와 친구, 나	
	가족	나, 가족, 우리집, 다양한 가족	봄	봄 맛이, 봄 동산	
	여름	여름 날씨 느끼기 겨울 날씨 알기	가족	가족과 친척, 다양한 가족	
	우리 동네	동네 모습과 생활, 동네 사람들	여름	여름 맛이, 여름 생활	

대상	주요내용				
유·초 연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우리 나라	사람들의 생활, 자랑거리	마을	우리 이웃, 우리 동네	
	가을	가을 날씨 느끼기 가을 날씨 알기	가을	가을맛이, 가을 모습	
	겨울	겨울 날씨 느끼기 겨울 날씨 알기	나라	우리나라, 다른 나라	
			겨울	겨울 맛이, 겨울 나기	
	- 유·초 연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 어깨짝 활동: 유치원과 5학년, 1학년과 6학년이 어깨짝을 이루어 함께 농작물 수확, 책 읽기 등의 활동을 실시 2) 공동 체험 학습 및 행사 운영				
	공동행사	과학여행	마술쇼 공동 관람 및 과학 체험을 실시한다.		
		책소풍	학부모가 책을 읽어주고 독후활동을 안내하며 유치원과 전교생이준비된 부스를 돌며 책과 만나는 활동을 한다.		
		배움나눔의 날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유아들은 다양한 초등학교 형님들의 학년 활동을 관람한다.		
	공동 체험 학습	농사랑수랑 체험학습	유치원과 초 1,2학년이 지역의 농산물을 수확해 보는 경험을 한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흙놀이와 연극놀이	유치원은 방과후 특성화 시간에, 초등학교는 창의적체험학습 시간에 흙놀이를 하고 공동 연극 관람을 한다.		
C초등학교·C단설유치원	- 인성교육 - 칭찬과 배려로 키우는 인성다지기를 목표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성교육 실천 및 꿈끼 탐색주간을 운영하며 인성이 겸비된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하고 있다. - Saving Zone: 아금바리통장이라는 개별 모의통장을 활용한 경제교육 - 칭찬무지개: 기초 7개 영역에 따른 다면적인 칭찬활동을 전개하여 목표에 도달에 따른 칭찬메달을 수여 - 감성교육 - 문화체육예술교육으로 꿈으로 만드는 이름표, 진로 연계 동아리 활동, 중랑 드림하이를 연계한 체험중심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 - 지성교육 -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생활적응도 검사 및 학습부진 유형 검사를 실시하고, 교과학습 진단평가 실시, 개인별 학습이력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하며 두드림 학교를 운영 - ○○ HAPPY 생활본(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자기관리 프로그램과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한 학습동기 향상 및 학력증진(동행)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자료: 김수진 외(2018). 유·초 징검다리 교육과정의 활성화 방안 연구. 내용을 연구진이 정리함.

한편, 프로그램 연구들을 통해서도 유·초 연계 교육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 과학창의재단은 교육부의 재원으로 지원하여 총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와 함께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융합인재교육은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Art(예술), Mathematics(수학)의 교과 간

통합 교육을 통한 교육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융합적 소양을 향상시킨다.

총신대학교는 2021년 만3세에서 초등 2학년까지의 협력 학습적 미술과 디자인을 활용을 주제로 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유아가 미술과 디자인을 통해 비교, 분류, 자기표현, 협력 학습을 경험하는 과정이며 더 나아가 융합교육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된 창조적인 결과물은 유아의 균형적 발달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초등 1학년 학생들에게는 참여 중심의 활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활동,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서울교육대학교는 2020년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전이 단계인 만5세(유치원 7세 반), 초등학교(1,2학년)을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의 경우 과학 교과가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 STEAM 프로그램에서는 과학적 지식 체계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과학의 기본 탐구 역량과 기본 소양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과학과 공학, 기술을 공통 주제로 하여 각 발달과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다.

〈표 II-1-8〉 유초연계 프로그램 사례

기관	주제	대상	내용
총신대학교	협력 학습적 미술과 디자인을 활용	만 3세에서 초등 2학년까지	• 상황제시, 실생활문제 - 만 5세: 내 이름에서 상징형태 찾기 - 초등 1학년: 내 소개 방법 탐구 • 창의적 설계, 아이디어 발현 및 협력 - 만 5세: 상징의 개념 이해하기, 상징으로 나를 표현하고 소개하기 - 초등 1학년: 내 이름 디자인하고 브랜드화 • 감성적 체험, 성패의 경험 - 만 5세: 나의 상징디자인 전시 - 초등 1학년: 디지털 일기로 과정 성찰
서울교육대학교	스토리텔링과 과학	만 5세에서 초등 2학년까지	• 만 5세: 기본적인 공학과 설계 경험 장난감 발명 놀이 • 초등 1학년: 1학년 통합과정인 '계절', '생활 도구' 외계인 아이키가 지구에서 살아남기위한 백과사전 만들기

자료: 1) 총신대학교(2021). 2021년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만5세와 초등1학년을 비교하였음.

2) 서울교육대학교(2020). 2021년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만5세와 초등1학년을 비교하였음.

2) 무상/의무교육

유아 무상·의무교육은 현재 취학전 보육과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누리과정으로써 공통의 교육·보육활동의 통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무상 재원과 관련하여서도 표준보육·교육비를 적용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해 지원함으로써 이 영역에서도 통합을 이루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여전히 기관, 설립·운영 요건, 관할부처 등에서 상이한바 대부분의 영역에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운영체제, 정부지원, 교사자격 등에서도 차이를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동일연령의 유아들에 대한 지원의 격차가 있어왔다. 영유아 교육·보육은 아동의 삶의 관점에서 이익과 행복이 보장을 위해 변화의 시도와 그 통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태이다.

〈표 II-1-9〉 유아교육, 보육제도 비교표

구분	유아교육	보육
소관부처	• 교육부	• 보건복지부
대상아동	• 만3~5세	• 만0~5세
입소기준	• 제한없음(추첨)	• 취약계층, 맞벌이 등 실수요층 우선입소
기능 (기관성격)	• 교육(주)·보호의 교육기관	• 보호(주)·교육의 사회복지시설
근거법령	• 유아교육법('05.1.30)	• 영유아보육법('91.1.14)
운영일수	• 수업일수 180일 이상/연	• 연중 무휴(공휴일 제외)
운영시간	• 09:00~13:00 - 교육은 4~5시간 내 탄력적 운영 - 방과후과정(보호자 선택, ~17시)	• 7:30~19:30(12시간 운영원칙) - 기본보육(7:30~16:00) - 연장보육(16:00~19:30) - 야간연장,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설립방법	• 시·도 교육감이 인가 • (유아교육법 제4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시설 유형	• 국공립/사립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안단체등/ • 직장/민간/가정/협동
정부지원 보육료, 수업료 등 ('19년)	• 수업료 : 1.9조원 * 3~5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총 : 11.2조원 - 보육료 : 7.2조원 * 0~2세 총 5.1조원(국고 3.4조원, 지방비 1.7조원) ** 3~5세 총 2.1조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구분		유아교육	보육
질관리		• 누리과정(3~5세)	• 표준보육과정(0~5세) • 3~5세 표준보육과정 중에는 공통 누리과정(3~5세) 포함
		• 교육지원청	• 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 장학지도, 유치원 평가제	• 컨설팅, 어린이집 평가제
교사 자격	자격 요건	• 학과제를 기본으로 자격부여 (최소 전문대 졸)	• 학점제 관련 교과목 이수 (3급은 최소 고졸)
	자격 종류 ·양성 과정	• 유치원교사 1, 2급, 준교사	• 보육교사 1, 2, 3급
		• 1급: 근무경력, 자격연수	• 1급: 근무경력, 승급교육
		• 2급: 대학 졸업 - 총 72학점 이상 - (전공)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교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2학점, 교육봉사 활동 2학점)	• 2급: 대학 졸업, 교과목 이수, 승급교육 - 총 51학점 이상 * 총 과목: 17과목 이상 * 필수과목: 51학점(9과목) 이상 * 보육실습: 3학점 이상
교사 차우	교사 급여	• 국공립 336.4만원, 사립 207.5만원 * '14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기준	• (평균 213만원) 국공립 250만원, 민간 205만원 * '18년 보육실태조사 기준
	차우 개별비 (20년)	• 68만원(담임) • 55만원(비담임)	• 36만원(3~5세 담임, 유특회계) • 24만원(0~2세 담임, 국비·지방비) * 비담임 교사는 지원없음
	4대 보험	• 건강보험 • 국공립 : 공무원연금 • 사립: 사학연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 • 고용보험: 국공립(국가 50%, 보육교직원 50%), 민간(법정요율에 따라 고용주, 근로자 부담)
보육료 수입료 (월)	국공립	• 시도 교육감이 물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3~5세 240천원 + α	• 정부 규정 부모보육료 범위내에서 시·도 지사가 결정 - 0세 470천원, - 1세 414천원 - 2세 343천원, - 3~5세 240천원
	민간	• 원장 자율 결정(전년도 물가인상을 범위내 원비 인상 제한)	• 기관보육료+부모보육료 지원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보육료 추가 수납가능(3~5세)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비용지원체계		• 대상: 유치원 이용 아동(3~5세) • 방식: 부모지원: 바우처 지원, 시설지원 - (국공립) 교사 등 인건비 100%, 시설	• 대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0~5세) • 방식: 부모지원(바우처 지원), 시설지원 - (국공립, 법인) 건축·개보수비, 인건비

구분	유아교육	보육
	운영비 100% - (사립) 운영비, 교재교구비 • 시스템: e유치원, NEIS • 운영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과 영아반교사 80%, 유아반교사 30%, 조리원 1명 100%) - (직장) 시설비 저리용자(1~2%), 인건비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월 80만원, 중소기업 월 100만원), 교재교구비 (월120~520만원) - (민간, 가정) 기관보육료 교재교구비 (연50~120만원) 운영비(공공형, 교사수, 현원에 따라 지급, 최대 1천만원) • 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운영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설치기준	• 시설임대: 불허 • 시설처분: 매도·담보 제공금지 • 설치위치: 1.2층 원칙 • 시설면적: 40명 이하 - 5×정원㎡, 41명 이상 - 80+(3×정원)㎡ • 체육장: 40명 이하(160㎡), 41명 이상 (120+정원㎡)	• 시설임대: 제한 없음(단, 부채비율 50% 이하) • 시설처분: 제한 없음(단 사회복지법인 매매 불가) • 설치위치: 1층 원칙(직장내 또는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전용인 경우 5층까지 허용) • 시설면적: 영유아 1인당 4.29㎡(놀이터면적 제외) • 보육실 : 영유아 1인당 2.64㎡ • 놀이터 : 영유아 1인당 3.5㎡(영유아 50인 이상 어린이집)

주: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보육의 쟁점과 과제. <표 II-2-3>를 재구성함.
 자료: 보건복지부(2021a).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체계.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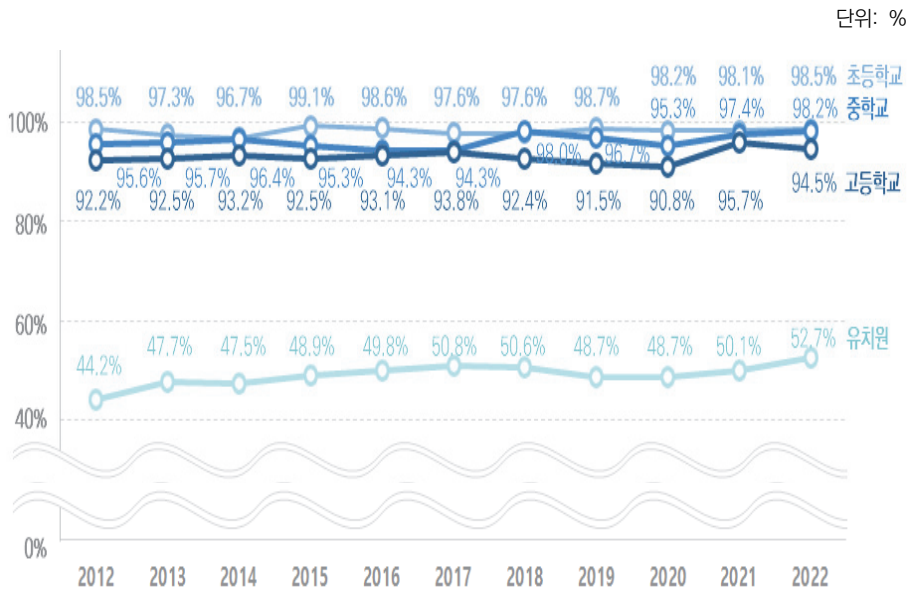
다. 국내·외 관련 현황

1) 취학/취원율

가) 국내

2022년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전체 취학률은 2021년에 비해 상승되었다. 유치원은 52.7%로 전년 대비 2.6%p 상승하였고, 초등학교는 98.5%로 전년 대비 0.4%p 상승, 중학교는 98.2%로 전년 대비 0.8%p 상승, 고등학교는 94.5%로 전년 대비 -1.2%p 하락하였다(교육부, 2022)

[그림 II-1-3] 취학/취원율(2011~2022)



주: 1) 취학률(%) = 취학적령의 학생 수 / 취학적령인구 * 100

2) 취학 적령 : 유치원 (만 3세~5세), 초등학교(만 6~11세), 중학교(만 12~14세), 고등학교(만 15~17세)

3) '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고, '18년 이후는 잠정 추계이므로 다음 추계시 통계 값이 달라질 수 있음.

4) 학생 수는 기타학교(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제외한 해당 학제별 취학적령의 학생 수임.

자료: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표 II-4-1.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2022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p. 10.를 근거로 연구진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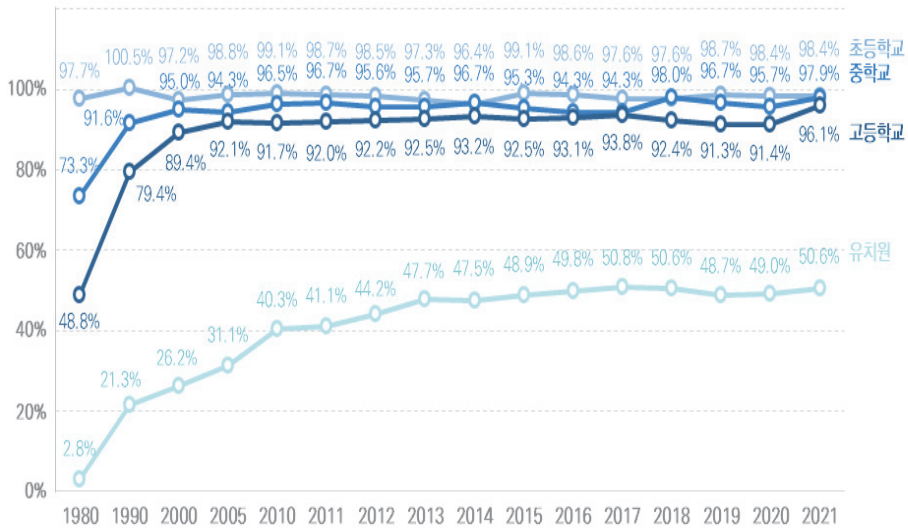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취학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학률을 국가의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초·중·고 학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받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초등교육과 중학교의 무상 의무교육이 확대된 90년대를 이후로 취학률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2005년 이후 완전한 취학률이 유지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제외되므로 초·중·고등학교에 대비하여 낮으나 지난 4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 대비 2021년에 약 47.8%p 상승하였다.

만 3~5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취원율을 살펴본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2001년 대비 2021년에 약 38.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만 3~5세를 포함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2001년 55.3%에서 5년 후에 77.7%

로 급상승하였고 2013년 이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II-1-4] 연도별 학교급별 취학률(1980-2021)

단위: %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그림 II-4-1.

〈표 II-1-10〉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

연도	만 3세 이상 어린이집 보육아동수(A)	유치원 원아수(B)	총 아동 및 원아수(A+B)	취학적령인구 (만3~5세 추계인구)	취원율
2001	565,617	545,142	1,110,759	2,008,630	55.3
2002	594,497	550,256	1,144,753	1,937,201	59.1
2003	616,786	546,531	1,163,317	1,883,549	61.8
2004	667,336	541,713	1,209,049	1,837,034	65.8
2005	687,039	541,603	1,228,642	1,730,983	71.0
2006	690,426	545,812	1,236,238	1,590,589	77.7
2007	686,104	541,550	1,227,654	1,469,204	83.6
2008	633,613	537,822	1,171,435	1,397,569	83.8
2009	600,655	537,361	1,138,016	1,353,999	84.0
2010	593,654	538,587	1,132,241	1,332,415	85.0
2011	609,397	564,834	1,174,231	1,371,521	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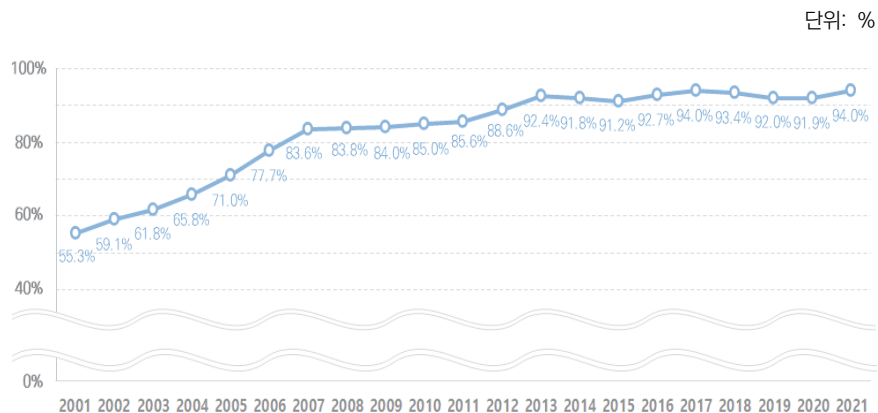
연도	만 3세 이상 어린이집 보육아동수(A)	유치원 원아수(B)	총 아동 및 원아수(A+B)	취학적령인구 (만3~5세 추계인구)	취원율
2012	615,077	613,749	1,228,826	1,386,331	88.6
2013	612,005	658,188	1,270,193	1,374,052	92.4
2014	606,098	652,546	1,258,644	1,371,470	91.8
2015	588,217	682,553	1,270,770	1,392,718	91.2
2016	605,231	704,138	1,309,369	1,412,481	92.7
2017	588,006	694,631	1,282,637	1,364,497	94.0
2018	571,978	675,998	1,247,976	1,335,570	93.4
2019	568,586	633,913	1,202,499	1,306,700	92.0
2020	543,506	612,538	1,156,044	1,257,378	91.9
2021	510,639	582,572	1,093,211	1,162,401	94.0

주: 1) 취원율 = {(만 3세 이상 어린이집 보육아수 + 유치원 재적원생수) ÷ 취학적령(만 3~5세)인구} × 100.
2) 취학적령인구는 추계인구를 사용함(202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1년 이후는 다음 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가지표체계(2022). 유아교육 취원율. 2022. 9. 1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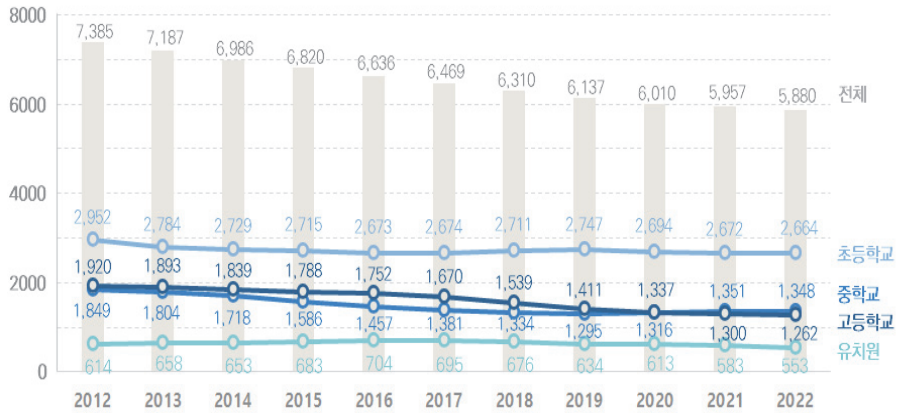
유·초·중·고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5,879,768명으로 전년 대비 77,350명(1.3%)감소하였다. 유치원생 수는 552,812명으로 전년 대비 29,760명(5.1%)감소, 초등학생수는 2,664,278명으로 8,062명(0.3%) 감소, 중학생 수는 1,348,428명으로 2,342명(0.2%) 감소, 고등학생 수는 1,262,384명으로 37,617명(2.9%) 감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다(교육부, 2022).

[그림 II-1-5]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2001-2021)



자료: 국가지표체계(2022). 유아교육 취원율. 2022. 10. 11 인출.

[그림 II-1-6] 유·초·중등 학생 수(2012~2022)단위: 천명



자료: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표 II-1-1.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2). 2022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p. 5.

유치원 전체 이용 원아 수를 살펴보면 582,572명이고 유형별로는 사립 69.56%, 공립 30.40%, 국립 0.05%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격차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폭 줄어들지만 3~5세 모두 사립에 주로 재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세 이상만 공립과 사립이 비슷한 수준이다. 어린이집 전체 원아 수는 1,184,716명이고, 유형별로는 민간 45.19%, 국공립 22.70%, 가정 17.63%, 사회복지 법인 6.08%, 직장 5.48%, 법인 단체 2.62%, 협동 0.30% 순으로 나타났다. 0세는 가정 어린이집에 가장 많이 재원하고 있었으며, 1~5세까지는 민간 어린이집에 가장 많이 재원하고, 6세 이상은 사회복지법인에 가장 많이 재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1]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령별 원아 수(2021)

구분	계	비율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유치원 전체	582,572	100.0				133,257	207,528	241,489	298
국립	264	0.05				58	99	107	-
공립	177,097	30.40				32,266	59,736	84,939	156
사립	405,211	69.56				100,933	147,693	156,443	142
어린이집 전체	1,184,716	100.0	119,621	252,542	301,914	190,393	161,020	154,363	4,863
국공립	268,967	20.35	16,924	50,600	65,259	50,339	43,182	41,643	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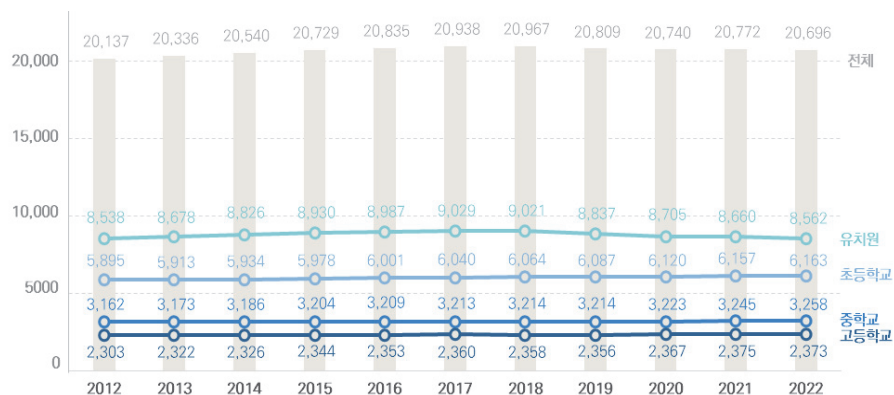
구분	계	비율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사회복지법인	72,085	6.29	3,300	10,259	15,313	14,972	13,532	12,865	1,844
법인단체	30,998	2.74	1,251	4,017	6,171	6,562	6,188	6,115	694
민간	535,428	46.46	6,657	94,521	131,567	103,331	85,844	82,354	1,154
가정	208,842	18.52	58,751	80,327	68,293	856	327	260	28
협동	3,465	0.30	86	433	723	751	711	736	25
직장	64,931	5.34	2,652	12,385	14,588	13,582	11,236	10,390	98

주: 2022년 9월 기준의 교육통계와 2021년 12월 기준의 보육통계의 표를 재구성함.
 자료: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연보, 유치원 현황 연령별 원아수.
 2) 보건복지부(2021b). 2021 보육통계. p. 3.를 근거로 연구진이 작성함.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유·초·중·고등학교 수를 살펴보면, 2022년 총 20,696개교로 2021년에 비해 76개원 감소하였다. 유치원은 8,562개원으로 전년 대비 98개원 감소, 고등학교는 2,373개교로 2개교 감소하였으나, 초등학교가 6,163개교로 6개교 증가, 중학교가 3,258개교로 13개교 증가하였다. 초·중·고등학교의 수의 변화는 비슷한 수준이며 비교적 유치원이 많이 감소되었다(교육부, 2022).

[그림 II-1-기] 유·초·중등 학교 수(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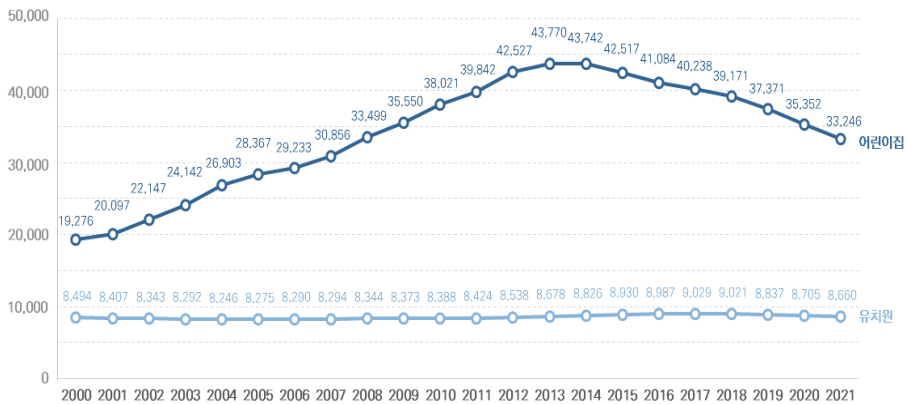
단위: 개원



주: 1) 학교 수에는 신설학교, 기존학교, 휴교가 포함됨(폐교, 분교는 제외함)
 2) 전체 학교 수에는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포함됨.
 자료: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표 II-1-1.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2). 2022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p. 3.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를 살펴보면, 유치원은 평균적으로 완만하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감소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유치원은 전년 대비 45개소, 어린이집은 2,106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8] 연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2000-2021)단위: 개소



자료: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표 II-1-1.

2) 보건복지부(2021b). 2021 보육통계. p. 2.

〈표 II-1-12〉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자 유형별 현황(2005~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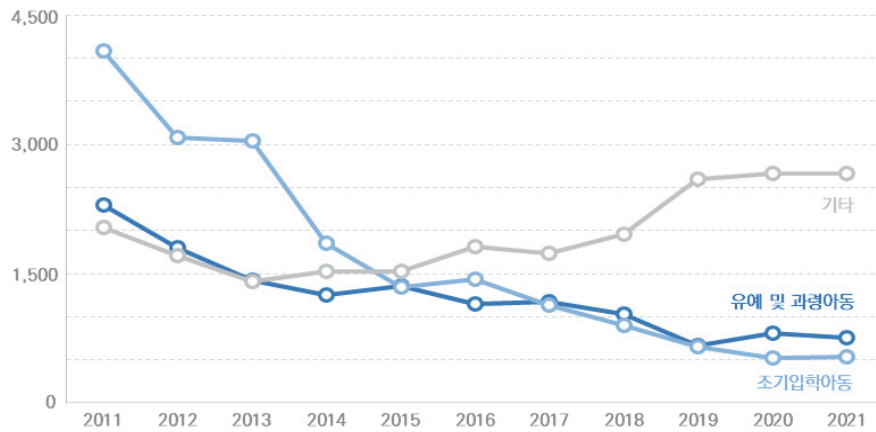
연도	적령아동	유예 및 과령아동	조기입학아동	기타
2005	589,746	31,616	2,972	177
2006	572,124	32,827	2,852	99
2007	567,989	40,369	2,206	205
2008	491,283	45,045	1,791	2,680
2009	426,035	33,513	9,707	337
2010	463,368	4,216	8,417	290
2011	449,532	2,297	4,089	2,039
2012	415,647	1,806	3,086	1,703
2013	430,753	1,416	3,040	1,412
2014	474,677	1,254	1,848	1,525
2015	451,461	1,352	1,339	1,527
2016	430,832	1,147	1,432	1,809

연도	적령아동	유예 및 과령아동	조기입학아동	기타
2017	455,070	1,170	1,132	1,733
2018	458,939	1,025	903	1,951
2019	469,881	660	651	2,595
2020	422,647	812	521	2,666
2021	424,447	757	537	2,664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p. 64. 표 II-4-7.

[그림 II-1-9]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자 유형별 현황(2011~2021)

단위: 명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표 II-4-7에서 적령아동을 제외하고 연구진이 작성함.

<표 II-1-13> 연도별 초등학교 미취학자 유형별 현황(2005~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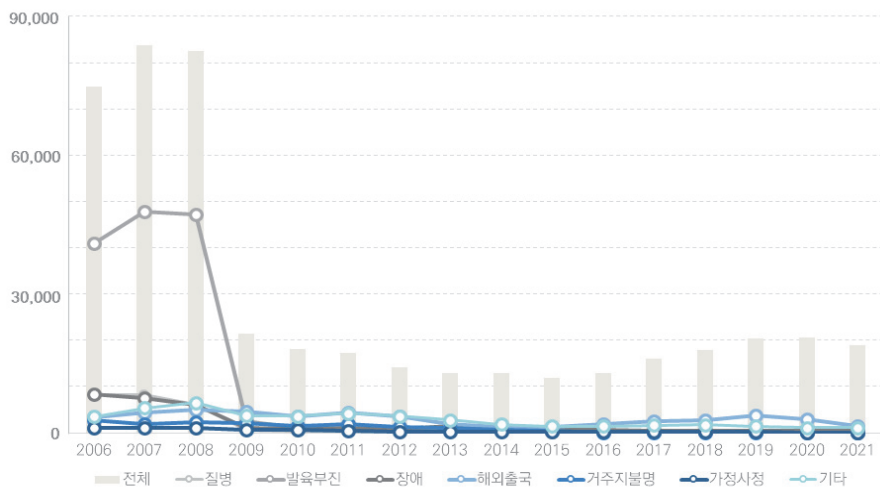
연도	전체	질병	발육부진	장애	해외출국	거주지불명	가정사정	기타
2005	62,667	6,452	32,849	6,851	2,716	2,452	714	5,250
2006	74,833	8,294	40,853	8,356	3,329	2,670	1,091	3,524
2007	83,737	8,132	47,711	7,432	4,336	1,979	1,080	5,315
2008	82,414	6,195	47,102	6,036	5,103	2,386	967	6,470
2009	21,344	472	2,493	1,136	4,600	2,090	629	3,714
2010	18,150	312	1,131	880	3,522	1,472	557	3,591
2011	17,293	299	936	1,100	4,435	1,823	475	4,204
2012	14,159	269	721	787	3,604	1,237	237	3,591
2013	12,908	249	619	1,414	1,959	1,142	215	2,750

연도	전체	질병	발육부진	장애	해외출국	거주지불명	가정사정	기타
2014	12,933	167	390	519	1,203	586	261	1,881
2015	11,941	194	280	537	1,167	431	288	1,445
2016	12,876	171	291	554	1,936	78	209	1,413
2017	16,034	151	259	512	2,443	24	187	1,635
2018	17,811	180	177	416	2,770	42	189	1,721
2019	20,306	200	178	385	3,734	39	139	1,422
2020	20,654	195	128	398	2,918	38	76	1,126
2021	18,894	199	107	356	1,562	20	88	1,119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p. 64. 표 II-4-8.

[그림 II-1-10] 연도별 초등학교 미취학자 유형별 현황(2005-2020)

단위: 명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표 II-4-8을 근거로 연구진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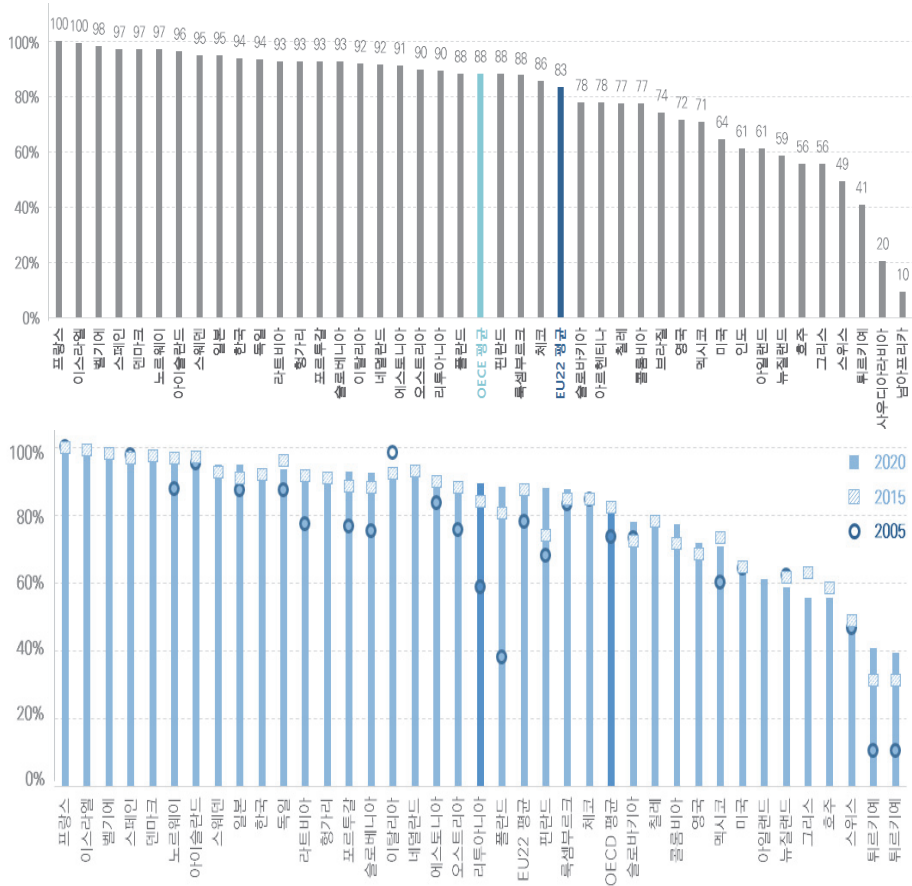
나) 국외

최근 현황에는 OECD 회원국 간에 차이는 있으나, 영유아교육 및 보육(ECEC)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형식적인 구조로의 변화가 강조되고 있다. ECEC 서비스의 중요성과 변화의 강조는 노동시장 성과와 출산율 제고에만 기여되는 것이 아니라 발달, 학습 및 웰빙 등 아동 전반에 지원할 수 있는 국가수준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ECEC 서비스의 질 개선 및 접근 기회

확대를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나(OECD, 2020, 2016), 회원 국 간에는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ECEC 서비스의 질, 유형, 실제 서비스 이용 시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OECD, 2021).

[그림 II-1-11] 3-5세 ECEC 등록률 및 변화(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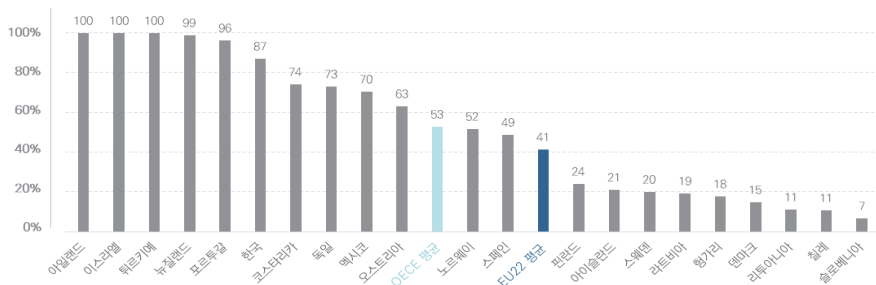
주: 네덜란드의 경우 2019년의 등록된 ECEC서비스에 대해 참조되었음.
 자료: OECD(2021). Education at a Glance, pp 145, 163.

2020년 OECD 회원국 평균 3세 미만 영아의 27%가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ISCED 0)에 등록되어있으며, 2018년 1세 영아와 2세 영아의 ISCED 0 등록률이 약 35%를 넘은(OECD, 2020) 것을 통해 3세 미만의 영아들의 ECEC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직전까지의 유아 취학률은 만 5세 이전의 ECEC 등록률을 통해 볼 수 있다. 2020년 그리스 외 7개국을 제외하고 70% 이상의 취학률을 보이며(OECD, 2022),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 중 대다수(83%)가 조기 아동 교육(ECE)에 등록되어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OECD, 2022). 특히 만 5세 유아 교육 또는 초등교육과정 취원/취학률은 콜롬비아 외 5개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90% 이상이다(OECD, 2020).

[그림 II-1-12] 3-5세 ECEC 사립 기관 비율(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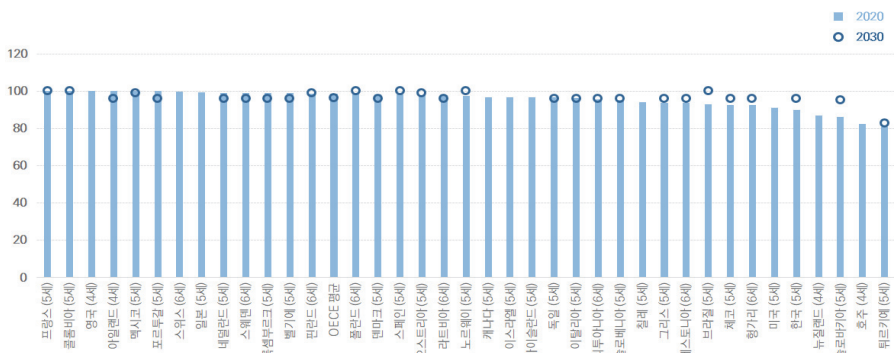
단위: %



주: 칠레, 체코, 스위스의 경우 2019년의 등록된 ECEC서비스에 대해 참조되었음.
 자료: OECD(2020). Education at a Glance. p. 165.

[그림 II-1-13] 취학전 교육 등록률(2020)

단위: %



주: 괄호안의 나이는 공식 초등 입학 연령임.
 자료: OECD(2022). Education at a Glance. p.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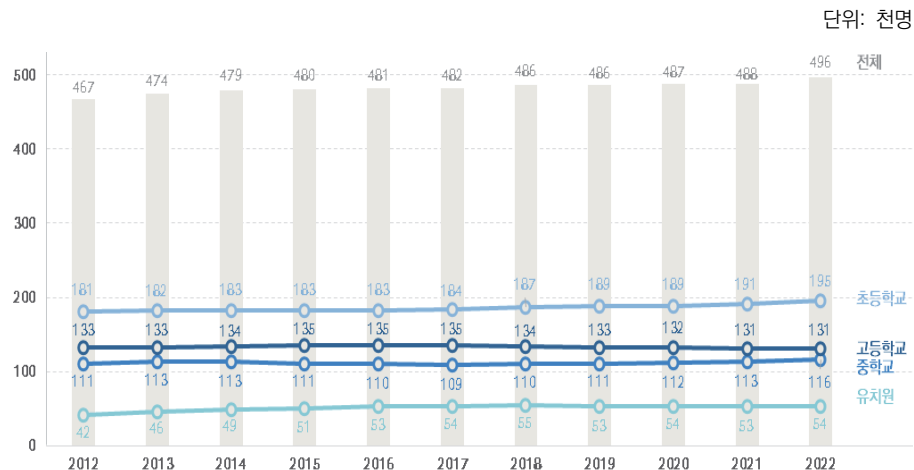
한편, 공립 ECEC 기관에 다니는 비율이 OECD평균이 70%를 미치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국가의 재정 투자와 공적 재원에 대한 이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OECD, 2015). 공립기관 비율에서 한국은 약 20%로 뉴질랜드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며 (OECD, 2016), 사립기관 비율에서 OECD 평균이 53%인데 이에 비해 한국이 87%로 높아 OECD대비 사립기관에 다니는 영유아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OECD, 2022).

2) 교직원 현황

가) 국내

유·초·중·고등학교의 전체 교원수는 507,793명으로 전년 대비 6,934명(1.38%) 증가하였다. 학제별 교원 수는 유치원 53,696명으로 전년 대비 239명(0.45%) 증가, 초등학교 195,037명으로 3,813명(1.99%)증가, 중학교 115,673명으로 2,435명(2.15%)증가했으며, 비슷한 수준이나 고등학교 131,086명으로 34명(0.03%)감소하였다(교육부, 2022).

[그림 II-1-14] 유초중·고등 교직원수(2011-2021)



주: 교원은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휴직교원을 포함함(퇴직교원 및 강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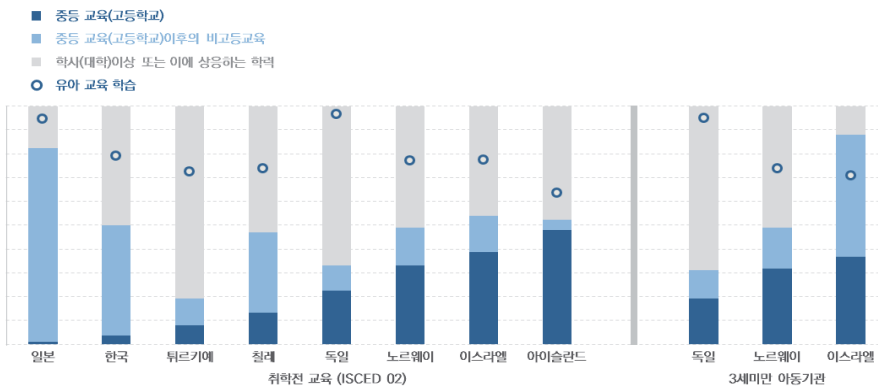
자료: 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 2022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나) 국외

OECD 회원국의 ECEC(ISCED 0) 영유아교사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은 학사학위(ISCED 6)로 나타난다. 유아교사의 학력은 교육과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학력의 표준이 최소 학사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I-1-15] 영유아교사 학력과 양성과정(2019)



주: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의 교육단계에 따른 한국의 학제 분류는 사용자 편의상 다음과 같이 표시함.
ISCED 3단계는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과정), 고등기술학교),
ISCED 4단계는 중등후 비고등교육으로 고등학교 후 대학과정 이전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ISCED 5단계는 단기 고등교육(전문대학, 기술대학/각종학교/사내대학(전문대학 과정)/전공대학, 기능대학, ISCED 6단계는 학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단계, ISCED 7단계는 석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단계임.

자료: OECD(2020). Education at a Glance. p. 176.

〈표 II-1-14〉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기관에서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수준과 교육기간

국가	3세 이하(영아단계)		3세이상(유아단계)	
	ISCED 수준(단계)	기간(년)	ISCED 수준(단계)	기간(년)
벨기에 fr(프랑스어 공동체)	3	4	6	3
벨기에 de(독일어 공동체)	3	3	6	3
벨기에 nl(네덜란드어 공동체)	3	4	6	3
불가리아	6	4	6	4
체코 공화국	3	3	3	4
덴마크	최소요건없음	최소요건없음	최소요건없음	최소요건없음
독일	6	3	6	3
에스토니아	6	3	6	3

국가	3세 이하(영아단계)		3세이상(유아단계)	
	ISCED 수준(단계)	기간(년)	ISCED 수준(단계)	기간(년)
아일랜드	4	2	4	2
그리스	6	4	6	4
스페인	5	2	6	4
프랑스	6	3	7	2
크로아티아	6	3	6	3
이탈리아	최소요건없음	최소요건없음	7	5
헝가리	4	2	6	3
네덜란드	3	3	6	4
오스트리아	5	2	5	2
폴란드	3	3	6	3
포르투갈	7	1.5	7	1.5
루마니아	3	4	3	4
슬로베니아	6	3	6	3
핀란드	6	3	6	3
스웨덴	최소요건없음	최소요건없음	최소요건없음	최소요건없음
영국 1	3	4	6	3
영국(스코틀랜드)	5	1	5	1
노르웨이	6	3	6	3
튀르키예	3	4	6	4

주: 영국 1: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를 포함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2019.

유아를 위한 기관의 근무를 위한 교육인력에서 필수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로 석사 수준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ISCED 3) 단계로 가장 낮은 국가는 체코, 루마니아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최소 자격으로 학사 이상을 요구하며, 덴마크와 스웨덴은 자격과 교육기간의 최소요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OECD, 2020). 2022년 보고에서는 오스트리아, 칠레, 라트비아, 노르웨이, 영국, 튀르키예에서 최소 학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석사 이상 학위에서 경쟁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2022, OECD). 영아를 위한 보육기관의 근무를 위한 교육인력에서는 대부분 최소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자격을 가지며 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는 불가리아 외 7개 국가 정도이다. 영·유아 보육기관에서 일

하고자할 때, 유아기관은 가장 긴 교육기간으로 이탈리아가 최소 5년 이상의 교육 기간을 필요로 하고 포르투갈(1.5년), 오스트리아·프랑스·아일랜드(2년)으로 비교적 적은 기간으로 요구하고 있다. 영아기관은 평균적으로 3.5년을 필요로 하며, 포르투갈이 석사 수준의 높은 인력을 요구하는 반면 1.5년으로 가장 짧고 이탈리아·스웨덴·덴마크가 최소요건이 없는게 특징이다(European Commission,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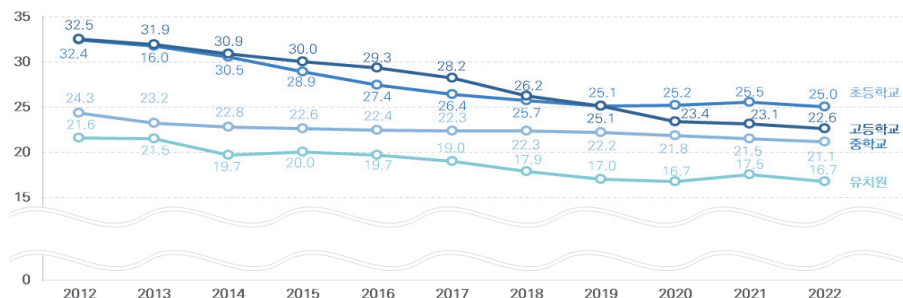
3) 교원 1인당/학급 당 아동 수

가) 국내

교원 1인당 아동수는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구조적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아동수와 학급 당 학생 수는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감하지는 않으나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교원 1인당 아동수는 유치원 10.3명으로 전년 대비 0.6명 감소, 초등학교 13.7명으로 0.3명 감소, 중학교 11.7명으로 0.2명 증가, 고등학교 9.6명으로 0.3명 감소하였다. 학급 당 학생 수는 유치원 16.7명으로 전년 대비 0.8명 감소, 초등학교는 25.0명으로 0.5명 감소, 중학교는 21.1명으로 0.4명 감소, 고등학교는 22.6명으로 0.5명 감소하였다(교육부, 2022).

[그림 II-1-16] 학급당 아동 수(2012-2022)

단위: 명



자료: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표 IV-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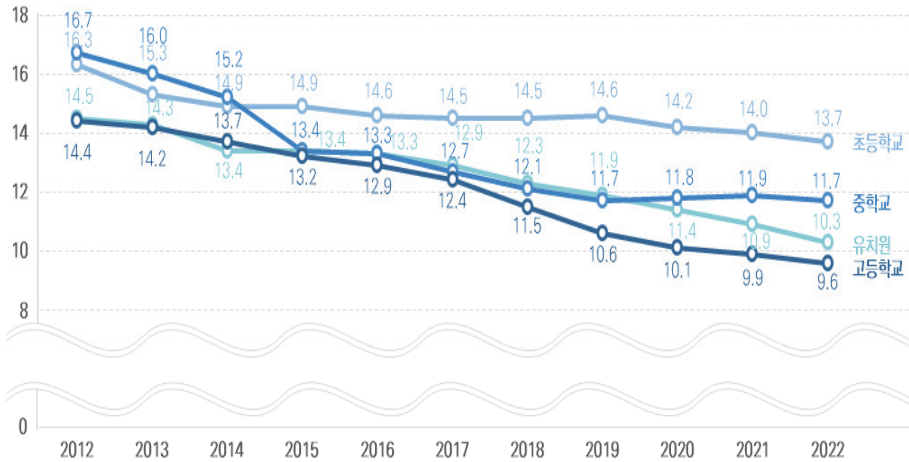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2). 2022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10p.

주: 1) 학교 수에는 신설학교, 기존학교, 휴교가 포함됨(폐교, 분교는 제외함).

2) 전체 학교 수에는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의 학교가 포함됨.

[그림 II-1-17]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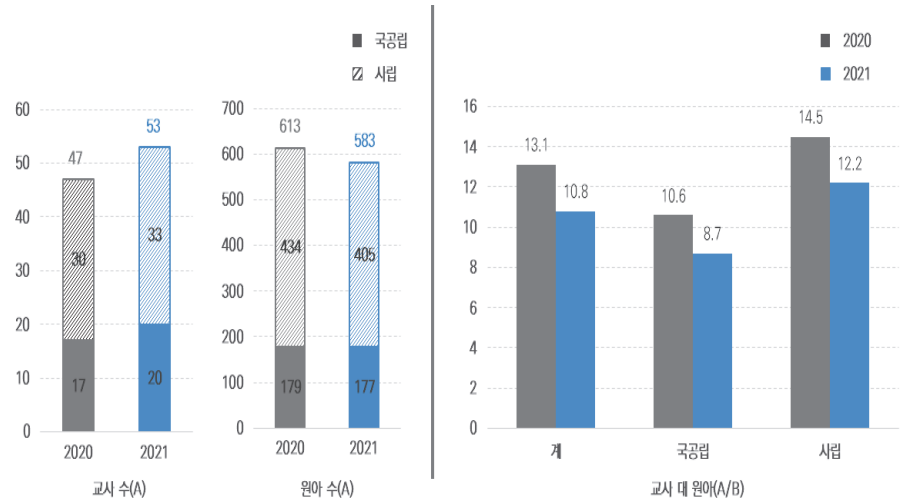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표 IV-2-1.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2). 2022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1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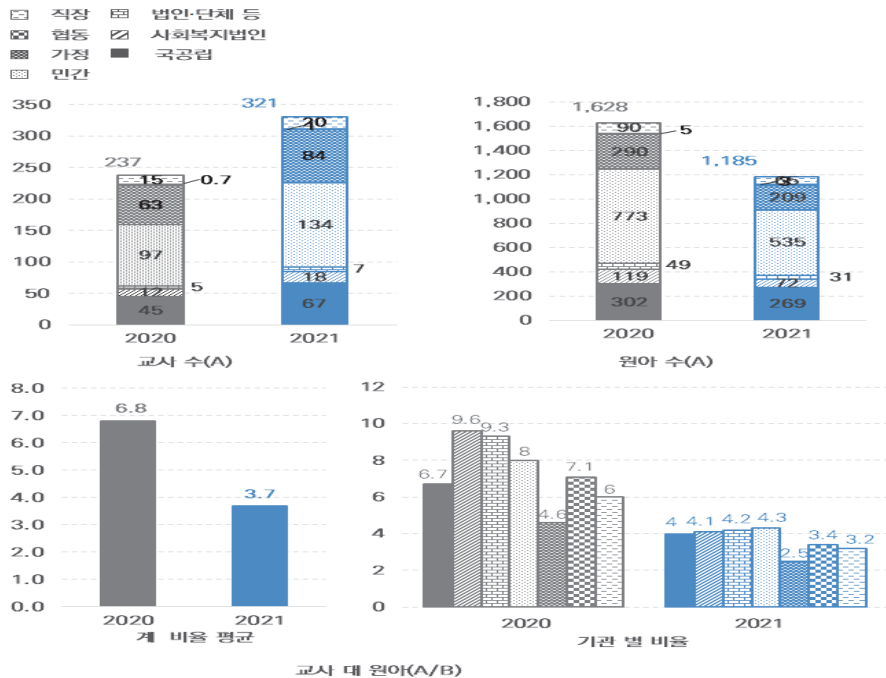
[그림 II-1-18]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2020-2021)

단위: 천명, %



주: 교사는 보직교사, 교사, 기간제교사 등을 포함함.
자료: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a). 교육통계연보. 유치원 현황.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2021). 2021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p. 13.

[그림 II-1-19]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



주: 1) 보육교사는 담임교사, 대체교사, 방과후 교사, 야간연장·24시간·시간제 보육교사, 보조교사, 누리과정보조교사, 육아단축근무 대체교사, 연장 보육반 전담교사, 대체교사 등을 포함함.

2) 0-5세 정원 기준, 만약 현원으로 하면 비율은 더 낮아짐.

자료: 교육부·한국개발원(2020a, 2021). 교육통계연보, 유치원 현황.

해외 동향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공교육의 강화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유치원 설립유형별 비교를 살펴보면 교육여건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최근 5년간 유치원은 약 3.0명 감소, 교원은 차이의 폭이 크며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비율은 2010년 2.2명에 비해 2020년 3.9명으로 벌어져 국공립에 비해 사립에서의 비율 개선이 더디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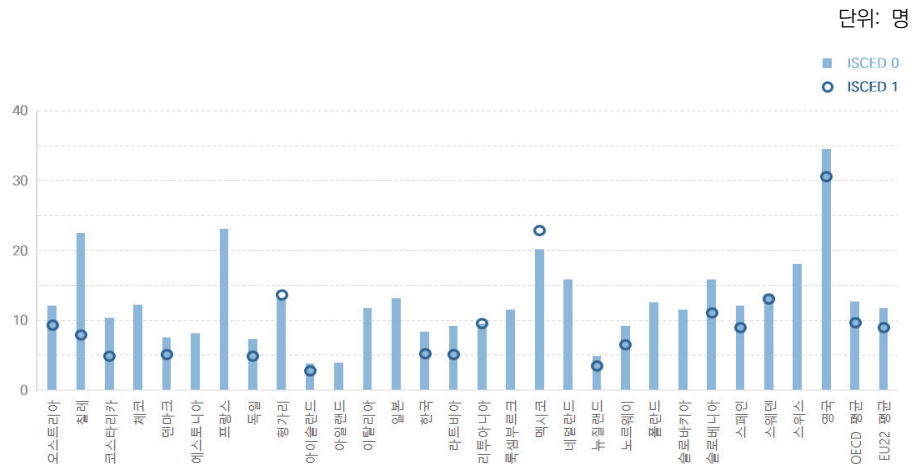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원 영유아 연령 차이로 인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동일 연령으로 대조하기는 어려우나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치원 비율을 살펴보면 국공립의 경우 교사 1인당 2020년 10.6명에서 2021년 8.7명으로 감소, 사립에서는 교사 1인당 2020년 14.5명에서 2021년 12.2명으로

감소하였다. 어린이집 교사 1인당 2020년에 6.8명에서 2021년에 3.7명으로 약 3명 감소되었으며, 모든 기관유형에서 뚜렷한 감소를 보인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에서 2020년 교사 1인당 약 9명에서 2021년 약 4명대로 감소하여 더욱 뚜렷한 감소 폭을 확인할 수 있다(김혜자, 2021).

나) 국외

OECD 회원국 평균 영아교육과정(ISCED 01)의 경우 교사 1인당 아동수는 0명이고, 유아교육과정(ISCED 02)의 경우 교사 1인당 아동수는 7명이다(OECD, 2020). OECD 회원국 평균 유아교사 1인당 약 13명의 유아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별로 상이해 높은 경우 영국이 교사 1인당 약 35명을 담당하고 낮은 경우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가 약 4명을 담당하고 있다(OECD, 2022).

[그림 II-1-20] OECD 교사 1인당 취학전 아동 비율(2020)



주: 교직원 대비 아동 비율은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OECD(2022). Education at a Glance 2022. p.164.를 근거로 연구자가 작성함.

4) 이용시간 및 무상/의무교육

해외의 전반적인 교육 추세들을 살펴보면 ECEC서비스 무상 제공, 취학 전 1년, 유아학교 등에 대해 무상/의무 교육화를 보편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박창현, 김근진, 윤지연, 2021).

〈표 II-1-15〉 OECD 24개국의 유아 및 초등교육 학제

국가	나이(만)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독일 ¹⁾				유치원			초등학교(1~4학년)						
오스트리아				유치원			초등학교(1~4학년)						
이탈리아				유아학교			초등학교(1~5학년)						
아일랜드 ²⁾				초등학교 유아학급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영국				유치반 유아학교			초등학교(1~6학년)						
뉴질랜드				유치원			초등학교						
미국 ³⁾				유치원	유치원		K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프랑스				유아학교 유아반			준비학년 (CP)	초급학년1 (CE1)	초급학년2 (CE2)	중급학년1 (CM1)	중급학년2 (CM2)	6학년 (Sixième)	중등학교 적응단계
그리스				유아학교	유아학교		초등학교(1~6학년)						
스위스				유아학교	유아학교		초등학교(1~6학년)						
일본				유치원			초등학교(1~6학년)						
중국				유치원			초등학교(1~6학년)						
한국				유치원 (어린이집 0~5세)			초등학교(1~6학년)						
벨기에				유치원			초등학교(1~6학년)						
스페인				유아학교			초등학교(1~6학년)						
포르투갈				유치원			초등학교(1~6학년)						
노르웨이				유치원			초등학교(1~6학년)						
캐나다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1~6학년)						
헝가리 ⁴⁾				유아학교			초등학교						
아이슬란드				유치원			초등학교(1~7학년)						
덴마크				유치원			0학년 (pre-school year)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호주				유치원	초등학교 예비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스웨덴				유아학교			취학 전 교실	초등학교(~8학년)					
폴란드 ⁵⁾				유치원			유치원	초등학교(1~8학년)					
핀란드							유치원	종합학교(만12세까지 1~6학년) - 초등(Peruskoulu, 배르스코울루)					

- 주: 1) 독일의 기초학교(초등학교)와 중등학교(중학교) 학제는 주별로 4~6제와 6~4제로 구분됨
 2) 아일랜드 4~5세 아동은 초등학교 내 유아학급(infant classes)에 참여하며, 의무교육은 아님
 3) 미국의 학제는 주별 및 주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이다. 초등학교는 K(Kindergarten)학년을 포함하는 학교도 있으며, 학교별 학년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있음
 4) 헝가리 초등교육은 4, 6년 또는 8년으로 구성되고, 전통적으로는 초등교육은 8년으로 구성됨
 5) 폴란드는 취학 전 만6세 교육이 의무교육이며, 초등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의 포함되어 1학년~8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음
 6) 붉은색: 유아교육, 파란색: 의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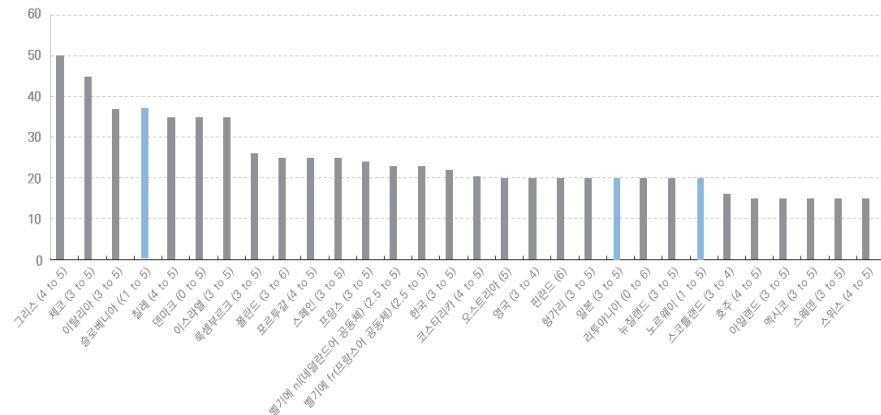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5세 취학률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 OECD 회원국들의 대부분이 ECEC 서비스에 참여하여 법적 권리의 확대와 3~5세 무상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창현, 김근진, 윤지연, 2021). ECEC 서비스 무상 제공과 의무교육화로써 아동들은 정해진 시간동안 교육과정에 참여해야하며 부모들이 적절히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b).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제공하는 무조건적 무료 이용은 차이가 있고 영아보다는 유아에게 보편화 되어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1년 아동에게 대부분 무상 교육을 제공하지만 보장되는 년 수와 주당 시간이 국가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OECD 회원국에서는 평균적으로 6세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고 프랑스와 멕시코가 좀 이른 나이인 3세부터 시작하며, 핀란드와 스웨덴이 7세를 의무교육 시작 연령으로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0-5세에 ECEC 이용 자격을 지원하는데, 일부 국가인 노르웨이와 독일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1세부터 지원하고 있어 급여 수준, 육아 휴직제도와 연관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용 시간 보장은 노르웨이는 41시간 보편적 지원보상하는 반면 스코틀랜드는 3-4세 대상 16시간 이용을 보장하여 국가별 보장의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b).

[그림 II-1-21] 유아무상교육보육 가능시간 및 연령(2018)

단위: 시간



주: 1) 국가명은 내림차순임, 무료이용 적용 연령대는 국가명 옆 괄호에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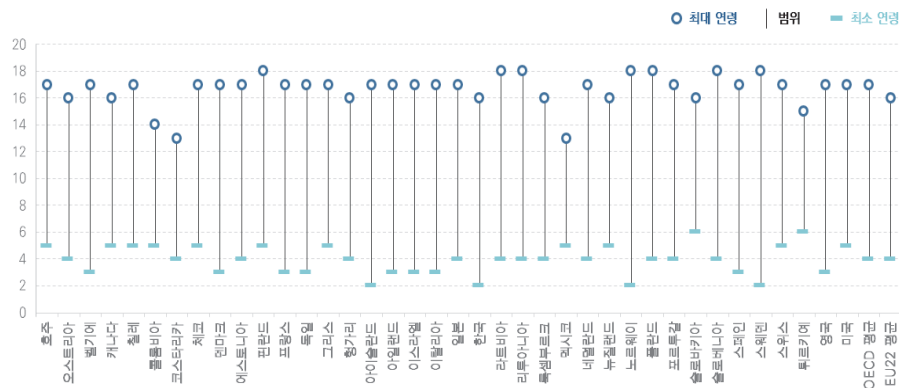
- 2) 체코(32.5~60시간), 잉글랜드(15~32시간), 이탈리아(25~50시간), 한국(20~25시간), 슬로베니아(30~45시간), 스위스(10~20시간).
 - 3) 2019년 10월 1일부터 무료 영유아교육 및 보육은 3~5세 아동에게 보편적인 법적 권리가 됨.
 - 4) ECEC를 위한 주간보호센터 및 통합센터 자료는 제외됨.
- 자료: 1) OECD(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p. 213.
 2) ECEC survey(2018). TALIS Starting Strong;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 재인용).

OECD 회원국은 의무교육 이후 취학률도 높게 이어지는 편이다. 완전 취학 상태(인구의 90%가 취학한 상태)가 평균 14년(약 4~17세)간 지속되고 있으며, 가장 긴 경우 노르웨이가 17년, 가장 짧은 경우 멕시코가 9년으로 나타났다. 취학연령이 가장 적은 나이는 2세로 아이슬란드,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이 해당하고 연령이 가장 높은 나이는 18세로 벨기에,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의 나라들로 1/4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b).

파트너 회원국인 나라들에서도 2세로 취학연령이 시행되는 국가가 절반 정도이며, OECD의 많은 국가들이 취학률과 범위를 높이는 것을 ECEC목표로 삼고 시행 중에 있다. 이에겐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도 포함되어 취학 연령이 가장 큰 폭으로 낮아진 국가는 5세에서 2세로 하향된 한국이다.

[그림 II-1-22] 완전 취학 연령 범위(2020)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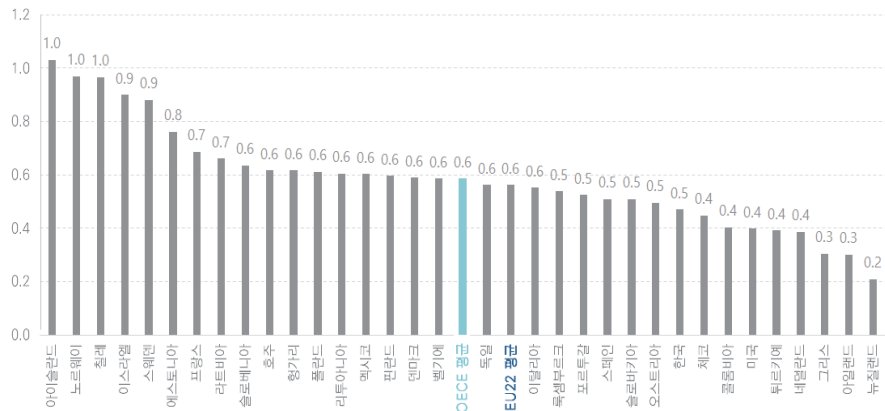


우 공교육비의 70%가 공공지출로 구성되고 유아교육은 83%에 달한다.

2019년 OECD 회원국의 ECEC과정에 대한 평균지출은 0.59%를 차지하는데 뉴질랜드가 0.21%로 낮은 지출에 속하고 아이슬란드가 1.03%, 칠레와 노르웨이가 0.97%로 비교적 높은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취학률, 법적 혜택, 참여 강도, 취학 연령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 기간의 차이도 관련이 있다. 유아교육 기간이 단축되는 호주, 아일랜드와 영국과 같은 경우는 낮아지고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과 같이 유아교육 기간이 늦어지는 경우 지출 비율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1-23] 3-5세 GDP대비 아동에 대한 평균 지출 비율(2019)

단위: %



자료: OECD(2022). Education at a Glance 2022. p.165.

2. 관련 법령

가. 학교제도

교육기본법상 학교제도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된다(제9조 제1항).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며 이루어져야 하는데(제9조 제2항 및 제3

항), 이러한 학교의 종류와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현행법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의 종류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이 있다(유아교육법 제2조 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유치원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되며(유아교육법 제7조), 초·중·고등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로 구분된다(초·중등교육법 제3조). 마지막으로 대학은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된다(고등교육법 제3조).

한편, 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수업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에도 학사학위과정 등에 대한 수업연한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고등교육법 제31조, 제38조, 제42조, 제48조, 제50조의3, 제53조 및 제56조).

〈표 II-2-1〉 학제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2년 이상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②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38조(수업연한 등) 산업대학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① 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②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 원격대학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③ 원격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나. 의무교육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또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현행법은 의무교육의 대상으로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명시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이러한 의무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제8조 제2항).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 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

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을 수 없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12조).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 의무교육 시행 확보를 위해 현행법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보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취학독려 조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초·중등교육법 제16조) 등을 정하고 있다.

현재 유아교육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취원 의무가 없으나, 향후 의무교육이 된다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 같이 취원을 강제하는 여러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 의무교육 실행을 위해 국가는 모든 유아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표 II-2-2〉 의무교육 관련 법령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읍·면·동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

- 를 관찰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26조(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보고) ①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③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찰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취학독려조치) ①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무상교육·보육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외에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게 되는데, 고시는 유아학비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액만 명시하고 있을 뿐, 무상교육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유아교육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2022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참조).

반면,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의 비용은 무상으로 해야 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비용을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이상의 내용을 검토하면, 현재의 유아교육은 의무교육도 아니고, 완전한 무상교육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인 정비부터 필요하다고 본다.

〈표 II-2-3〉 무상교육·보육 관련 법령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
--

과할 수 없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②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및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액만큼을 차감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④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

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라. 조기입학 및 입학유예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녀 또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만7세)에 입학시켜야 하나(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만6세 또는 만8세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전 후 1년에 대해서는 부모(보호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동법 동조 제2항).

그러나 이와 별도로 입학유예 규정을 두어 취학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을 남용할 수 없도록 법은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에 입학유예를 한정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4조). 이러한 입법의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전후 1년의 선택권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만약 유아교육의 경우에도 의무교육이 실행된다면, 유아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예외는 제14조 및 제27조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만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표 II-2-4〉 조기입학 및 입학유예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II

영유아 단계 국가책임교육에 대한 국민 여론 분석

01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02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

Ⅲ. 영유아 단계 국가책임교육에 대한 국민 여론 분석

1.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가. 조사설계

1) 조사의 목적과 주요 분석 과제

본 조사는 온라인 상의 관심도와 함께 국가책임교육과 함께 언급되는 만5세 초 등취학, 무상/의무교육, 유보통합, K학년제 등의 키워드 등의 분석을 통해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정책 관련 관심도, 언급 추이, 연관어 분석을 통한 여론 동향 파악, 정책에 대한 긍·부정 요인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 조사 방법 및 절차

본 조사는 국내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포털인 네이버 뉴스 및 유아 교육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맘카페(부록2참조) 게시글(버즈)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사이트에서 '유보 통합', '만 5세 초등입학', 'K학년제', 'K학년', '유아무상의무교육', '유아 무상교육'등 학제개편과 관련한 키워드들을 원글 및 댓글을 2021년 6월에서 2022년 9월30일까지의 기간안에서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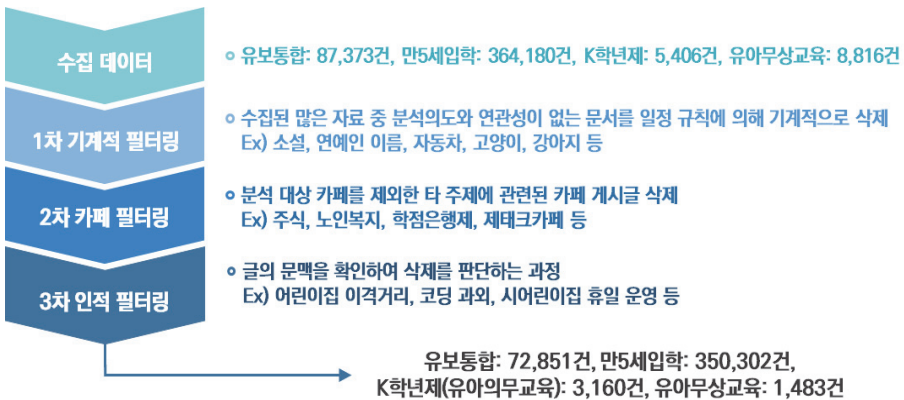
[그림 Ⅲ-1-1] 조사 방법 및 절차

조사 방법	수집 사이트	수집 기준	수집 키워드	수집 기간
버즈메트릭스 Buzz Index System을 이용한 온라인 Buzz 수집 및 분석	네이버 뉴스, 네이버 카페	원글 및 댓글	- 유보통합, 유보통합 - 만5세초등입학, 만5세초등입학 - K학년제, K-학년제, K학년 - 유아무상교육, 유아 무상교육 등	- 유보통합: 2021. 6. 1. ~2022. 8. 8. - 만5세입학: 2022. 7. 29. ~2022. 8. 8. - K학년제(유아의무교육): 2022. 1. 1 ~ 2022. 9. 30. - 유아무상교육: 2022. 1. 1. ~2022. 09. 30.

3) 수집/분석 문서 수

유보통합은 87,373건, 만 5세 초등취학은 364,180건, K학년제 및 유아의무교육 5,416건, 유아무상교육 8,816건이 최초 수집되었으나, 데이터의 정확도 제고와 분석 시간 단축을 위해 분석 대상과 연관성이 없는 문서를 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기계적 정제를 진행하였다. 2차로 분석 대상이 아닌 카페(주식,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학원 홍보 등) 등 삭제하였다. 그 결과, 유보통합 72,851건과 만 5세 초등취학 350,302건, K학년제 3,160건, 유아무상교육 1,483건을 분석 데이터로 확정하였다.

[그림 III-1-2] 데이터 정제 과정



4) 데이터 처리

수집된 텍스트 형태의 원데이터(raw data)는 비정형 데이터로 연구자가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형태소 단위로 분절, 키워드 기반의 의미분석자료로 유형을 변환하였다.

5) 데이터 분석 방법

본 조사에서는 빅데이터 자료 분석 방법으로 크게 2가지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건수에 기반해 트렌드와 이슈를 확인 가능한 ‘문서량추이 분석’ 과 특정 주제에 대

한 긍·부정 키워드를 바탕으로 성향을 파악하는 ‘감성 분석’을 활용하였다

나.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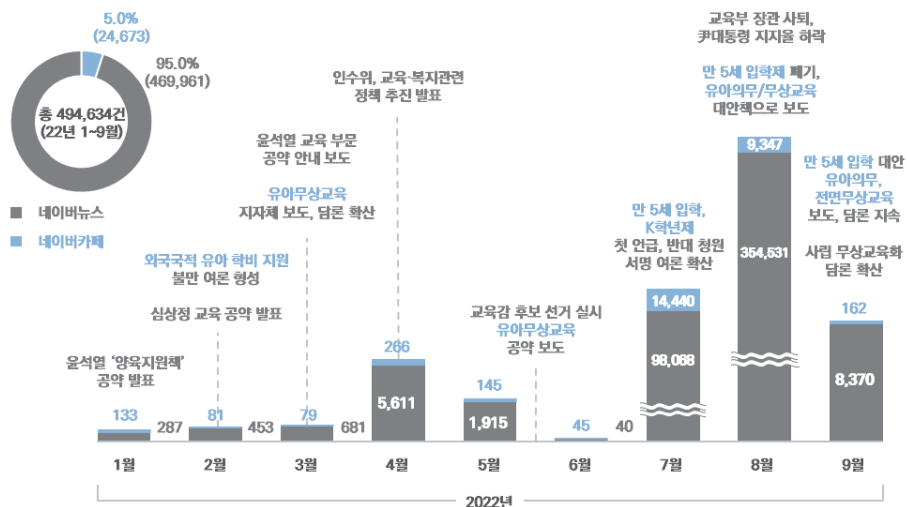
1) 학제개편

가) 학제개편 정책 버즈 발생 현황

학제개편 정책 버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9월, 학제개편 관련 버즈량은 494,634건이었고, 이 중 뉴스 버즈량은 469,961건(95.0%), 맘카페버즈량은 24,673건(5.0%)이었다. 2022년 4~5월 대통령 인수위에서 복지 정책 발표, 교육감 선거 건이 있어 이 시기 학제개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말 이후, 만 5세 취학 정책 발표로 만 5세 입학, K학년제 관련 반대 여론이 크게 상승하였고, 기존 정책인 유보통합에 대한 관심 역시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및 만 5세 입학 정책 폐기로 관련 비판 여론이 감소하였으며, 대안책으로 유아의무·무상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3] 학제개편 관련 전체 버즈 발생량 및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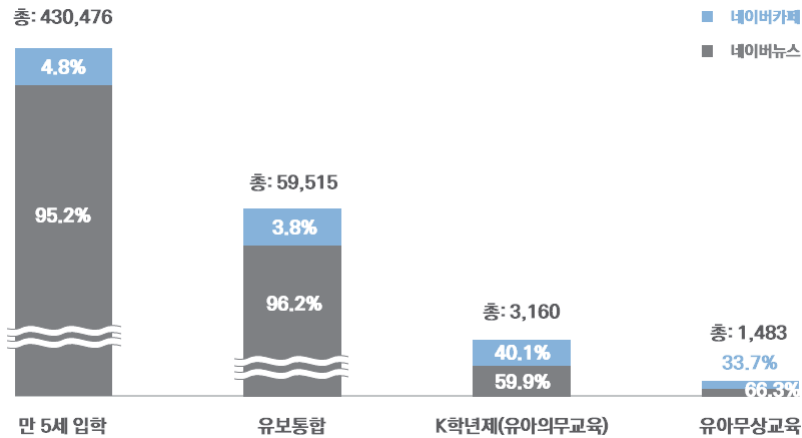
단위: 건



나) 학제개편 주요 정책별 버즈 발생 비교

2022년 1~9월, 학제개편 주요 정책인 ‘만 5세 입학’, ‘유보통합’, ‘K학년제(유아의무교육)’, ‘유아무상교육’의 버즈량을 분석하였다. 동 기간 가장 높은 관심이 나타난 정책은 만 5세 입학(430,476건)이며, 유보통합, K학년제, 유아무상교육이 그 뒤를 이었다. 맘카페 내에서 관심이 가장 높았던 정책은 만 5세 입학(20,634건, 4.8%, 버즈량기준)이었으며, 맘카페 및 뉴스가 비슷한 관심도를 나타낸 정책은 K학년제(1,266건, 40.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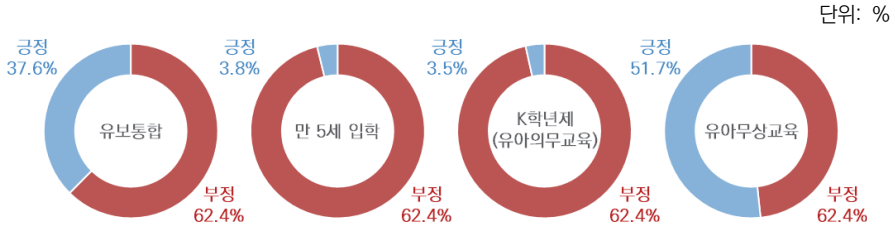
[그림 III-1-4] 학제개편 관련 주요 정책별 버즈 발생량 비교



다) 학제개편 주요 정책별 긍·부정율 비교

2022년 1~9월, 가장 높은 긍정율을 나타낸 정책은 유아무상교육(51.7%)이며, 그 뒤를 유보통합(37.6%)이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부정율을 나타낸 정책은 K학년제(96.5%)로, 만 5세 입학 정책(96.2%)과 더불어 ‘정책 반대 국민 청원’ 답변 확산이 높은 부정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I-1-5] 학제개편 관련 주요 정책별 긍·부정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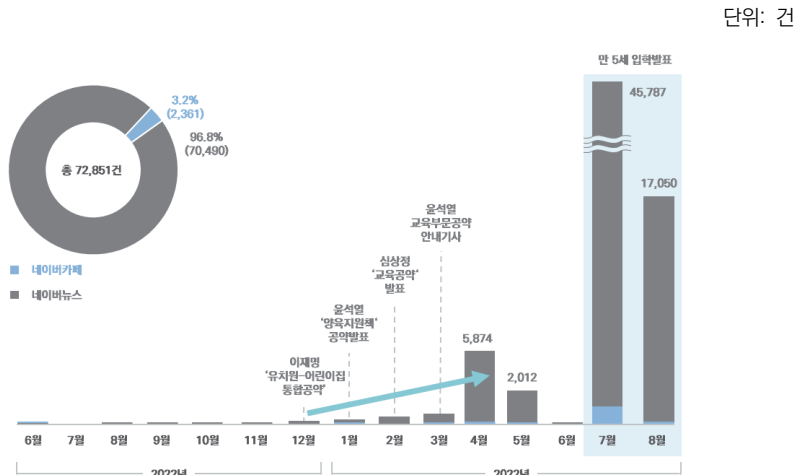
주: 분석 기간 : 유보통합(2021.06.01 - 2022.08.08), 만 5세 입학 : (2022.07.29 - 2022.08.08), K학년제 (2022.01.01 - 2022.09.30), 유아무상교육(2022.01.01 - 2022.09.30)

2) 유보통합

가) 유보통합 정책 버즈 발생 현황

최근 1년 유보 통합 관련 버즈량은 72,851건으로 이 중, 맘카페 내 버즈 발생은 2,361건(3.2%)으로 유보통합 정책 관련 맘카페의 관심은 뉴스 채널 대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 이후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 공약과 대통령 인수위복지 정책 발표 이후 꾸준히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 7월 말 만 5세 입학 정책 발표로 인해 기존 정책 중 하나인 유보통합의 언급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6] 유보통합 관련 전체 버즈 발생량 및 발생 추이



주: 분석 기간 : 2021.06.01 - 2022.08.08.

나) 유보통합 정책 관련 키워드

유보통합 관련하여, 뉴스의 경우 ‘교육’, ‘추진’, ‘개혁’ 등의 키워드가, 카페는 ‘교사’, ‘통합’, ‘과목’, ‘준비’ 등의 키워드가 상위를 차지하였다. 뉴스에서는 ‘인수위 국정과제 포함’, ‘윤석열 보육 국가책임제 언급’, ‘만 5세 입학 내 유보통합’ 관련 보도가 나타났다. 맘카페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한 찬반’,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교사 취직 정보 공유’, ‘보육교사 수준 향상’ 등의 담론이 나타났다.

[그림 III-1-7] 유보통합 연관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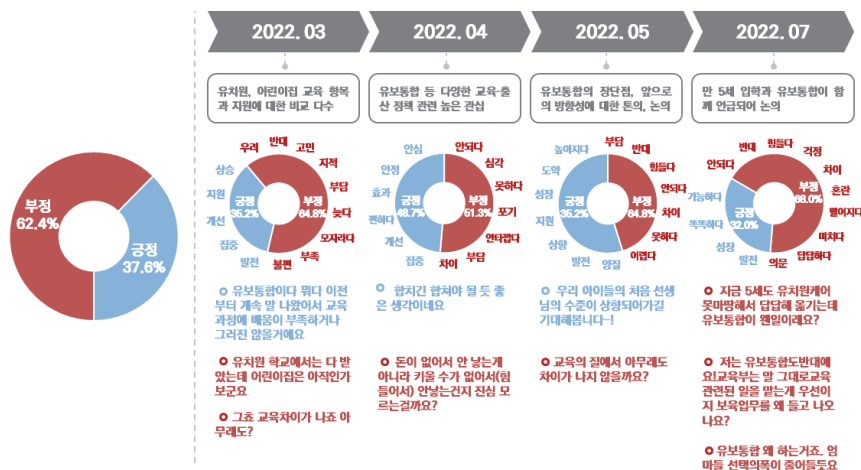
주요 연관 키워드 (TOP20)		네이버 뉴스 주요 연관 키워드 기사	
순위	네이버뉴스 연관어	네이버카페 연관어	
1	교육	교육	○ 교육부 산하 ‘유보통합 추진단’ 꾸려진다. ...인수위 국정과제 포함
2	추진	보육교사	○尹”만 0~5세 보육 국가책임제...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3	통합	교사	○ [유보통합] ① ‘어린이집vs유치원’ 갈라선 보육·돌봄...곧같은 40년 갈등
4	보육	보육	○ “한 달도 격차 큰데 왜 키워왔나” ...만 5세 입학’ 반발 확산
5	개혁	통합	○ 교육분야 국정과제 “다양성 확대 환영” 경쟁교육 우려’ 엇갈린 평가
6	단계	과목	○ 현장 교사 목소리 빼고 졸속...교육정책 시작은 ‘듣기’다
7	격차	준비	○ 만 5세 초등 입학 1년 하향추진에 교원단체 등 거센 반발...“유아 발달상황 반영 못 해”
8	수준	수업	
9	인재	선생님	
10	영유아	도입	네이버 카페 주요 연관 키워드 VOC
11	시행	단계	○ 이 게시글을 보며 유보통합이 어찌면 보육교사 가 세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 유보통합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들 모두의 행복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2	체계	양성	○ 또한 최근 유보통합에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보육교사 자격에 대한 취득조건이 높을 것으로 예상, 유치원교사=보육교사 개념에 대한 경계선이 무분별해져 관련 자격을 취득해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서둘러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13	양성	아동학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같이 양질의 교사 에게 교육 받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대대대대공감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코로나 이후로 마스크메운인지 아이들의 사회적경험부족 때문인지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발달 이 많이 늦은거 같아요. 그런데 교사대 영아비율은 그대로잖아요. ...애전 만 2세가 아닌거같다고 느끼네요 ...
14	현장	발달	○ 지금 5세도 유치원 케어 못마땅해서 답답해 올기는데 유보통합 이 뭘말이래요?
15	학력	국공립	
16	공교육	차이	
17	합의	격차	
18	반발	전환	
19	토론회	교육대	
20	공정성	체계	

분석 기간 : 2021.06.01 - 2022.08.08

다) 유보통합 정책 관련 온라인 평판

유보통합 정책 관련 온라인 평판을 살펴보면, 맘카페 내에서의 부정 비중은 62.4%, 긍정 비중은 37.6%로 부정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정책 발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 방향성이 구체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점차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였으나 만 5세 입학 발표 이후, 유보통합정책 평판도 부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8] 유보통합 관련 금·부정 반응 및 월별 부정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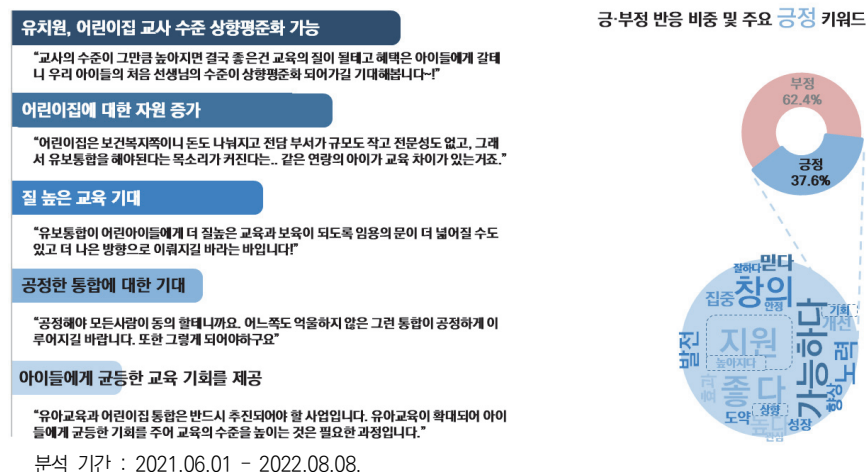


주: 분석 기간 : 2022.03.01 - 2022.07.31

라) 유보통합 정책 관련 맘카페 긍정 반응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긍정율은 37.6% 수준이며, ‘지원’, ‘기회’, ‘상향’, ‘높아지다’ 등의 긍정 키워드가 발생하였다. 유보통합 관련 긍정의견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수준 상향 평준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증가’, ‘질 높은 교육 기대’, ‘공정한 통합에 대한 기대’ 등 의견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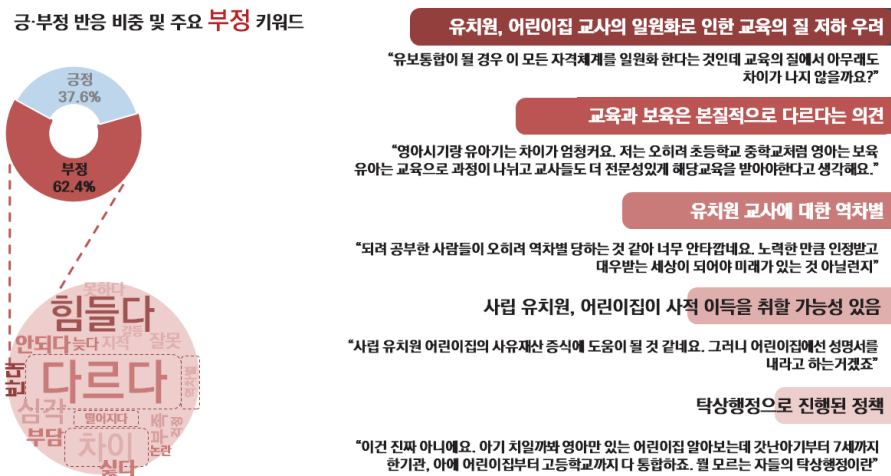
[그림 III-1-9] 유보통합 관련 맘카페 주요 의견: 긍정 반응



마) 유보통합 정책 관련 맘카페 부정 반응

유보통합에 대한 부정율은 62.4% 수준이며, ‘다르다’, ‘차이’, ‘떨어지다’ 등의 부정 키워드가 발생하였다. 유보통합 관련 부정 의견으로 ‘유보통합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 ‘교육과 보육은 본질적으로 다름’, ‘유치원 교사에 대한 역차별’ 등 의견이 발생하였다.

[그림 III-1-10] 유보통합 관련 맘카페 주요 의견: 부정 반응



분석 기간 : 2021.06.01 - 2022.0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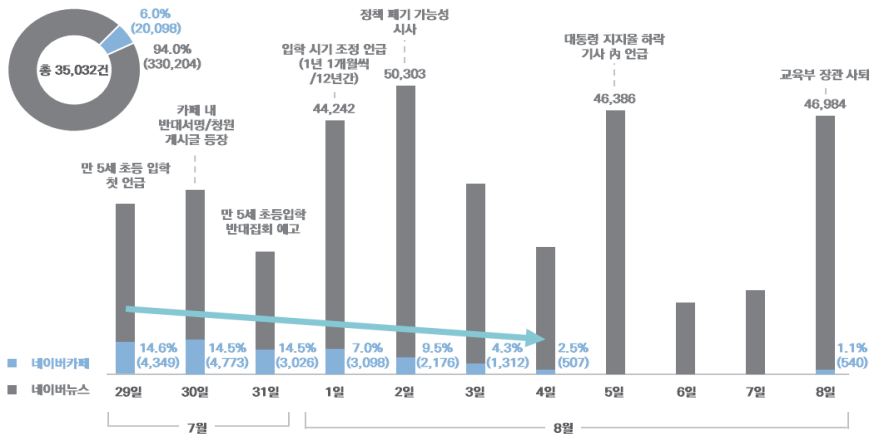
3) 만 5세 초등취학

가)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버즈 발생 현황

11일 기간 동안 만 5세 초등취학 버즈량은 350,302건으로 1년 간 72,851건의 버즈가 발생한 유보통합 대비 관심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맘카페 버즈량 역시 20,098건으로 엄마들 간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 초등 입학 발표 시점을 시작으로 관심 폭발 후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4일까지 온라인 내 꾸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8일 교육부 장관 사퇴로 정책 관련 관심 증가하였다.

[그림 III-1-11] 만5세 초등취학 관련 전체 버즈 발생량 및 발생 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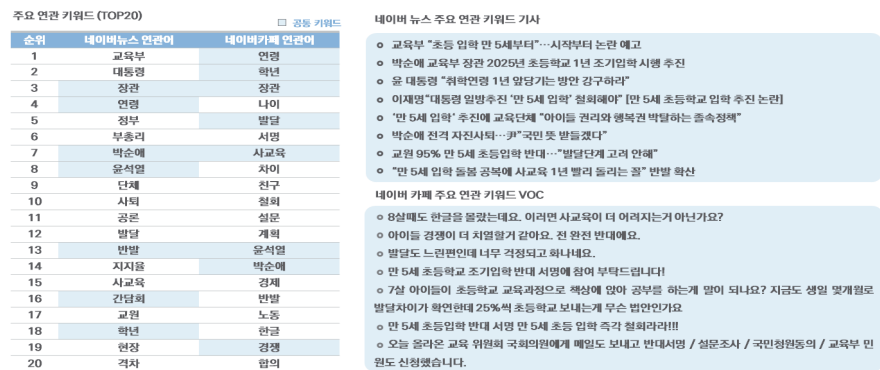


주: 분석 기간 : 2022.07.29 - 2022.08.08.

나)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관련 키워드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관련 키워드를 살펴보면, 뉴스의 경우 ‘교육부’, ‘대통령’, ‘장관’ 등의 키워드가, 카페는 ‘연령’, ‘학년’, ‘발달’, ‘나이’ 등 키워드가 상위를 차지하였다. 뉴스에서는 ‘윤석열 정부 및 교육부 만 5세 입학 정책 추진’, ‘교원 단체, 학부모 반발 여론’, ‘박순애 장관 사퇴’ 보도가 주로 나타났다. 반면, 맘카페에서는 ‘사교육 및 경쟁 심화 불안’, ‘아동 발달 수준에 안 맞는 졸속 행정 비판’, ‘정책 설문조사 및 반대서명 독려’ 등의 여론이 주로 나타났다.

[그림 III-1-12] 만5세 초등취학 연관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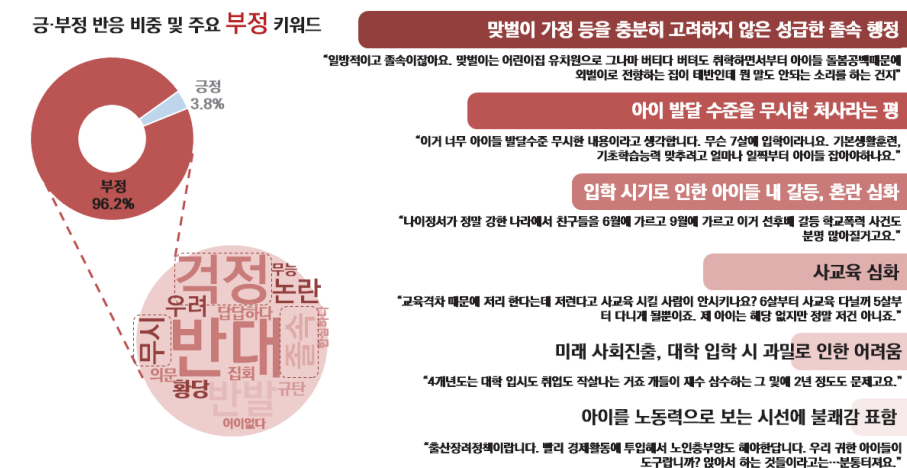


주: 분석 기간 : 2022.07.29 - 2022.08.08.

다) 만 5세 초등취학 관련 맘카페 부정 반응

만 5세 입학에 대한 부정 의견은 약 96%로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졸속 행정이라는 평가 함께 아동 발달 수준을 무시한 처사, 아동 내 갈등 심화 등 다양한 이유의 반대 의견 있었으며 이에 더해 ‘걱정’, ‘졸속’, ‘혼란’, ‘무시’ 등의 부정 키워드가 발생하였다.

[그림 III-1-13] 만 5세 초등취학 관련 맘카페 주요 의견



주: 분석 기간 : 분석 기간 : 2022.07.29 - 2022.08.08.

라) 만 5세 초등취학 이슈별 온라인 평판 변화

특히, 정책 예고 직후 반대 서명 및 집회 관련 여론 형성되었으며 입학 시기 조정 방안 발표 시점 부정 여론이 폭발하였다. 전국민적으로 불만 여론 발생하면서, 정책 폐기 가능성을 내비치자 정부 및 장관의 말바꾸기식정책에 대해 논란 가중이 되었다. 교육부 장관 사퇴 관련해 당연하다는 반응 나타났으며 정책 폐기 방향으로 흘러가자 진정되는 양상 보였다.

[그림 III-1-14] 만 5세 초등취학 주요 이슈 및 이슈별 V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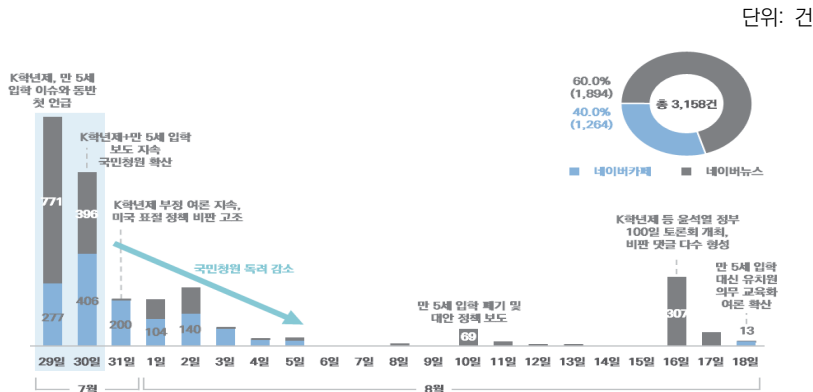
분석 기간 : 2022.07.29 - 2022.08.08

4) K학년제 및 유아의무교육

가) K학년제 및 유아의무교육 정책 버즈 발생 현황

2022년 7월 29일 이후 21일간 K학년제 관련 버즈량은 3,158건으로, 이중 맘카페 내 버즈발생은 1,264건(40.0%)이었다. K학년제에 대한 맘카페 내 관심은 뉴스 채널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차지하였다. 만 5세 입학 정책 발표 이후 해당 정책과 동반하여 K학년제 반대 여론 확산되었다. 정책 반대 국민청원 서명이 확산되었다. 2022년 8월 18일, 맘카페 내 '만 5세 입학 대신 유치원 의무 교육화' 찬성 여론 나타나며 언급량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III-1-15] K학년제 및 유아의무교육 관련 전체 버즈 발생량 및 발생 추이



주: 분석 기간 : 2022.01.01 - 2022.09.30.

나) K학년제 및 유아의무교육 정책 관련 키워드

K학년제 및 유아의무교육 정책 관련 키워드를 살펴보면, 뉴스는 ‘윤석열’, ‘민주당’, ‘격차’ 등의 키워드가, 카페는 ‘입학’, ‘선생님’, ‘영어’ 등 키워드가 상위를 차지하였다. 뉴스에서는 ‘5살 입학 대안으로 K학년제 소개’, ‘윤석열 정부 비판 여론’, ‘유아의무교육 찬성 여론 (교사 측)’보도가 주로 나타났다. 맘카페에서는 ‘사교육 심화 불안’, ‘취학 연령 하향 부담’, ‘정부 지원금 아쉬움’, ‘교사 수급 강화’ 등의 여론이 주로 나타났다.

[그림 III-1-16] K학년제 및 유아의무교육 관련 주요 연관 키워드 및 V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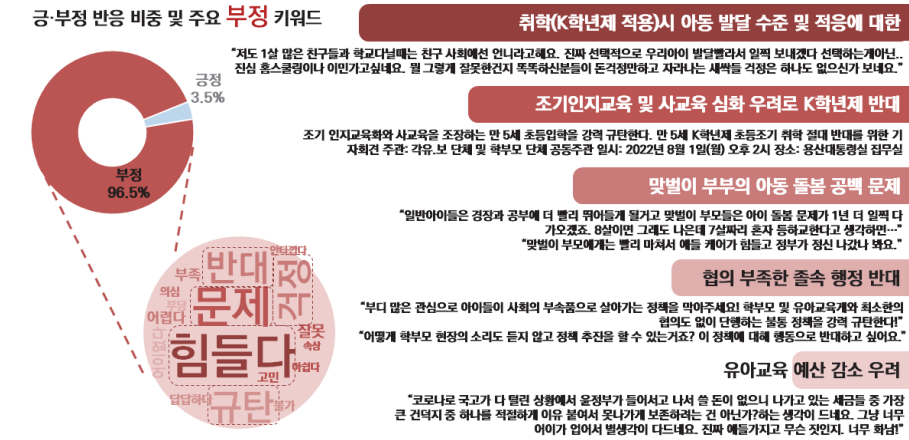
주요 연관 키워드 (TOP20)			네이버 뉴스 주요 연관 키워드 기사	
순위	네이버뉴스 연관어	네이버카페 연관어	네이버 카페 주요 연관 키워드 VOC	
1	교육	교육	○ 민주당 ‘윤석열 정부 100’ 파상공제...“역대급 무능” “성적표 초라해” ○ ‘만 5살 입학’ 논란...영유아학교 K학년제 학습 격차 해답 될까 ○ 만 5살 입학 교육 격차 해소?...“데어니자마자 사교육시킬 판” ○ 유치원 교사 10명 중 9명 “유치원 의무교육 찬성”만 5세 초등입학 대신...“유치원 의무교육 대안 열아놔야” ○ “취약계층에게도 공교육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면 유아교육 공교육화라도 충분하다” ○ 또 돌봄 확대에 따라 경기도유치원 2068개원(전체99.75%)이 다양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부모 불만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 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 “유치원 무상교육 시행”...유치원-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 네? 왜? 라는 물음표만 가득한 정책이네요. 기사를 찾아보니 공교육 강화(사교육이 강화되겠조)와 저출산대책(빨리 학교 가면 빨리 졸업해서 취업하고 그럴 빨리 결혼해서 애 낳을 거란 소리)이리는데 ○ 반편성문제, 학교 교사 수급문제, 생선인구감소문제 등 다 들어가있는 것 같아요. 20년, 21년생부터는 숫자 너무 적어서 학교운영 자체가 애매한 곳이 너무 많대요. ○ 8살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이런 좀 아니라고 봅니다. 선생님에 무슨 힘니까! 아이들은 부모들은 또 무슨 죄고요! ○ 진짜 2-3살부터 선행학습 시키겠네요 유치원이 유아원 되고 이제 영어유아원 같은게 생기는 건가요 교실에서 40분씩 수업하며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한학급의 인원 25명중 5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 초등학생들은 너무 빨리 마쳐요. 학원 안들러면 위강만들은 힘드네 방학도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해 너무 길고 ○ 1년 앞당기는데 무슨 의미인지.. 혹시 만 5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주는 정부지원금이 아까운건가 ○ 미려학 아동들이 정부에서 아동수당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늦게 데어난 아이들일수록 지원그림 더 많구요.
2	윤석열	학교		
3	학교	입학		
4	민주당	선생님		
5	격차	영어		
6	추진	수업		
7	비판	학원		
8	사교육	공부		
9	의무	학습		
10	장관	미국		
11	토론회	사교육		
12	입학	발달		
13	취학	지원		
14	지원	신청		
15	공교육	대학		
16	박용근	강쟁률		
17	무상	예산		
18	방과후	서명		
19	지역	놀이		
20	복지	언어		

주: 분석 기간 : 2022.01.01 - 2022.09.30.

다) K학년제 및 유아의무교육 정책 관련 맘카페 부정 반응

K학년제에 대한 부정율은 96.5%로 높은 수준이며, ‘힘들다’, ‘문제’, ‘반대’, ‘규탄’ 등의 부정 키워드가 다수 발생하였다. K학년제 주요 부정 의견으로 ‘아동발달 수준에 대한 걱정’, ‘사교육 심화 우려’, ‘아동 돌봄 공백 우려’, ‘협업의 부족한 졸속 행정’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그림 III-1-17] K학년제 및 유아의무교육 정책 관련 맘카페 부정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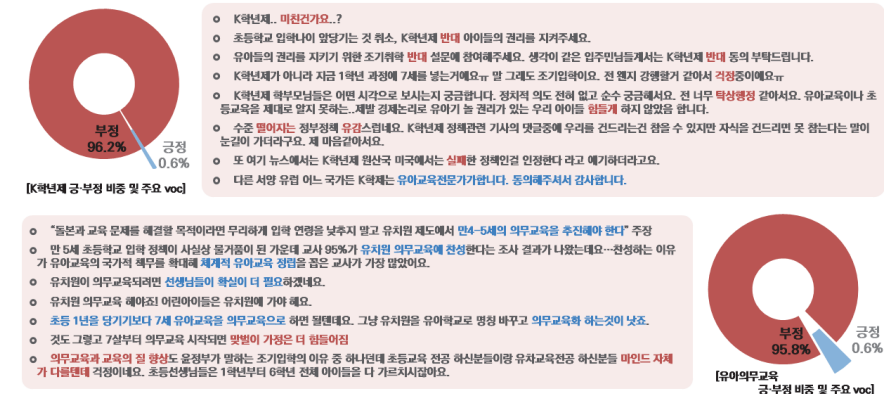


주: 분석 기간 : 2022.01.01 - 2022.09.30.

라) K학년제 vs 유아의무교육 맘카페 반응 비교

K학년제와 유아의무교육 키워드 포함 답론을 각각 별도로 추출하여 맘카페 공·부정 반응을 분석하였다. K학년제 부정 비중은 99.4%, 긍정 비중은 0.6%, 유아의 무교육 부정 비중은 95.8%, 긍정 비중은 4.2%로 분석되었다. K학년제는 유아의무 교육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나, 5살 입학제와 유사 의미로 인식되어 부정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아의무교육은 5세 입학, 전면 무상교육의 대안책으로 인식 되어 긍정이 K학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18] K학년제 및 유아의무교육 정책 관련 맘카페 공·부정 비중 및 주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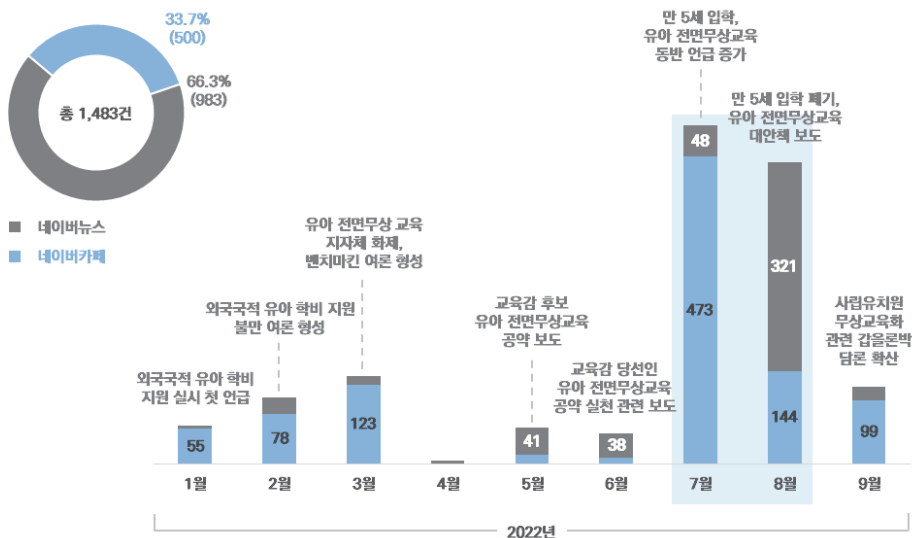
주: 분석 기간 : 2022.01.01 - 2022.09.30.

5) 유아무상교육

가) 유아무상교육 정책 버즈 발생 현황

2022년 1~9월, 유아무상교육 관련 버즈량 1,483건으로, 이 중 맘카페 내 버즈 발생은 983건(66.3%)이었다. 유아무상교육에 대한 맘카페 관심은 뉴스 채널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차지하였다. 2022년 상반기,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에 대한 불만 여론 확산되었으며, 교육감 선거 내 유아무상교육 공약 관련 보도가 다수 나타났다. 2022년 하반기, 만 5세 입학 반대 대안으로 유아 의무 및 전면 무상교육 언급이 높아졌으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화 관련 담론이 확산되었다.

[그림 III-1-19] 유아무상교육 정책 발생 버즈량 및 버즈 발생 추이



주: 분석 기간 : 2022.01.01 - 2022.09.30.

나) 유아무상교육 주요 이슈 및 의견

2022년 유아무상교육 주요 이슈는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지자체 무상교육’, ‘교육감 선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화’였다.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은 반대, 각 지자체 및 신규 교육감 유아무상교육 실시(공약)는 긍정/기대 여론이 높았다. 만 5세 초등취학 대안 측면에서 ‘유아 전면 무상교육’과 ‘유아의무교육’은 세균

증가 우려로 각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기도 하였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화 관련 재정 투명성 확보, 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 경쟁력 상향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타났다.

[그림 III-1-20] 2022년 유아 무상교육 관련 주요 이슈 및 이슈별 VOC



주: 분석 기간 : 2022.01.01 - 2022.09.30.

다) 유아무상교육 정책 관련 키워드

유아무상교육 정책 관련 키워드를 살펴보면, 뉴스의 경우 ‘교육감’, ‘지원’, ‘사립’ 등의 키워드가, 카페는 ‘지원’, ‘학습’, ‘사립’, ‘국공립’ 등 키워드가 상위를 차지하였다. 뉴스에서는 ‘교육감 선거 및 후보 공약’,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반대 여론’, ‘지자체 무상교육 실시’ 관련 보도가 주로 발생하였다. 맘카페에서는 ‘사립 무상교육화 갑론을박’, ‘지자체 무상교육 정보 공유’, ‘외국 국적 아동 지원 반대’ 등 여론이 주로 발생하였다.

[그림 III-1-21] 유아무상교육 주요 연관 키워드 및 VOC

주요 연관 키워드 (TOP20)		네이버 뉴스 주요 연관 키워드 기사
순위	네이버뉴스 연관어	네이버키워드 연관어
1	교육감	지원
2	지원	학습
3	사립	사람
4	대전	육아
5	인구	병설
6	경기	국공립
7	재정	교육비
8	전북	공약
9	공약	급식
10	공립	공교육
11	급식	사교육
12	학습	지출산
13	국적	외국
14	지출산	국적
15	공교육	서로
16	교원	윤석열
17	국공립	중설
18	사교육	교재비
19	병설	남부
20	서명	의무

네이버 뉴스 주요 연관 키워드 기사

-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 공약 '유치원 무상교육 전진적으로 실시'
- 황 전 부교육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전국평균 유아교육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서거 석 교육감 "공·사립 차별이 학생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돼"
- 대전도 이미 '데드크로스'...인구 감소 어쩌나?
- '초박빙' 경기교육감 선거 진보 VS 보수 측의 확인한 '공약 차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는 대학에 투입...교육계 '동생 돈 뺏어 형 준다'
- 인천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한국 국적의 만 5세 아동까지는 무상교육을 받는다는 것에 맞춰 외국 국적 유아들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
- 공립유치원 취원을 쏠피 대전에서 사립 유아교육비 지원? "결사반대"

네이버 카페 주요 연관 키워드 V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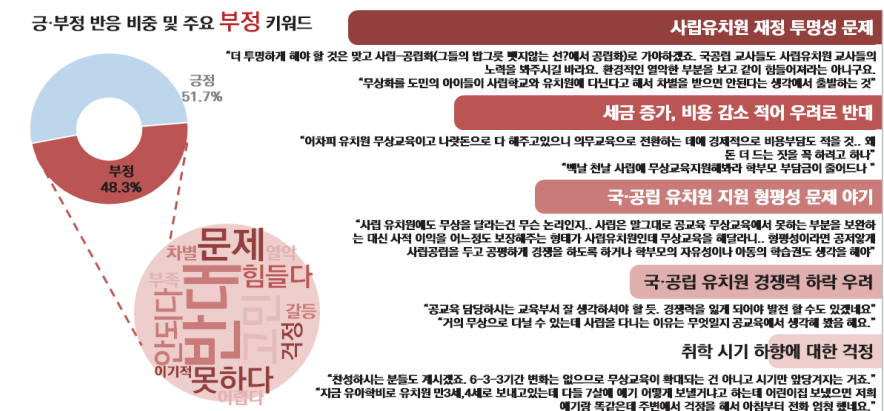
- 한 명이라도 복지 줄이려고...초등보다는 유아가 지원금 더 적고하잖아요.
- 사립 유치원에도 무상을 달라는건 무슨 논리인지. 사립은 말그대로 공교육 무상교육에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대신 사적 이익을 어느정도 보장을 해주는 형태가 사립유치원인데 무상 교육을 해달라니..
- 현재 완전한 무상교육은 아닙니다. 국공립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의 공백을 대신하고 있지요. 사립유치원 유아에게 인당 26만원씩 지원하고는 있지만 그걸로 턱없이 부족하죠.
- 없는것 같아요. 비싼 유치원비 1년? 별개지만...초등들어가면 사교육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니깐요.
- 대구도 무상교육이 유치원까지 확대가 되는군요. 당선되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공약대로시행부탁드립니다.
- 유치원비를 3년 보낼거 2년으로.. 아낄수 있다가 7살부터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그게 아니라.. 법정저소득층자립지원부모가정인데 내외국인 할거 없이 모두 다 지원해준다는 내용임요. 자세히 보면 나와있네요. 모든 외국인 아동을 지원해 준다는게 아니라 저소득층인데 외국국적이동까지 포함이라는거죠.

주: 분석 기간 : 2022.01.01 - 2022.09.30.

라) 유아무상교육 정책 관련 맘카페 부정 반응

유아무상교육에 대한 부정율은 48.3% 수준이며, '반대', '고민', '문제', '걱정' 등의 부정 키워드가 발생하였다. 유아무상교육 관련 부정 의견으로 '사립유치원 재정 투명성 문제', '세금 증가', '공립유치원 형평성 문제', '국공립유치원 경쟁력 하락' 등의 의견이 발생하였다.

[그림 III-1-22] 유아무상교육 관련 맘카페 주요 부정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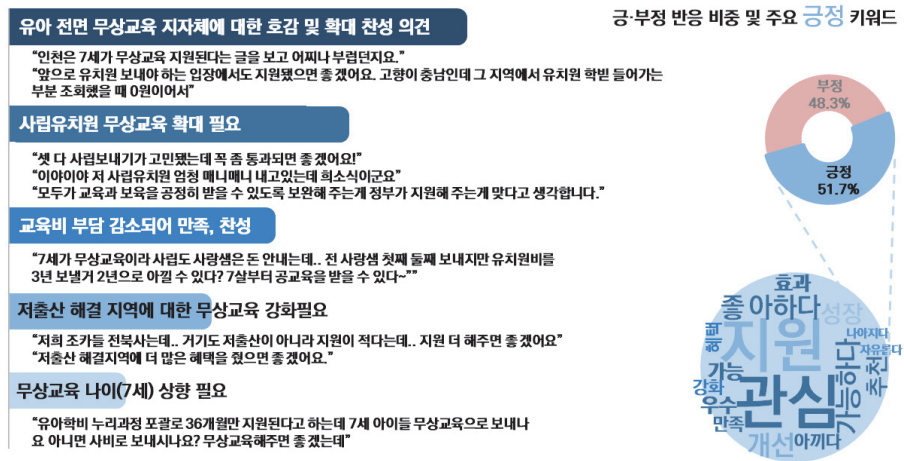


주: 분석 기간 : 2022.01.01 - 2022.09.30.

마) 유아무상교육 정책 관련 맘카페 긍정 반응

유아무상교육에 대한 긍정율은 51.7% 수준이며, ‘지원’, ‘관심’, ‘좋아하다’, ‘개선’ 등의 긍정 키워드가 발생하였다. 유아무상교육 관련 긍정 의견으로 ‘지자체 및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필요’, ‘유아교육비 부담 감소’, ‘저출산해결지역 무상교육 강화’, ‘무상교육 나이 상향’ 등 의견이 발생하였다.

[그림 III-1-23] 유아무상교육 관련 맘카페 주요 긍정 의견



주: 분석 기간 : 2022.01.01 - 2022.09.30.

다. 요약 및 결론

첫째, 최근 1년간 유보통합 버즈량은 72,851건, 반면 8월 11일간 만 5세 초 등취학 버즈량은 350,302건으로 온라인 맘카페 내 만 5세 초등취학 관련 관심도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유보통합은 만 5세 입학 발표 이전까지 버즈량이 10,783건으로 적은 편이었으나 만 5세 입학 발표 이후 버즈량이 7만 건대로 급등하였다(긍정비중 - 3월 : 35.2%/4월 48.7%/ 5월 54.8%).

둘째, 유보통합, 정책 발표 이후 부정 여론에서 긍정적 여론으로 변화하는 추세 보였으나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발표와 함께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부정 비중- 7월 68.0%).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수준의 향상으로 질 높은 교육 가능, 어린이집 지원 증가에 대한 기대 등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부정 의견

으로는 교사 일원화로 인한 교육 질 하락, 유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평, 유치원 교사 역차별 논란 등이 있었다.

셋째, 만 5세 초등취학 관련, 맘카페 내 부정 평가 약 96%로 불만 여론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돌봄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만5세는 입학하기에 이른 나이라는 평, 사교육 심화 우려 등 다양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

넷째, K학년제는 만5세 입학제와 동일시되며, 약 96%의 높은 부정 평가 나타났다. K학년제는 아동 발달 수준에 대한 걱정, 사교육 심화, 아동 돌봄 공백 우려를 원인으로 반대 여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 K학년제가 의무교육을 골자로 함에도 불구하고, ‘유아의무교육’ 키워드는 K학년제 대비 긍정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만 5세 입학의 대안책으로 여겨졌다(부정 비중 - K학년제 : 99.4%, 유아의무교육: 95.8%).

다섯째, 유아무상교육은 타 학제 개편 정책 대비 긍정 인식이 약 52%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아무상교육은 타 정책 대비 긍정 인식 높으나, 재정 투명성 확보, 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 경쟁력 향상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유아 전면 무상교육’과 ‘유아의무교육’은 세금 증가 우려로 각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

가. 응답자 특성

총 987명의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부와 모의 연령 모두 30대가 각각 59.7%, 68.5%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64.3%는 맞벌이였으며, 35.7%는 아니었다. 응답자의 자녀 수는 1명이 47.0%, 2명이 44.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자녀의 연령은 만 5세 30.0%, 만 4세 27.9%, 만 3세 21.4% 순이었으며, 자녀의 출생 순위는 첫째가 73.5%로 가장 많았다.

현재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국공립유치원이 25.8%, 사립유치원이 25.2%, 국공립어린이집이 23.8%, 민간 어린이집이 13.8%이었다. 자녀의 현재 기관 이용 기간은 1년이상~2년 미만인 3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은 1년 미만은 31.6%였다. 또한 자녀의 현재 기관 이용 시간은 50.7%의 절반 이상이 7시간 이상~9시간 미만이었으며, 그 뒤를 30.2%의 5시간 이상~7시간 미만이었다.

〈표 III-2-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특성		빈도(비율)	특성		빈도(비율)
전체		987(100.0)	전체		987(100.0)
부의 연령	20대	24(2.4)	해당 자녀의 현재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312(31.6)
	30대	589(59.7)		1년 이상 ~2년 미만	381(38.6)
	40대	367(37.2)		2년 이상 ~3년 미만	210(21.3)
	50대	7(0.7)		3년 이상 ~4년 미만	54(5.5)
				4년 이상	30(3.0)
모의 연령	20대	55(5.6)	해당 자녀의 현재 기관 이용 시간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30(3.0)
	30대	676(68.5)		5시간 이상 ~7시간 미만	298(30.2)
	40대	256(25.9)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	500(50.7)
	50대	0(0.0)		9시간 이상	159(16.1)
응답자 맞벌이 여부	예	635(64.3)	해당 자녀의 출생 순위	첫째 자녀	725(73.5)
	아니오	352(35.7)		둘째 자녀	224(22.7)
				셋째 자녀	35(3.5)
				넷째 자녀 이상	3(0.3)
해당 자녀의 연령	만 0세	25(2.5)	현재 해당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	국공립유치원	255(25.8)
	만 1세	72(7.3)		사립유치원	249(25.2)
	만 2세	105(10.6)		국공립어린이집	235(23.8)
	만 3세	211(21.4)		민간어린이집	136(13.8)
	만 4세	275(27.9)		가정어린이집	51(5.2)
	만 5세	296(30.0)		직장어린이집	47(4.8)
	만 6세	3(0.3)		법인 또는 단체 어린이집	13(1.3)
				협동 어린이집	1(0.1)

현재 재원 중인 기관 선택 시 1순위로 고려했던 사항으로는 통학(접근성 및 차량 등)이 편함(24.6%), 교육(보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질이 우수함(16.5%), 교직원 이 아이들을 사랑함(10.6%)였다. 2순위로 고려했던 사항 역시 통학(접근성 및 차량 등)이 편함(15.4%), 교육(보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질이 우수함(12.9%), 교직원이 아이들을 사랑함(12.8%) 순이었다. 반면, 현재 재원 중이 기관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는 별다른 불편함 없음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주말, 휴일, 응급시 돌봄이 부족함(9.0%), 하원이 불편함(차량 미운행, 통학이 어려움 등)(8.8%)이 그 뒤를 이었다.

〈표 III-2-2〉 현재 재원 중인 기관 선택 이유 및 이용시 불편한 점

단위: 명(%)

특성		빈도(비율)
전체		987(100.0)
현재 재원 중인 기관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 (1순위)	부모 부담 비용이 적절함	64(6.5)
	이용시간이 적절함	70(7.1)
	원장 또는 교사의 전문성이 우수함	81(8.2)
	교직원이 아이들을 사랑함	105(10.6)
	교육(보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질이 우수함	163(16.5)
	방과후/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발레, 과학 등) 운영이 우수함	38(3.9)
	방과후/오후 돌봄 운영이 적절함	74(7.5)
	교재교구 및 시설, 설비가 안전하고 우수함	55(5.6)
	양질의 급간식 제공	36(3.6)
	통학(접근성 및 차량 등)이 편함	243(24.6)
	형제 자매가 함께 방과후 돌봄을 이용할 수 있음	30(3.0)
	선택의 여지가 없음	19(1.9)
	기타	9(0.9)
현재 재원 중인 기관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 (2순위)	부모 부담 비용이 적절함	97(9.8)
	이용시간이 적절함	70(7.1)
	원장 또는 교사의 전문성이 우수함	88(8.9)
	교직원이 아이들을 사랑함	126(12.8)
	교육(보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질이 우수함	127(12.9)
	방과후/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발레, 과학 등) 운영이 우수함	48(4.9)
	방과후/오후 돌봄 운영이 적절함	57(5.8)
	교재교구 및 시설, 설비가 안전하고 우수함	73(7.4)
	양질의 급간식 제공	57(5.8)

특성		빈도(비율)
	통학(접근성 및 차량 등)이 편함	152(15.4)
	형제 자매가 함께 방과후 돌봄을 이용할 수 있음	26(2.6)
	선택의 여지가 없음	1(0.1)
	기타	2(0.2)
	응답 없음	63(6.4)
현재 재원 중인 기관 이용시 불편한 점	하원이 불편함(차량 미운행, 통학이 어려움 등)	87(8.8)
	교육비(보육비)가 부담됨	63(6.4)
	이용시간이 불편함	32(3.2)
	원장 또는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함	32(3.2)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질이 낮음	37(3.7)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발레, 과학 등)이 불편함	68(6.9)
	방과후 돌봄/오후 돌봄 이용이 불편함	42(4.3)
	교재교구 및 시설, 설비가 미비함	43(4.4)
	급간식의 질이 낮음	32(3.2)
	형제 자매가 함께 이용할 수 없음	26(2.6)
	주말, 휴일, 응급시 돌봄이 부족함	89(9.0)
	별다른 불편함이 없음	427(43.3)
	기타	9(0.9)

나.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가장 큰 차이에 대한 문항에서 1순위로는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이 29.8%, 교사의 질과 자격, 보낼 수 있는 연령이 14.9%, 주관부처가 11.9%를 차지하였다. 2순위로는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이 18.2%, 교사의 질과 자격이 15.9%, 비용이 11.6%를 차지하였다.

〈표 III-2-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에 대한 인식

항목	1순위	2순위
주관부처	117(11.9)	112(11.3)
운영시간	72(7.3)	86(8.7)
교사의 질과 자격	147(14.9)	157(15.9)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294(29.8)	180(18.2)
비용	75(7.6)	114(11.6)
시설 환경	83(8.4)	104(10.5)

항목	1순위	2순위
보낼 수 있는 연령	147(14.9)	113(11.4)
기관 입소(방학) 방식	48(4.9)	55(5.6)
기타	4(0.4)	2(0.2)
응답 없음	0(0.0)	64(6.5)
전체	987(100.0)	

앞서 현재 재원 중인 기관 이용시 불편한 점의 답변에서 '별다른 불편함이 없음'이 43.3%로 가장 높게 답변되었으나 제도개선을 위해 불편한점을 느끼는 경우의 어려움을 살펴 볼 수 있는 항목이 필요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구분되어 있어 가장 크게 불편한 점으로는 동일한 연령(만 3-5세)임에도 두 기관의 이용시간과 비용, 교사 등의 차이가 있어 불공평함이 3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두 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부 보조금 카드와 운영체계가 달라 기관을 옮길 때 불편함 (18.0%), 두 기관 모두 만 3-5세를 담당하기에 기관 선택시 혼란스러움 (16.2%)이 그 뒤를 이었다.

〈표 III-2-4〉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구분되어 있어 불편한 이유

항목	빈도(비율)
이용 가능한 연령 차이로 형제자매가 다른 기관을 이용해야 함	155(15.7)
두 기관 모두 만 3-5세를 담당하기에 기관 선택시 혼란스러움	160(16.2)
동일한 연령(만 3-5세)임에도 두 기관의 이용시간과 비용, 교사 등의 차이가 있어 불공평함	343(34.8)
두 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부 보조금 카드와 운영체계가 달라 기관을 옮길 때 불편함	178(18.0)
입학(입소)방식이 달라 구분해서 신청해야 함	118(12.0)
기타	33(3.3)
전체	987(100.0)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단계적 유보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1.7%,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48.3%였다.

〈표 III-2-5〉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단계적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항목	빈도(비율)
들어본 적 있다	510(51.7)
들어본 적이 없다	477(48.3)
전체	987(100.0)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38.4%,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40.3%,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21.3%였다. 통합에 찬성하는 1순위와 2순위 이유에는 모든 유아가 평등하게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므로가 각각 10.7%, 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에는 1순위와 2순위 모두 유보통합을 통해 현재보다 교육보육 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가 각각 16.6%, 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통합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1순위와 2순위 모두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정확하게 모르겠음, 정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순서였다.

〈표 III-2-6〉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찬반 입장 및 이유

항목		빈도(비율)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대한 입장	예	379(38.4)	
	아니오	398(40.3)	
	모르겠다	210(21.3)	
	전체	987(100.0)	
항목		1순위	2순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	모든 유아가 평등하게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므로	106(10.7)	90(9.1)
	교원 자격을 갖춘 양질의 교사에게 믿고 맡길 수 있으므로	57(5.8)	62(6.3)
	행재정 통합을 통해 전달체계와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므로	61(6.2)	65(6.6)
	부모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므로	22(2.2)	27(2.7)
	이용시간이 동일해지므로	19(1.9)	20(2.0)
	정부지원금이 동일해지므로	20(2.0)	20(2.0)
	교사대 아동비율이 동일해지므로	9(0.9)	17(1.7)
	이용가능한 연령이 동일해지므로(만 0-5세)	49(5.0)	30(3.0)
	교사의 자격과 처우가 동일해지므로	36(3.6)	27(2.7)
	기타	0(0.0)	0(0.0)
	소계	379(38.4)	358(36.3)
	응답 없음	608(61.6)	629(63.7)
	전체	987(100.0)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반대하는	현재도 선택할 수 있는 이용시간이 다양함	18(1.8)	13(1.3)
	현재도 선택할 수 있는 이용 비용이 다양함	12(1.2)	16(1.6)

이유	현재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받음	32(3.2)	37(3.7)
	현재도 질 높은 교사를 확보하고 있음	29(2.9)	22(2.2)
	현재도 시설설비가 좋기 때문임	10(1.0)	7(0.7)
	유보통합을 통해 현재보다 교육보육 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	164(16.6)	94(9.5)
	현행에 만족함	55(5.6)	48(4.9)
	기관의 다양성의 폭일 줄어들 것을 우려	73(7.4)	90(9.1)
	기타	5(0.5)	8(0.8)
	소계	398(40.3)	335(33.9)
	응답 없음	589(59.7)	652(66.1)
	전체	987(100.0)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잘 모르겠 다고 답한 이유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정확하게 모르겠음	73(7.4)	59(6.0)
	유보통합 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많을 것 같음	21(2.1)	35(3.5)
	유보통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음	55(5.6)	33(3.3)
	정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61(6.2)	36(3.6)
	기타	0(0.0)	0(0.0)
	소계	210(21.3)	163(16.5)
	응답 없음	777(78.7)	824(83.5)
	전체	987(100.0)	

유보통합 시 가장 우선적으로 동일하게 되길 바라는 1순위 항목은 교사 자격기준과 처우 수준 (23.4%), 교사대 영유아비율 (22.8%), 부모 비용 부담 (13.6%) 순이었다. 2순위 항목은 교사대 영유아비율 (18.4%), 교사 자격기준과 처우 수준 (16.1%), 부모 비용 부담 (14.6) 순이었다.

〈표 III-2-7〉 유보통합시 가장 우선적으로 동일화를 바라는 항목

항목	1순위	2순위
이용 가능 연령	69(7.0)	63(6.4)
부모 비용 부담	134(13.6)	144(14.6)
정부지원금액	122(12.4)	141(14.3)
연간운영일수(방학 등)	92(9.3)	90(9.1)
교사 자격기준과 처우 수준	231(23.4)	159(16.1)
교사대 영유아비율	225(22.8)	182(18.4)
시설 설비기준	38(3.9)	76(7.7)

항목	1순위	2순위
기타	9(0.9)	3(0.3)
응답 없음	0(0.0)	43(4.4)
전체	987(100.0)	

유보통합시 연령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통합으로는 만0-5세 교육부에서 모두 통합이 3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만3-5세 유아교육(교육부), 만0-2세(복지부 또는 타부처)로 연령별 이원화가 33.5%, 만 4-5세 유아교육(교육부)(의무교육), 만0-3세(복지부 또는 타부처)로 연령별 이원화가 28.8%였다.

〈표 III-2-8〉 유보통합시 연령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통합 형태 선호도

항목	비율(빈도)
만 0-5세 교육부에서 모두 통합	357(36.2)
만 3-5세 유아교육(교육부), 만 0-2세(복지부 또는 타부처)로 연령별 이원화	331(33.5)
만 4-5세 유아교육(교육부)(의무교육), 만 0-3세(복지부 또는 타부처)로 연령별 이원화	284(28.8)
기타	15(1.5)
전체	987(100.0)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11.4%, 동의하지 않는다는 17.0%, 보통이다 33.4%, 동의한다 29.3%, 매우 동의한다 8.9%였다. 동의하는 의견(29.3%)이 동의하지 않는 의견(17.0%) 보다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는 있으나, ‘보통이다(33.4%)’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것이 현재에 대한 만족 혹은 적응 상태에 대해 조사가 필요함을 미루어 볼 수 있다. 전체 평균은 3.07점이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유형에 따라서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치원은 평균이 3.08점, 어린이집은 평균이 3.0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유치원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9〉 (영)유아학교 명칭 선호도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1.4	17.0	33.4	29.3	8.8	3.07	1.127	
유치원	11.7	16.5	31	33.7	7.1	3.08	1.119	0.326
어린이집	11.2	17.6	36	24.6	10.6	3.06	1.136	

(영)유아학교 명칭에 동의하지 않는 1순위 이유로는 학교라는 명칭 자체가 영아 돌봄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가 20.4%, 2순위 이유로는 학교는 공부만 가르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인가 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영)유아학교 명칭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부로 통합이 되면 학교 정체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므로가 1순위, 2순위 모두에서 각각 17.5%, 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II-2-10〉 (영)유아학교 명칭 선호도에 따른 이유

항목		1순위	2순위
(영)유아학교 명칭에 동의하는 이유	교육부 산하 상급학교와 연계를 위해서 (영)유아학교로 불리는 것이 적합하다	71(7.2)	81(8.2)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	49(5.0)	52(5.3)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부로 통합이 되면 학교 정체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영)유아학교라고 불리는 것이 적합하다	173(17.5)	83(8.4)
	유아들을 위한 학교라는 명칭은 헌법에 명시된 유아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강조하기에 적합하다	82(8.3)	80(8.1)
	기타	1(0.1)	0(0.0)
	응답 없음	0(0.0)	691(70.0)
	전체	987(100.0)	
(영)유아학교 명칭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학교라는 명칭 자체가 영아 돌봄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201(20.4)	31(3.1)
	학교는 공부만 가르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41(4.2)	84(8.5)
	새로운 더 나은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시대에 맞기 때문에	29(2.9)	30(3.0)
	기타	10(1.0)	6(0.6)
	응답 없음	0(0.0)	836(84.7)
	전체	987(100.0)	

(영)유아학교 구축 시 가장 기대되는 점 1순위로는 유아교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화 실현이 27.0%, 영유아의 교육권과 평등권 보장이 15.9%, 양질의 교원 시스템 구축이 15.7%를 차지하였다. 2순위로는 유아교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화 실현이 21.3%, 양질의 교원 시스템 구축이 15.8%, 영유아의 교육권과 평등권 보장이 13.9%를 차지하였다.

반면, (영)유아학교 구축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영아는 교육보다 돌봄이 더 중요하므로가 각각 38.1%, 2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순위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의 유연한 연계가 제대로 실현될지 여부 (21.1%), 영아보육, 시간제 보육 등의 기존 보육 서비스의 유연한 연계 (15.9%)가, 2순위에서는 경직된 학습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우려 (19.3%), 영아보육, 시간제 보육 등의 기존 보육 서비스의 유연한 연계 (18.4%)가 그 뒤를 이었다.

〈표 III-2-11〉 (영)유아학교 구축시 가장 기대되는 점

항목		1순위	2순위
(영)유아학교 구축시 가장 기대되는 점	영유아의 교육권과 평등권 보장	157(15.9)	137(13.9)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의 실현	33(3.3)	34(3.4)
	양질의 교원 시스템 구축	155(15.7)	156(15.8)
	영아의 교육기능 강화	96(9.7)	88(8.9)
	영유아단계 기간학제화를 위한 기초를 구축(무상, 의무교육)	150(15.2)	170(17.2)
	유아교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화 실현	266(27.0)	210(21.3)
	유치원 명의 일제 잔재 청산	43(4.4)	45(4.6)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학교 체제 구축(디지털, 기후위기교육 등)	62(6.3)	58(5.9)
	기타	25(2.5)	2(0.2)
	응답 없음	0(0.0)	87(8.8)
전체		987(100.0)	
(영)유아학교 구축시 가장 우려되는 점	영아보육, 시간제 보육 등의 기존 보육 서비스의 유연한 연계	157(15.9)	182(18.4)
	경직된 학습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우려	135(13.7)	190(19.3)
	만 0-2세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등 가정보육시설의 학교 제도화	103(10.4)	162(16.4)

항목		1순위	2순위
	관계부처 합동의 유연한 연계가 제대로 실현될지 여부	208(21.1)	175(17.7)
	영아는 교육보다 돌봄이 더 중요하므로	376(38.1)	198(20.1)
	기타	8(0.8)	4(0.4)
	응답 없음	0(0.0)	76(7.7)
	전체	987(100.0)	

(영)유아학교 구축시 담임교사가 갖추었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로는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아이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 인성이 좋은 교사, 영유아교육 전문성이 높은 교사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영)유아학교 구축시 3-5세반 교사의 학력으로는 4년제대졸 (56.6%), 전문대졸 (19.0%) 순으로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학력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18.4%였다. 또한 (영)유아학교 구축시 0-2세반 교사의 학력으로는 4년제대졸 (42.6%), 전문대졸 (27.8%) 순으로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학력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23.6%였다.

담임교사는 몇 명의 유아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만 0-1세 영아의 양육자는 3명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2.78명이었다. 만 2세 영아의 경우 평균 4.71명, 만 3세 유아의 경우 평균 7.56명, 만 4세 유아의 경우 평균 9.43명이 교사 1인이 담당하기에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의 유아의 양육자는 15명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10.66명이었다.

〈표 III-2-12〉 (영)유아학교 구축시 담임 교사 자격 조건 선호도

항목		1순위	2순위
(영)유아학교 구축시 담임 교사의 자질 선호도	영유아교육 전문성이 높은 교사	213(21.6)	219(22.2)
	경력이 많은 교사	33(3.3)	35(3.5)
	인성이 좋은 교사	232(23.5)	238(24.1)
	아이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	384(38.9)	290(29.4)
	학력이 높은 교사	23(2.3)	24(2.4)
	부모와 소통을 잘하는 교사	68(6.9)	126(12.8)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교사(외국어 등)	30(3.0)	27(2.7)
	기타	4(0.4)	5(0.5)
	응답 없음	0(0.0)	23(2.3)
	전체	987(100.0)	

항목		비율(빈도)	
(영)유아학교 구축시 담임 교사의 학력 선호도 (3~5세반)	고졸	7(0.7)	
	전문대졸	188(19.0)	
	4년제대졸	559(56.6)	
	대학원졸	51(5.2)	
	학력은 중요하지 않음	182(18.4)	
	전체	987(100.0)	
(영)유아학교 구축시 담임 교사의 학력 선호도 (0~2세반)	고졸	11(1.1)	
	전문대졸	274(27.8)	
	4년제대졸	420(42.6)	
	대학원졸	49(5.0)	
	학력은 중요하지 않음	233(23.6)	
	전체	987(100.0)	
항목		최빈값	평균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적당한 유아의 수	만0~1세 영아	3	2.78
	만2세 영아	5	4.71
	만3세 유아	5	7.56
	만4세 유아	10	9.43
	만5세 유아	15	10.66

교육과 보육 내용을 개선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순위에는 인성교육이 1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놀이중심 교육활동 (14.3%), 사회정서 교육 (12.5%)가 차지하였다. 2순위는 실외 활동 (13.8%), 사회정서 교육 (13.2%), 인성교육 (12.8%)이, 3순위는 사회정서 교육 (12.9%), 실외활동 (11.1%), 인성교육 (9.7%) 순이었다.

〈표 III-2-13〉 교육과 보육 내용을 개선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한글교육	34(3.4)	39(4.0)	28(2.8)
수과학교육	12(1.2)	13(1.3)	19(1.9)
문화예술교육	18(1.8)	26(2.6)	29(2.9)
기본생활습관 교육	114(11.6)	109(11.0)	92(9.3)
사회정서 교육(또래관계 지원)	123(12.5)	130(13.2)	127(12.9)
인성교육	169(17.1)	126(12.8)	96(9.7)
세계(민주)시민교육	11(1.1)	7(0.7)	14(1.4)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지속발전가능교육	24(2.4)	27(2.7)	21(2.1)
다문화교육	8(0.8)	13(1.3)	6(0.6)
놀이중심 교육활동	141(14.3)	117(11.9)	93(9.4)
실외 활동(바깥놀이,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	110(11.1)	136(13.8)	110(11.1)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58(5.9)	74(7.5)	68(6.9)
초등연계 교육(학교준비교육)	60(6.1)	54(5.5)	58(5.9)
창의성교육	75(7.6)	81(8.2)	68(6.9)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28(2.8)	20(2.0)	14(1.4)
기타	2(0.2)	0(0.0)	1(0.1)
응답 없음	0(0.0)	15(1.5)	143(14.5)
전체	987(100.0)		

놀이중심 유아중심 누리과정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1.4%, 만족하지 않는다는 3.7%, 보통이다 31.6, 만족한다 42.1%, 매우 만족한다 19.3%였다. 전체 평균은 3.80점이었다. 보통에서부터 만족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유형에 따라서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치는 평균이 3.82점, 어린이집은 평균이 3.7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유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놀이중심 유아중심 누리과정을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는 놀이가 학습과 배움으로 연결되는지 확인이 잘 안됨이 2.3%, 놀이중심으로 하다보니 초등준비(한글, 수셈하기 등)가 잘 안될 것 같음 1.1%를 차지하였다.

〈표 III-2-14〉 놀이중심 유아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잘 모르겠다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4	3.7	31.6	42.1	19.3	1.8	3.80	0.904	
유치원	1.4	3.6	29.4	43.3	22.4	0	3.82	0.868	0.785
어린이집	1.4	3.9	34	41	15.9	3.7	3.77	0.941	

(영)유아학교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개편에 관해서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운영의 지역화, 다양화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32.0%로 가장 많았다.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전면 무상은 20.5%를,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2교사 배치는 17.2%였다.

〈표 III-2-15〉 놀이중심 유아중심 누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항목	빈도(비율)
누리과정은 모든 기관에서 하므로 특색이 없고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느껴짐	7(0.7)
놀이중심으로 하다보니 초등준비(한글, 수셈하기 등)가 잘 안될 것 같음	11(1.1)
놀이가 학습과 배움으로 연결되는지 확인이 잘 안됨	23(2.3)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과후에 추가 학습이 필요함	1(0.1)
누리과정 운영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후에 돌봄이나 학원을 선택해야함	1(0.1)
교육과정에 미래대응 요소가 부족함	4(0.4)
기타	4(0.4)
응답 없음	936(94.8)
전체	987(100.0)

〈표 III-2-16〉 (영)유아학교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개편에 대한 선호도

항목	빈도(비율)
온종일 교육+보호 체제로 구성	115(11.7)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운영의 지역화, 다양화(돌봄, 특성화, 오후반 등 운영체계의 다양화)	316(32.0)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교사 자격의 상향화	135(13.7)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2교사 배치	170(17.2)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전면 무상(프로그램, 급간식 등)	202(20.5)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후 하원시 차량 지원	40(4.1)
기타	9(0.9)
전체	987(100.0)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이 잘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한 비중은 34.1%, 잘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비중은 65.9%였다. 잘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1순위 이유에서는 유보통합 정책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정이 어려울 것이므로가 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유보통합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19.0%), 유보통합 자체가 어려운 과제이므로 (13.0%)가 그 뒤를 이었다. 2순위 이유 역시 유보통합 정책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정이 어려울 것이므로 (18.0%), 유보통합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15.9%), 유보통합 자체가 어려운 과제이므로 (7.3%) 순이었다. 단계적 유보통합이 잘 추진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1순위에는 유아교육과 돌

봄, 양육을 포괄하는 범부처 통합 시스템 구축 (24.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외에도 실현가능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20.9%), 국민들의 합의 도출 (16.3%)이 있었다. 2순위 역시 유아교육과 돌봄, 양육을 포괄하는 범부처 통합 시스템 구축 (22.6%), 실현가능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19.5%), 국민들의 합의 도출 (12.2%) 순이었다.

〈표 III-2-17〉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항목		빈도(비율)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	잘 추진될 것이다	337(34.1)	
	잘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650(65.9)	
	전체	987(100.0)	
항목		1순위	2순위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이 잘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	유보통합 자체가 어려운 과제이므로	128(13.0)	72(7.3)
	유보통합 정책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정이 어려울 것이므로	219(22.2)	178(18.0)
	유보통합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188(19.0)	157(15.9)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49(5.0)	50(5.1)
	정부의 정책추진력(속도와 방향 등)을 보다 높여야 하기 때문에	54(5.5)	55(5.6)
	기타	12(1.2)	8(0.8)
	응답 없음	337(34.1)	467(47.3)
	전체	987(100.0)	
항목		1순위	2순위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이 잘 추진되기 위해 선행해야 할 것	핵심관계계자들간의 정책 목표의 공유 및 내면화	61(6.2)	73(7.4)
	국민들의 합의 도출	161(16.3)	120(12.2)
	정부의 의지와 유능함	85(8.6)	97(9.8)
	유아교육과 돌봄, 양육을 포괄하는 범부처 통합 시스템 구축	241(24.4)	223(22.6)
	부처간 긴밀한 협력과 갈등의 최소화	126(12.8)	115(11.7)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의 유능한 조정	97(9.8)	100(10.1)
	실현가능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206(20.9)	192(19.5)
	기타	10(1.0)	3(0.3)
	응답 없음	0(0.0)	64(6.5)
	전체	987(100.0)	

다.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의 대안 모색: 학제개편 및 무상의무교육

만 5세를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하향화하는 학제개편에 대해서 매우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60.5%, 반대한다는 18.7%, 찬성한다 9.8%, 매우 찬성한다 6.4%, 모르겠다 4.6%였다.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관 유형에 따라 학제개편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없었다.

학제개편에 반대하는 1순위 이유에는 놀이를 통해 가장 잘 배우는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31.8%), 학부모, 유아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21.7%) 순으로, 2순위 이유에는 학부모, 유아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19.3%), 놀이를 통해 가장 잘 배우는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18.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학제개편에 찬성하는 1순위 이유에는 유치원 만 5세반 유아는 과거 초등학교 1학년과 비슷한 언어신체 발달을 보이는 듯 하므로, 해외에서 만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해도 무리가 없었으므로가 2.9%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순위 위 이유는 해외에서 만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해도 무리가 없었으므로(2.8%), 유초등생과 청소년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이 빨라졌기 때문에와 입직연령이 너무 느려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2.4%)순이었다.

〈표 III-2-18〉 학제개편에 대한 인식 및 이유

구분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모르겠다	x2
전체	60.5	18.7	9.8	6.4	4.6	2.222
유치원	60.3	17.7	10.1	7.3	4.6	
어린이집	60.7	19.9	9.5	5.4	4.6	
항목					1순위	2순위
학제개편에 찬성하는 이유	학제와 교사양성과정, 교육과정제도가 상호 불일치하므로				18(1.8)	17(1.7)
	유초등생과 청소년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이 빨라졌기 때문에				22(2.2)	24(2.4)
	유치원 만 5세반 유아는 과거 초등학교 1학년과 비슷한 언어신체 발달을 보이는 듯 하므로				29(2.9)	23(2.3)
	해외에서 만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해도 무리가 없었으므로				29(2.9)	28(2.8)
	한글교육과 수셈하기 등의 기초학습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어디에서 지도해야할지 불분명하므로				24(2.4)	20(2.0)
	입직연령이 너무 느려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20(2.0)	24(2.4)
	고등학생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만 17세 이전에 조기 졸업을 해야하므로				18(1.8)	13(1.3)

학제개편에 반대하는 이유	기타	0(0.0)	0(0.0)
	응답 없음	827(83.8)	838(84.9)
	전체	987(100.0)	
	놀이를 통해 가장 잘 배우는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314(31.8)	179(18.1)
	학부모, 유아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214(21.7)	190(19.3)
	이미 만 3-5세 유아교육은 공교육이므로	36(3.6)	56(5.7)
	공약이나 국정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9(0.9)	8(0.8)
	특정연령 학생들(유아들)을 25%씩 분할하여 정원을 늘려 입학하게 되면 해당 학생들(유아들)에게 불이익이 되어서	76(7.7)	75(7.6)
	초등준비로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110(11.1)	138(14.0)
	장애 및 위험군 영유아의 입학유예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19(1.9)	27(2.7)
	기타	4(0.4)	13(1.3)
	응답 없음	205(20.8)	301(30.5)
	전체	987(100.0)	

우리나라 현행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43.9%,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56.1%였다. 만 3-5세 유아단계를 기본 학제에 포함하는 것을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21.8%, 적합하지 않다는 24.7%, 보통이다 29.8%, 적합하다 18.1%, 매우 적합하다 5.6%였다. 대다수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2.61점이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유형에 따라서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치원은 평균이 2.64점, 어린이집은 평균이 2.5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유치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만 3-5세 유아단계를 기본 학제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한 1순위 이유에는 유아의 놀이할 권리가 침해당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22.3%)가, 2순위 이유에는 기본학제화하면 의무교육화되고 취학의무(강제성)가 생기므로(11.4%)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만 3-5세 유아단계를 기본 학제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1순위 이유는 기본생활습관, 인성교육, 생활교육 등을 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실천함(6.8%), 유아의 교육권, 학습권, 평등권 등이 확실히 보장됨(6.2%) 순이었다. 또한,

2순위 이유는 유아의 교육권, 학습권, 평등권 등이 확실히 보장됨(5.4%), 기본생활 습관, 인성교육, 생활교육 등을 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실천함(5.1%) 순이었다.

〈표 III-2-19〉 우리나라 현행 학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항목	빈도(비율)
필요하다	433(43.9)
필요하지 않다	554(56.1)
전체	987(100.0)

〈표 III-2-20〉 만 3-5세 유아 단계를 기본 학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인식

구분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21.8	24.7	29.8	18.1	5.6	2.61	1.171	0.902
유치원	21	25.6	27	20.8	5.6	2.64	1.184	
어린이집	22.6	23.8	32.7	15.3	5.6	2.58	1.158	
항목							1순위	2순위
만 3-5세 유아단계를 기본 학제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연령을 만5세만 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17(1.7)	18(1.8)
	연령을 만4-5만 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5(0.5)	11(1.1)
	기본학제화하면 의무교육화되고 취학의무(강제성)가 생기므로						97(9.8)	113(11.4)
	기본학제화하면 의무교육화되고 기관을 선택할 부모의 선택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38(3.9)	46(4.7)
	학교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함께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81(8.2)	97(9.8)
	유아의 놀이할 권리가 침해당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220(22.3)	110(11.1)
	기타						1(0.1)	6(0.6)
	응답 없음						528(53.5)	586(59.4)
전체						987(100.0)		
만 3-5세 유아단계를 기본 학제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이유	초중등학교처럼 공교육이 확실히 보장됨						57(5.8)	47(4.8)
	전면 무상교육이 확실하게 실현됨						29(2.9)	42(4.3)
	영유아 사교육이 절감됨						20(2.0)	34(3.4)
	유아의 교육권, 학습권, 평등권 등이 확실히 보장됨						61(6.2)	53(5.4)
	기본생활습관, 인성교육, 생활교육 등을 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실천함						67(6.8)	50(5.1)
	기타						0(0.0)	0(0.0)
	응답 없음						753(76.3)	761(77.1)
	전체						987(100.0)	

만 5세 유아의 초등준비 수준에 바람직한 대안 1순위에는 현행과 같이 유아교육은 놀이중심으로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연계교육을 놀이중심으로 진행함이 3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유아학교에서 충분히 놀고, 초등학교 1학년에 가서 본격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함(27.0%), 초등학교 1학년을 만 7세로 하고, 만 6세(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에 기초학습준비반(preschool class)을 구성하여 읽고 쓰고 셈하는 교육에 적응하도록 함(14.6%)였다. 2순위는 현행과 같이 유아교육은 놀이중심으로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연계교육을 놀이중심으로 진행함(22.4%), 유아학교에서 충분히 놀고, 초등학교 1학년에 가서 본격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함(19.8%), 만 5세 2학기가 되면 유아학교에서 학교갈 준비(읽고 쓰고 셈하기 교육)를 실시하기를 바람(15.3%) 순이었다.

〈표 III-2-21〉 만 5세 유아의 초등준비 수준에 바람직한 대안 인식

항목	1순위	2순위
만 5세가 되면 유아학교에서 학교갈 준비(읽고쓰고 셈하기 교육)를 학기초부터 실시하기를 바람	118(12.0)	108(10.9)
만 5세 2학기가 되면 유아학교에서 학교갈 준비(읽고쓰고 셈하기 교육)를 실시하기를 바람	114(11.6)	151(15.3)
유아학교에서 충분히 놀고, 초등학교 1학년에 가서 본격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함	266(27.0)	195(19.8)
초등학교 1학년을 만 7세로 하고, 만 6세(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에 기초학습준비반(preschool class)을 구성하여 읽고 쓰고 셈하는 교육에 적응하도록 함	144(14.6)	133(13.5)
현행과 같이 유아교육은 놀이중심으로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연계교육을 놀이중심으로 진행함	343(34.8)	221(22.4)
기타	2(0.2)	7(0.7)
응답 없음	0(0.0)	172(17.4)
전체	987(100.0)	

만 5세 자녀를 조기입학시킬 의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가 57.3%, 그렇지 않다가 19.9%, 보통이다가 9.5%, 그렇다가 11.2%, 매우 그렇다가 2.0%였다. 전체 평균은 1.81점이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유형에 따라서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치원은 평균

이 1.79점, 어린이집은 평균이 1.8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어린이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2〉 만 5세 자녀 조기입학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57.3	19.9	9.5	11.2	2.0	1.81	1.125	
유치원	59.1	18.3	8.3	13.1	1.2	1.79	1.124	-0.508
어린이집	55.5	21.5	10.8	9.3	2.9	1.83	1.126	

만 2세 영아반과 만 3세 유아반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12.2%, 그렇지 않다가 16.5%, 보통이다 34.2%, 그렇다 28.0%, 매우 그렇다 9.1%였다. 전체 평균은 3.05점이었다.

기관 유형에 따라서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치원은 평균이 2.94점, 어린이집은 평균이 3.17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3〉 만 2세 영아반과 만 3세 유아반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2.2	16.5	34.2	28.0	9.1	3.05	1.138	
유치원	13.9	18.3	34.7	26.2	6.9	2.94	1.13	-3.209**
어린이집	10.4	14.7	33.7	29.8	11.4	3.17	1.135	

만 5세 또는 초등 1학년의 초등학습적응을 위한 준비반 필요성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10.3%, 그렇지 않다가 11.3%, 보통이다 25.3%, 그렇다 37.5%, 매우 그렇다 15.5%였다. 전체 평균은 3.36점이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유형에 따라서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치원은 평균이 3.35점, 어린이집은 평균이 3.3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어린이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4〉 만 5세 또는 초등 1학년의 초등학교적응 준비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0.3	11.3	25.3	37.5	15.5	3.36	1.179	
유치원	10.3	12.5	24.8	36.3	16.1	3.35	1.192	-0.315
어린이집	10.4	10.1	25.9	38.7	14.9	3.38	1.166	

유아들이 초등학교 학습을 준비한다면 각 항목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일지 응답하였다. 전체 평균은 3.96점으로, 중간 이상의 필요성을 보였다. 문항별로 보면 의사소통 교육(4.43),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정서교육(4.41), 신변처리교육(4.36점) 등에서 평균 이상 수준을 나타내었다. 평균이 가장 낮은 문항은 디지털 및 컴퓨테이팅 교육(2.80점)이었다. 기관 유형에 따라서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하고자 하는 태도, 자기조절능력 및 자기 통제력 교육, 신변처리교육,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정서교육, 의사소통 교육, 인지 및 일반적 지식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모든 문항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5〉 유아 초등학교 학습 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문항								유치원 평균	어린이집 평균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응답 없음	평균	t	
1	한글 교육(읽고, 쓰기)	2.7	4.9	19.8	48.1	24.5	0	3.87	3.81	3.93
									-1.891	
2	수교육(수세기와 수일기, 초보적인 덧셈뺄셈하기)	3.0	6.7	29.8	41.2	19.3	0	3.67	3.63	3.72
									-1.494	
3	간단한 영어 듣고 말하기	11.7	18.2	34	25.6	10.4	0	3.05	3.03	3.07
									-0.666	
4	디지털 및 컴퓨테이팅 교육	14.9	22.4	37.3	18.7	6.7	0	2.80	2.79	2.81
									-0.395	
5	학습하고자 하는 태도	1.8	4.1	23.6	44.4	26.1	0	3.89	3.82	3.96
									-2.432*	

6	자기조절능력 및 자기 통제력 교육	0.6	1.5	12.9	43.3	41.7	0	4.24	4.18	4.3
									-2.465*	
7	신변처리교육 (배변활동 등)	0.5	0.7	9.6	40.2	48.9	0	4.36	4.3	4.43
									-2.666**	
8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정서교육	0.4	0.7	8.9	37.3	52.7	0	4.41	4.35	4.47
									-2.714**	
9	의사소통 교육	0.3	0.9	7.9	37	53.9	0	4.43	4.38	4.48
									-2.186*	
10	인지 및 일반적 지식	0.6	2.0	19.4	43	35.1	0	4.1	4.02	4.18
									-3.087**	
전체									3.96	

만 3-5세 무상교육 운영시간의 적당한 정도에 대해서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시간(온종일)을 선택한 비율은 72.2%,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4-5시간만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을 선택한 비율은 27.0%였다.

만 3-5세 무상교육 범위의 적당한 필요 정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전체 평균은 4.36점으로, 높은 수준의 필요성을 보였다. 문항별로 보면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모든 아이에게 실현해야함이 4.28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재정지원하고 교육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함(4.18점)과 특성화/특별활동비를 제외한 모든 돌봄을 무상으로 해야함(4.10점)이 이었다. 기관 유형에 따라서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재정지원하고 교육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함에서는 어린이집이 더 높게, 그 외의 문항에서는 유치원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6〉 3-5세 무상교육 운영시간 선호도

항목	빈도(비율)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시간(온종일)	713(72.2)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4-5시간만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	266(27.0)
기타	8(0.8)
전체	987(100.0)

〈표 III-2-27〉 3-5세 무상교육 범위 선호도

	문항								유치원 평균	어린이집 평균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 다	필요하 다	매우 필요하다	응답 없음	평균	t	
1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재정지원하고 교육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함	0.3	1.9	15.2	44.3	38.3	0	4.18	4.15	4.21
									-1.18	
2	질 높은 친환경 무상 급식을 모든 아이에게 실현해야함	0.6	2	13.5	36.6	47.3	0	4.28	4.29	4.27
									0.473	
3	특성화/특별활동비를 제외한 모든 돌봄을 무상 으로 해야함	1.6	4.5	16.8	36.5	40.6	0	4.10	4.11	4.09
									0.233	
전체								4.36		

IV

영유아 단계 국가책임교육을 위한 정책 제언

01 정책 방향과 과제

02 정책 전략

IV. 영유아 단계 국가책임교육을 위한 정책 제언

1. 정책 방향과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새 정부가 제시한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의 쟁점을 학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 쟁점에 대한 부모 및 국민, 전문가의 의견 수렴하고, 바람직한 대안과 정책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주제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을 위한 유보통합 정책

1) 정책 방향

첫째,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에 우선적으로 해당하는 유보통합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살펴보면, 만5세 초등취학 정책과 연동하여 정책의 긍정·부정 비중이 나타났다. 유보통합, 정책 발표 이후 부정 여론에서 긍정적 여론으로 변화하는 추세 보였으나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발표와 함께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부정 비중- 7월 68.0%). 즉, 정부의 주요 정책들과 유보통합 정책들이 연동하므로, 정부의 지지율과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충분한 국민 대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의 부모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단계적 유보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2%,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48%였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정부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38.4%,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40.3%,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21.3%였다.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한 비중이지만,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이 21%나 되므로 정책 홍보가 지금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들은 현재 유보통합 정책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조정과 국민통합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단계적 유보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 범부처 통합시스템 구축, 실현가능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우선적으로 범부처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연내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실질적으로 가동하여 범부처 통합 시스템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우선 구체적으로 그리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조했듯이 대국민 홍보 전략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을 위한 전략 마련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부모들은 유보통합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수준의 향상으로 질 높은 교육 가능, 어린이집 지원 증가에 대한 기대 등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부정 의견으로는 교사 일원화로 인한 교육 질 하락, 유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평, 유치원 교사 역차별 논란 등이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보통합 정책을 시행할 때, 부모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은 거의 절반 정도는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별다른 불편은 없지만, 영유아교육기관이 접근성이 편하고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질이 우수하며 교직원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유보통합은 지금보다 더 나은 체제로의 전환, 개편의 관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이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는 모든 유아가 평등하게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이고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에는 현재보다 교육보육 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통합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정확하게 모르겠고, 정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넷째, 유보통합을 통해 우선적으로 동일하게 되기를 바라는 요인은 교사의 자격과 처우, 교사대 아동비율, 부모 비용 부담이었는데, 이 요인들은 모두 기관의 구조적 질을 결정하는 변인들이다. 기본적으로 시스템과 기관의 구조가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유보가 분리되어 가장 불편한 점이 동일

한 연령(만3-5세)임에도 두 기관의 이용시간과 비용, 교사 등의 차이가 있어 불공평함으로 인식했고, 유보 기관의 차이를 교육과정과 교사, 주관부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동일 연령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섯째, 유보통합시 연령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통합으로는 만 0-5세 교육부에서 모두 통합이 36.2%, 만3-5세 유아교육(교육부), 만 0-2세(복지부 또는 타부처)로 연령별 이원화가 33.5%로 거의 비슷했지만 만0-5세를 교육부에서 모두 통합하자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았다. 그러나 여전히 만0-2세를 교육부에 통합해야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육부로 유보통합을 할 때 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찬성하는 이유는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부로 통합이 되면 학교 정체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었고, 반대하는 이유는 학교라는 명칭 자체가 영아 돌봄에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즉, 0-2세 영아를 교육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과 맥을 같이하는 지점이다.

부모들은 (영)유아학교 구축시 유아교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교육화 실현을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3-5세 유아학교로의 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0-2세 영아의 돌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영)유아학교를 구축하게 될 때, 담임교사가 갖추었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로는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아이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 인성이 좋은 교사, 영유아교육 전문성이 높은 교사였다, 소통하고 인성이 좋고, 전문성이 높은 교사를 부모들은 원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만0-2세나 만3-5세반이나 모두 교사의 학력은 4년제 대졸 출신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학력과 전문성은 상관이 높으므로 추후 유보통합을 고려할 때 만0-5세 (영)유아학교의 교사들은 모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

여덟째, 학급당 유아 수의 경우, 부모들은 만0-1세 영아는 약 2명, 만 2세는 약 4명, 만 3세 유아는 약 7명, 만 4세 유아는 약 9명, 만 5세 유아는 15명이라고 응답했고, 만0-5세 전체적으로는 학급당 유아 수가 10명 이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영아는 현행을 유지하고, 유아의 경우, 지금보다 더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유보가 통합되면 (영)유아학교의 학급당 유아 수의 비율은 부모가 원하는 비율만큼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와 최대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합적이고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우선 현재 놀이중심 누리고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였고, 인성교육과 놀이중심교육활동, 사회정서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인성교육과 놀이, 사회정서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므로 추후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측면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영)유아학교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개편에 관해서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운영의 지역화, 다양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부모들은 방과후과정/오후 돌봄에서 프로그램이나 돌봄의 구조가 지역에 따라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에서는 방향을 정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장점을 살려 다양한 게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영)유아학교들이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고, 기관의 자율성을 보다 충분히 주는 방향을 개편해야 한다.

열 한번째, 현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이 잘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비중은 65.9%이었고, 잘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1순위 이유에서는 유보통합 정책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이 어려울 것이므로가 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부의 지지율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교사 자격, 시설 통합 등에 대해 추진단과 추진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할 것이다.

2) 정책 과제

첫째, 정부-교육청/지자체-유아교육과 보육계, 학부모, 국민들과의 소통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은 기존의 유·보 격차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 패러다임을 넘어 미래세대를 고려한 유·보 체제 개편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교육과 보육, 돌봄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보통합 정책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사자격과 양성, 처우의 문제, 시설 통합의 문제 등은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영유아단계 국가교육책임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개혁으로서의 유보통합을 실시하고,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한다는 정책의 목표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보통합의 구체 내용은 유보통합 추진단이나 위원회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하나,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목적, 방향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개혁의 일환임에도 여전히 현장의 교사들은 유보통합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어, 정부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에도 놀라거나, 분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유보통합 정책을 홍보하고,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정책의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온오프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과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주고, 정책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며, 추진단과 추진위, 교육청과 지자체와 긴밀히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

둘째,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및 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고 발족하여,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복지부의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나, 교육부는 2025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통합하는 안이 이미 공표하였다. 이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을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파견 형식으로 운영하고, 이를 국무총리실 훈령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부에 복지부 부처를 이관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꾸준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일단 추진단과 추진위를 발족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유보통합 구체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초기에는 1부처 2체제 형식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최소로 하고, 시스템은 현행을 유지하며 의견을 모으는 1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2023년에서 2025, 2026년까지 (영)유아학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자격, 시

설, 법, 거버넌스, 전달체계, 행재정 등의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며, 2026년 (영)유아학교로 일원화하여 완전무상교육을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 추진단 내 자문단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교육부 내에서 교육과 돌봄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진, 제 3의 통합기관인 ‘(영)유아학교’ 체제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유보통합 추진단 단장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한다는 의견에 대해 유아교육계 현장의 정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단장 형태로 운영하거나, 복지부 공무원 단장의 의미와 역할 등에 대해 현장과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의 불안을 낮추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재원,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 등의 세부적 문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다 빠르고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과 교사 자격 및 처우 문제가 가장 첨예한 요소이므로, 부처를 통합하고,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서로 논의를 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재원마련은 초기 단계에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이행해야 하며(교부금+국고),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의 문제는 유아학교 교사체제로 상향평준화해야한다. 유아학교 교사 체제를 구축에 대한 사전 그림이 없다면, 유치원 교사들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논의가 현장과 필요해 보인다.

넷째, 미래비전을 그리는 새로운 방식의 유보통합 로드맵 구성이 필요하다.

2022 단계별 유보통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유보통합 환경과 상황이 같기도 또 다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교육부로의 통합에 유아교육과 보육이 모두 합의하였으나, 실행만 남겨두고 실천되지 못하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유보통합이 어려웠던 이유로 대통령의 탄핵을 제외하고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아학교 체제에 알맞게 지금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임시 체제를 정리하고, 법령, 교사자격, 부처 및 조직 개편, 교육과정과 재정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유아학교 체제의 기반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다섯째, 0-5세 교육부 통합의 의미를 함께 논의하고, (영)유아학교의 명칭변경이 고민되어야 한다.

현재 정치학적 지형도를 살펴보면, 오히려 어린이집 현장에서 유보통합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만0-5세 통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치원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보통합은 진행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을 캐스팅보트로 두고 유보통합을 유연하게 진행한다면, 큰 무리없이 유보통합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빠른 행정통합으로 갈등을 줄이고, 함께 미래 유아학교 체제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조사를 살펴보면, 36.0%가 0-5세 교육부 통합에 찬성, 29.3%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중립인 입장도 33.4이다.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교라는 명칭 자체가 영아 돌봄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20.4%)'와 '학교는 공부만 가르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8.5%)'의 의견도 존재하는데, 이는 특히 영아에 대해서 유아학교라는 명칭 변경이 아직 공감대를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치원은 이미 교육기본법상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아닌 명칭으로 유치원을 규정하기 어렵다. 이에 3-5세의 경우 유아학교라는 명칭은 적합해 보이나, 만0-2세의 경우, 유보통합을 할 경우, 어린이집으로 명칭으로 그냥 두거나, 유아학교 내 영아학급, 영아반 등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 만0-2세의 경우 새로운 명칭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여섯째, 교육부 중심의 0-5세 유아학교 모델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한다.

만0-5세 유아학교에서는 미래담론을 포함하고, 미래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돌봐야 할지 새로운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모델을 보다 구체화하고, 함께 합의하면서 미래 (영)유아학교 체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0-5세 유아학교 또는 (영)유아학교 모델은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아닌 제 3의 모델이자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기관은 교육부 산하에 있으므로 교육기관이나, 돌봄이 강화된 형태의 제 3의 모형으로 이해될 것이다. 학부모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고,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유보통합과 함께 고려할 유아무상교육

1) 정책 방향

본 연구에서 국민들은 유아 무상교육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재정 투명성 확보, 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 경쟁력 상향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유아 전면 무상교육’과 ‘유아의무교육’은 세금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해야할 점으로 보았다.

부모들은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모든 아이에게 실현되도록 하고,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고 교육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며, 특성화/특별활동비를 제외한 모든 돌봄을 무상으로 해야한다는 점에 모두 긍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만 3-5세 무상교육 운영시간의 적당한 정도에 대해서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시간(온종일)을 선택한 비율은 72.2%,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4-5시간만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을 선택한 비율은 27.0%였다. 이에 유아무상교육을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정책과 함께 진행하여 부모 만족도를 높이며 정책의 추진 동력으로 삼아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를 정비하고, 보다 나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유보 체제 개편에 방점을 둔 유보통합을 국민들, 양육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에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결국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무상교육의 조건을 마주할 수 밖에 없는 맥락이라고 판단된다.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표준유아교육비 만큼의 재정지원을 통해 완전무상교육을 실천한다고 가정할 때, 재원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표준유아교육비 만큼의 재정지원을 통해 확실하게 부모부담금이 줄어든다고 부모들이 체감하며 양질의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이에 유보통합을 논의하면서, 무상교육의 개념과 범위, 연령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장기 로드맵 하에서 차근차근 실행해나가는 것이 적합하다. 무상교육의 개념과 범위에서 급간식과 방과후과정, 특성화의 경우, 포함할지 아닐지, 방과후

과정을 교육이나 돌봄이나, 교육+돌봄이나의 개념에 따라서도 교사배치와 인건비 등의 관점에서 매우 다른 접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의무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완전무상교육이 실현되고, 국공립 비율이 80%가 이상이 되는 어느 시점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박창현, 김근진, 윤지연, 2021).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아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개편하여 구조적으로 격차를 줄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그 방향이 맞는지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정책 맥락에 맞는지 충분한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할 것이다.

2) 정책 과제

첫째, 재정지원을 표준유아교육비까지 늘릴 계획이 있다면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임시회계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로 유보 일원화를 하여 재정지원의 법적 기반을 명확하게 하고, 유아학교 시스템 내에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둘째, 0-5세 유아학교 시스템에서 만3-5세 무상교육을 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기본과정과 방과후과정, 친환경 무상급간식에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만3-5세 무상교육 운영시간의 적당한 정도에 대해서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시간(온종일)을 선택한 비율은 72.2%였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모든 아이에게 실현해야함이 4.28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아단계 무상교육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환경, 교부금의 확보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 학제개편: 영아 공보육, 유아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뒤, 유아의 무교육 고려 가능

1) 정책 방향

만 5세 연령을 하향화하여 초등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정책에서 만5세 의무교육, 만 5세, 4세 기간학제화에 대한 여러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에 현재

만3-5세 자체가 유아들이 다니는 학교이고 공교육 시스템이나 의무교육이 아니고, 완전 무상교육도 아니므로, 오히려 단계적으로 만 5세부터 제대로 된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의무교육은 실질적으로 당장은 어렵기때문에, 무상교육부터 실시해야한다면, 학교정체성을 제대로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의견들, 의무교육이라는 표현에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국가책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준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의견들도 있었다.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의무교육의 효과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교육과 보육 환경을 만들자는 점에는 많은 동의들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초등취학(입학연령 하향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96%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반대하였고, 부모의견 조사에서도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 이유는 놀이를 통해 가장 잘 배우는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학부모, 유아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맞벌이, 돌봄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 사교육 심화 우려 등 다양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만 5세 초등취학에 앞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및 관련 학자들에 제안한 K학년제 또한 만5세 초등입학제와 동일시되며, 이에 대해 국민들의 약 96%의 높은 부정 평가 나타났다. 반면 ‘유아의무교육’ 키워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 서였으나, K학년제 대비 긍정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만 5세 입학의 대안책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들은 현재 유아 의무교육을 전반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현행 학제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찬반이 거의 반반이었으나 필요하지 않다는 비중이 조금 우세하였고, 3-5세 유아를 기본학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합하지 않거나, 보통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유아의 놀이할 권리가 침해당할 것이 염려되고, 취학의무(강제성)에 대한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소수의 의견 중, 만 3-5세 유아단계를 기본 학제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1순위 이유는 기본생활습관, 인성교육, 생활교육 등을 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유아의 교육권, 학습권, 평등권 등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이 학제개편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초등학교 준비와 관련하여서도 부모들은 만 5세 유아의 초등준비 수준에 바람직한 대안 1순위에는 현행과 같이 유아교육은 놀이중심으로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연계교육을 놀이중심으로 진행함이 적합하다고 하였고, 유아학교에서 충분히 놀고, 초등학교 1학년에 가서 본격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만 5세 또는 초등 1학년의 초등학습적응을 위한 준비반이 필요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준비가 필요한 항목은 의사소통 교육(4.43),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정서교육(4.41), 신변처리교육(4.36점) 등에서 평균 이상 수준을 나타내었다. 평균이 가장 낮은 문항은 디지털 및 컴퓨테이팅 교육(2.80점)이었다. 즉, 초등학습적응을 위한 준비는 필요하나, 현재 체제에서 진행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초등연계 뿐만 아니라, 만 2세 영아반과 만 3세 유아반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찬반이 거의 비슷하였으나, 찬성이 더 우세하였고, 보통이라는 유보의견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만 5세 자녀를 조기입학시킬 의향에 대해 80% 이상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조기입학은 현재의 시점에도 부모들이 제도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5세 초등취학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정책 과제

만5세 입학연령 하향화 정책과 K학년제 등 학제개편에 대해 부모들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한다면, 정책입장자들과 정부는 앞으로 더 신중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거철이 되면 매년 정치인들과 재정학자들이 유아교육을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대표적으로 만 5세를 초등 취학을 하는 학제 개편안을 제안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나 입직 연령을 낮추는 공약을 제안해왔다. 이러한 경제적 논리에 기반한 접근들은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상 3-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라는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민국 유아학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기간학제 내에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첫째, 현재는 유아의무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이므로, 유아의무교육 체제를 장기로드맵으로 잡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유보통합과 유아무상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의무교육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국공립유치원 이용비율 8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장기 로드맵을 구성하며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하에 정책을 만들어가야할 것이다. 예컨대 의무교육의 경우, 만 5세부터 4-5세, 3-5세 기간학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안이 현실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이에 대한 구체안과 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여전히 만 3세, 만 3세와 만 4세의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물론 만 5세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5-10년간 급격하게 줄어든 학령인구 감소 현상과 다문화 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합 등을 고려하여 유아 의무교육을 도입할 가능성도 예견해볼 수 있다. 지금부터 유보통합을 기반으로 만3-5세 유아학교 체제 내에서 공교육 제도를 탄탄하게 만들어내고, 만0-5세 체제 하에서 국가책임 유아교육을 꾸준히 실현해 나간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학제개편은 초중고 시스템의 학제 개편에 집중을 하거나(줄이거나 통합하거나) 유-초 연계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들은 만 5세 유아의 초등준비 수준에 바람직한 대안 1순위에는 현행과 같이 유아교육은 놀이중심으로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연계교육을 놀이중심으로 진행함이 3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유아학교에서 충분히 놀고, 초등학교 1학년에 가서 본격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함(27.0%)에 응답하였다. 또한 조기 입학시킬 가능성은 절반이상이 없다. 아울러 만2세반, 만3세반 유아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직 반대비율, 찬성비율, 보통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아직 영아-유아 연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은 높지 않고, 유치원-초등학교 연계와 관련해서는 관심은 많으나, 유-초연계는 놀이중심으로 해야함에 동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초등학교 준비는 단순 한글, 수교육 보다, 의사소통교육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정서교육, 신변처리 교육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와 홍보를

강화해야 나가야 한다.

한글 자모 결합 교육이나 수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유아단계와 잘 연결되고, 학습과 태도, 지식이 보다 심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연계 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보다 필요해 보인다.

영유아단계에는 충분히 놀고, 경험하고, 읽고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자 하는 의지와 정서를 키우는 교육과 따뜻한 돌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정부는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은 학제개편 논의에서 지양해야 할 것이다. 0-5세 미래 유아학교 제도를 강화하여, 체제가 정리되면 무상에서 의무교육까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K학년제의 이상과 환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를 유초연계정책 등으로 대처하며, 초등과의 유연한 연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영아와 유아교육은 놀이와 경험, 삶을 중심으로, 이들의 발달과 개별화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모든 교육과 돌봄의 원리는 영유아에게서 시작해야함을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이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정책 전략

이상의 안을 실현하기 위한 개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한다.

가. 유보통합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내 국민참여 플랫폼 마련 및 유보통합 정책 홍보 및 소통 체제 강화
 - 가짜뉴스 정리, 국민대상 정책 홍보(K-TV, 육아방송 등 활용)
 - 온오프 상시 소통창구 마련으로 민원 해결
- 교육부의 유보통합추진단(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정책 결정,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역할, 교육청(지원청)의 인력배치, 지자체 관련 부서와의 연계방안,

지원조직과의 세밀한 연계방안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

□ 만0-5세 (영)유아학교 단계적 구축 방안 마련, 가칭 영유아교육법 신설

- 만0-2세 영아학교, 만3-5세 유아학교 명칭에 대한 합의 과정도 필요
- 만0-2세 돌봄 기반 영아학교 교육과정 수립
- 미래 유아학교 모델 구축

□ 유보통합 시, (영)유아학교의 정체성 확보와 교육·보육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 학급당 유아수 최소와 최대의 범위를 설정, 통합적이고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필요

-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이 어려운 이유는 사립과 민간 기관이 유아 수를 줄이면 운영상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므로 이를 지원 정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 부모들은 만0-1세 영아는 약 2명, 만 2세는 약 4명, 만 3세 유아는 약 7명, 만 4세 유아는 약 9명, 만 5세 유아는 15명이라고 응답했고, 전체적으로 0-5세 전체적으로는 학급당 유아 수가 10명 이하로 구성을 요청

□ 방과후과정 및 오후 돌봄의 지역화, 다양화, 자율화 방안 마련

□ 만0-5세 교육과 돌봄 제공을 연령별로 이원화, 현행 유아교육법 2조 방과후과정 개정, (가칭) 영유아교육법에 반영

- 만3-5세는 교육과 오후 돌봄 체제, 만0-2세는 돌봄체제로 구성, 학부모와 영유아가 체감하기에는 교육과 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된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촘촘한 체제 구축(인력 배치 등)

□ 누리과정, 유아학교 교육과정으로 명칭 변경

- 누리과정을 폐지하고 ‘유아학교 교육과정’을 유아학교 교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

-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의 구체화 필요: 인성교육과 사회정서교육, 놀이교육의 강화
 - 단위 유아학교 자치 강화, 교육과정 자율성/다양화 내실화
- 만0-2세 표준보육과정 유지, 만0-2세 영아담당 교원이 운영하도록 자격 신설
- (영)유아학교의 교수학습 방법과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 역량 강화에 관한 개념 재정립뿐 아니라 관련 연구 필요
- 미래세대 기초교육을 위한 교원양성체계 제안
- 영유아 교사 학력 학사 이상으로 추후 상향
 - 전문학사의 경우 심화과정을 추가로 이수 과정 제안
- 교원 자격을 획득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 교육부로 유보통합을 할 때 교원자격을 획득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들을 안심시키는 과정이 필요
 - 만0-5세 (영)유아학교 교원의 정원, 자격, 처우 등에 관한 심층 연구수행
- 교사 정원 조정 필요
- 1교실 2교사 제도(비담임제도 포함) 등을 포함한 교사 정원 조정 정책을 학급당 유아수 정책과 연동하여 시행
- 유보통합 재정 규모와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 제안

나. 무상/의무교육

- 단계적 완전무상, 유아 기간학제화 안착, 재원 마련 계획 수립
- 유보통합 재정 규모와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 제안
 - 유아 무상교육, 의무교육의 장기 로드맵 구축

- 학부모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도 높으므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화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할 것을 제안함.

다. 학제개편

- 유보통합 기반, 무상교육에서 의무교육 체제 구축이 가능한 단계에, 유아단계 기간학제화 실현, 장기 로드맵 마련
 - 추후 1 또는 2+5 정책 제안: 유아의무교육 4세 또는 4-5세, 초등 5학년제 제안, 기본단계와 초등단계로 구분, 기본단계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으로 구분
- 만 5세를 초등학교에 보내거나, 입학연령을 낮추거나, 조기입학을 추진하는 관련 정책들은 추후 지양
- 만 5세 초등준비는 놀이중심 유초연계방안 마련으로 해결, 연구 및 프로그램, 강화



참고문헌

- 강지원·최혜진·김성아·이지혜·노현주·조동훈·유해미·이길재·이희현(2021). 보육·돌봄 체계 중장기 개편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경상남도교육청 (2021). 통합운영학교 현황. 2022. 9. 30. 인출.
- 고가온 (2019).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의 통합(유보통합) 정책에 대한교사와 학부모 인식 연구. 인문사회21, 11(6), 17-32.
- 공병호·최인화·한유미·김현정(2019).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 및 통합 시스템 연구.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 교육부(2020). 통합운영학교 현황. 2022. 9. 30. 인출.
- 교육부(2022. 7. 29). 새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울 속에서성장하는 인재.
- 교육부(2022. 8. 9). 교육부 학제가편 및 유보통합 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국무조정실 회의).
- 교육부(2023. 1. 5).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a). 교육통계연보.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b). OECD 교육지표.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연보.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2). 2022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 교육혁신위원회(2007). 미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 국가지표체계(2022). 유아교육 취원율. 2022. 9. 15 인출.
- 권새나(2022). 박순애 장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국가교육위 통해 공론화할 것" 뉴스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8/01/2022080100151.html>, 2022. 9. 15. 인출.

- 김경애·김나영·김주아·김지혜·문보은·손찬희·서예원·박성호·양희준·이선호·최상덕·황준성·김신애(2022). 더 나은 삶으로서의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식·박선나 (2019). 학기제 및 학제 개편 공론화를 제안한다. 더미래연구소. <http://themirae.org/if-report-%ED%95%99%EA%B8%B0%EC%A0%9C%EA%B0%9C%ED%8E%B8/>, 2023. 1. 20. 인출.
- 김도운 (2019.5.20). 학교 통폐합 대신 ‘통합학교’ 선보인다.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968805>, 2022. 9. 30. 인출.
- 김병주(2011). 만 5세 무상교육을 위한 비용 추계. 교육재정경제연구, 20(3), 205-221.
- 김성기(2017). 학제 논의 비평. 교육 비평, 39, 129-141.
- 김성기·김현자·황준성(2019). 미래교육을 위한 학제 혁신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수진·이경원·정경아·허수정(2018). 유·초 징검다리 교육과정의 활성화 방안 연구. 충청북도교육청.
- 김수향·임경심·홍혜경 (2014). 유보통합 교사양성체제에 대한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 간인식비교. 한국유아교육학회, 34(3), 379-400.
- 김영철·박재윤·김흥주·윤종혁·김태은 (2006).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종환(2019.11.4). 인천 최초 도심형 초·중 통합학교 내년 개교..교육청 관리 지침 개정. 일간경기,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969> 에서 22. 9. 30. 인출.
- 김지원·남수경 (2020). 유아교육재정 확보제도의변천과정과 초·중등교육비에 대한 영향 분석.교육정치학연구, 27(3),165-187.
- 김진석(2016).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지방자치단체의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월간 복지동향(2016.4.1.)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ec%9b%94%ea%b0%84%eb%b3%b5%ec%a7%80%eb%8f%99%ed%96%a52016/1409010>, 22.1.20. 인출.
- 김포타임즈(2022.7.21). 향산초중, ‘유·초·중 통합수업주간 수업 공개의 날’. <http://www.gimp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21>, 2022. 9. 30. 인출.

- 김혜자(2021). 유치원 교육여건 변화. <https://kess.kedi.re.kr/index>(2022. 9. 20. 인출).
- 김흥주·양승실·김순남·박승재·이쌍철·이성희·김갑성·류성창·김은수(2016). 미래지향적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체제 재구조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나정(2014). 유아무상교육·보육정책 분석 : Cooper 등의 다차원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유아교육학논집, 18(1), 49-71.
- 대전일보(2022.8.1.). [오피니언] 초교 만 5세 입학, 무조건 밀어붙일일 아니다.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541>, 2022. 9. 15. 인출.
- 대한교육법학회·육아정책연구소(2022). 영유아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 방안 모색. 육아정책연구소 KICCE 정책 토론회 자료집.
- 박연정·정옥분(2008).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개발 연구. 인간발달연구, 15(1), 23-47.
- 박은혜·장민영(2014). 한국과 OECD 국가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환경과 효과 분석: 재정,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및 가정 환경을 중심으로.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5(20), 79-103.
- 박재윤·양승실·윤종혁·김태은·김성기·김용남·황준성·박진아(2007).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 방안(II). 한국교육개발원.
- 박창현·김근진·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방소영·황혜정(2015).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검사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 53(1), 29-47.
-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국회(2022).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위한 토론회.
- 문미옥(2006). 유아교육체제의 변화 전망과 학제 발전과제 토론문. 51-62. 제2회 학제 연구 정책토론회 교육체제 변화 전망과 학제. 한국교육개발원.
- 보건복지부(2021a).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체계.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21b). 2021 보육통계.
- 서영인·김병주·안종석·김정훈·하봉운 (2020). 교육재정 종합 진단 및 대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서울교육대학교 (2020). 2021년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스토리텔링을 통한 유·초등 전이단계 STEAM 프로그램 개발. 한국과학창의재단.
- 세계일보(2022.7.31.). [시설]‘만 5세 취학’ 학제개편,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31513321> 에서 2022. 9. 15. 인출.
- 육아정책연구소(2022).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육아정책연구소 정책토론회 자료집.
- 이군현의원실(2006). 학제개편쟁점진단 정책토론회: 만5세초등학교전면취학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자료집.
- 이덕난(2017). 이명박 정부 누리과정 무상지원 정책에 대한 합리성 검토: 유아교육·보육 공통과정(누리과정)의 명칭과 목적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2017년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93-121.
- 이수광(2014). 행복교육을 위한 공교육의 새로운 프레임, 2014년 제1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행복교육 현장토론회자료집.
- 이은해(1979). 학교준비도 검사 표준화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학연구, 17(1), 49-60.
- 이일주(2016).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제13차 미래교육포럼 자료집.
- 이정옥·류승희·임수진 (2018). 정권별 유보통합 관련 사회적 담론의 의미구조 분석: 1982년에서 2016년 사이를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38(2), 469-500.
- 임재택(2021). 21세기 교육대전환의 첫걸음!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교육체제 구축 방안, 미래세대를위한 영유아교육체제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1. 11. 16).
- 임재희(2017.2.23). 조희연교육감 'K-5-4-3' 학제개편안 제안...안철수안과 다른 점은?.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70223_0014723911#_enliple에서 2022. 9. 15. 인출.
- 임후남·김진숙·심연미(2021).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유형별 주요 의제 분석: 6. 학습자 삶 중심의 학제 개편. 한국교육개발원.
- 장영희(2005). 유아를 위한 바람직한 학제개편의 방향. 현안진단을 위한 유아교육 정책 토론회, 유아교육발전을위한 유아교육대표자 연대.

- 장명림(2006). 미래형 학제개편과 유아교육학제논의.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2014).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연계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장명림·김진영·김현숙·박창언, 신은수, 이연승, 김명순, 이미정, 양승실, 이신동, 민용성, 서문희(2011).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 체제 개편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장서영(2022.07.18). 남양주 하랑초중통합학교, 통합학교의 새 지평을 열다!. 비전21뉴스, <http://www.vision21.kr/mobile/article.html?no=201526> 에서 22. 9. 30. 인출.
- 장재훈(2021.2.25). 서울 첫 유·초·중 통합학교 탄생 .. 강빛이음학교 3월 개교. 에듀프레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7092> 에서 22. 9. 30. 인출.
- 전라남도교육청(2022). 통합운영학교 현황. 2022. 9. 30. 인출.
- 전라북도교육청(2022). 교육행정자료(각급 학교 현황). 2022. 9. 30. 인출.
- 제20대 대통령실(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정미경·황준성·한은정·민수빈(2017).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조상식(2008).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비평, 24, 38-53.
- 충신대학교(2021). 2021년 융합교육(STEAM) 프로그램: 협력 학습적 미술과 디자인을 활용한 유치등 연계 STEAM 프로그램. 한국과학창의재단.
- 충청북도교육청 (2022). 통합운영학교 현황. 2022. 9. 30. 인출.
- 최은영·차기주(2021).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유형별 주요 의제 분석: 7. 유아 교육 및 보육 공공성 강화와질 제고. 한국교육개발원.
- 하봉운 (2016). 유아무상교육보육(누리과정). 교육비평, 19-36.
- 홍후조(2022.08.27). 교육 개혁, ‘공정’과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827/115167040/1> 에서 22. 10. 30. 인출.
- European Commission (2019).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2019.
- Murphey, D. A., & Burns, C. E. (2002).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 Practice, 4(2). <https://ecrp.illinois.edu/v4n2/murphey.html>, 2023. 1. 20 인출.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1991). The 1991 National Education Goals Report: Building a Nation of Learners. Washington. <http://govinfo.library.unt.edu/negp>, 2023. 1. 20 인출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Paris: OECD.

OECD(2020). Education at a Glance. Paris: OECD.

OECD(2021). Education at a Glance. Paris: OECD.

OECD(2022). Education at a Glance. Paris: OECD.

OTHC(2018). Developmental Milestones Before Starting School. Occupational Therapy Helping Children. <https://occupationaltherapy.com.au/developmental-milestones-before-starting-school/>, 2023. 1. 20. 인출.

Oxford OWL(2018). Guide to Starting School.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cdn.oxfordowl.co.uk/2018/06/27/15/30/15/280/Oxford_Owl_Starting_School_Guide_2018.pdf, 2023. 1. 20. 인출.



부록

부록 1.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양육자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학제개편 방안’ 연구 수행을 위한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세부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약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개인적 사항이나 설문 내용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 (통계조사자의 의무)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는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기간은 11월 8일(화) ~ 11월 11일(금)까지입니다. 원활한 연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 본 조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시는 양육자께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의 응답 결과가 연구 보고서에 활용될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조사진행 ☐ 동의하지 않음 ☒ 조사중단

본 조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된 모든 데이터는 통계 비율을 산출하는데에만 사용되며, 보고서가 완료된 후 6개월 내에 응답된 설문지와 전산 데이터는 전량 폐기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다음은 본 설문지에 응답하시는 분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응답자 현황

1. 귀하의 자녀의 수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 다음부터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중심으로 응답 바랍니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2명 이상 자녀가 다니고 있다면 나이가 더 많은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자녀의 연령 (만 세)

3. 해당 자녀는 몇 번째 자녀입니까?

- ① 첫째 자녀 ② 둘째 자녀 ③ 셋째 자녀 ④ 넷째 자녀 ⑤ 다섯째 자녀 이상

4. 현재 해당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국공립유치원 ② 사립유치원 ③ 국공립어린이집 ④ 민간어린이집
⑤ 가정어린이집 ⑥ 직장어린이집 ⑦ 법인 또는 단체 어린이집
⑧ 협동어린이집 ⑨ 기타()

5. 해당 자녀의 현재 기관 이용 기간 (년 개월)

6. (이용기간)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을 적어주세요.

()시 ()분 ~ ()시 ()분 까지

7. 해당 자녀의 과거 다른 형태 기관 이용 여부 (복수 응답 가능)

- ① 국공립유치원 ② 사립유치원 ③ 국공립어린이집(법인/직장포함)
④ 민간어린이집 ⑤ 가정어린이집 ⑥ 학원
⑦ 현재 이용하는 기관이 처음 이용하는 기관임 ⑧ 기타()

8. 부모님의 연령 (부: 만 세, 모: 만 세)

9. 응답중인 부모님은 맞벌이 여부

- ① 예 ② 아니오

10. 귀하의 자녀가 현재 재원 중인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을 중요한 순서대로 2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부모 부담 비용이 적절함
- ② 이용시간이 적절함
- ③ 원장 또는 교사의 전문성이 우수함
- ④ 교직원들이 아이들을 사랑함
- ⑤ 교육(보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질이 우수함
- ⑥ 교육(보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질이 우수함
- ⑦ 방과후/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발레, 과학 등) 운영이 우수함
- ⑧ 방과후/오후 돌봄 운영이 적절함
- ⑨ 교재교구 및 시설, 설비가 안전하고 우수함
- ⑩ 양질의 급간식 제공
- ⑪ 통학(접근성 및 차량 등)이 편함
- ⑫ 형제 자매가 함께 방과후 돌봄을 이용할 수 있음
- 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 ⑭ 기타 ()

11. 귀하의 자녀가 현재 재원중인 기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중요한 순서대로 2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등하원이 불편함(차량 미운행, 통학이 어려움 등)
- ② 교육비(보육비)가 부담됨
- ③ 이용시간이 불편함
- ④ 원장 또는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함
- ⑤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질이 낮음
- ⑥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발레, 과학 등)이 불편함
- ⑦ 방과후 돌봄/오후 돌봄 이용이 불편함
- ⑧ 교재교구 및 시설, 설비가 미비함
- ⑨ 급간식의 질이 낮음
- ⑩ 형제 자매가 함께 이용할 수 없음
- ⑪ 주말, 휴일, 응급시 돌봄이 부족함
- ⑫ 별다른 불편함이 없음
- ⑬ 기타 ()

Ⅱ.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유보통합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통해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단계(만 0~5세)부터 국가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미래의 영·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교육과 돌봄에 있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과 이와 관련된 대안적인 정책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보통합이란 현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만 0~5세의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 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부처 및 행정체계, 재정, 법적 근거, 서비스 기능, 교사 자격 및 양성과정, 시설 기준 등을 통합하고자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교육부로 실행부처를 정하고 유보통합준비팀을 구성하여 범부처가 단계적 유보통합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주관부처
- ② 운영시간
- ③ 교사의 질과 자격
- ④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 ⑤ 비용
- ⑥ 시설 환경
- ⑦ 보낼 수 있는 연령
- ⑧ 기관 입소(입학)방식
- ⑨ 기타()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구분되어 있어 불편한 점이 있으십니까? 가장 크게 불편한 점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 ① 이용 가능한 연령 차이로 형제자매가 다른 기관을 이용해야 함
- ② 두 기관 모두 만 3-5세를 담당하기에 기관 선택시 혼란스러움
- ③ 동일한 연령(만 3-5세)임에도 두 기관의 이용시간과 비용, 교사 등의 차이가 있어 불공평함
- ④ 두 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부 보조금 카드와 운영체계가 달라 기관을 옮길 때 불편함
- ⑤ 입학(입소)방식이 달라 구분해서 신청해야 함
- ⑥ 기타()

3.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단계적 유보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4. 귀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4-1. (문4에서 ‘① 예’ 응답자만) 그럼, 통합을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2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모든 유아가 평등하게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므로
- ② 교원 자격을 갖춘 양질의 교사에게 믿고 맡길 수 있으므로
- ③ 행정정 통합을 통해 전달체계와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므로
- ④ 부모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므로
- ⑤ 이용시간이 동일해지므로
- ⑥ 정부지원금이 동일해지므로
- ⑦ 교사대 아동비율이 동일해지므로
- ⑧ 이용가능한 연령이 동일해지므로(만 0-5세)
- ⑨ 교사의 자격과 처우가 동일해지므로
- ⑩ 기타(

4-2. (문4에서 ‘② 아니오’ 응답자만) 그럼, 통합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2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현재도 선택할 수 있는 이용시간이 다양함
- ② 현재도 선택할 수 있는 이용 비용이 다양함
- ③ 현재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받음
- ④ 현재도 질 높은 교사를 확보하고 있음
- ⑤ 현재도 시설설비가 좋기 때문임
- ⑥ 유보통합을 통해 현재보다 교육보육 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
- ⑦ 현행에 만족함
- ⑧ 기관의 다양성의 폭일 줄어든 것을 우려
- ⑨ 기타()

4-3. (문4에서 ‘③ 모르겠다’ 응답자만) 그럼, 유보통합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2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정확하게 모르겠음
- ② 유보통합 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많을 것 같음
- ③ 유보통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음
- ④ 정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⑤ 기타()

5. 유보통합시 가장 우선적으로 동일하게 되길 바라는 항목을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이용 가능 연령
- ② 부모 비용 부담
- ③ 정부지원금액
- ④ 연간운영일수(방학 등)
- ⑤ 교사 자격기준과 처우 수준
- ⑥ 교사대 영유아비율
- ⑦ 시설 설비기준
- ⑧ 지도감독체계
- ⑨ 기타()

6. 유보통합시 연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통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0-5세 교육부에서 모두 통합
- ② 만 3-5세 유아교육(교육부), 만 0-2세(복지부 또는 타부처)로 연령별 이원화
- ③ 만 4-5세 유아교육(교육부)(의무교육), 만 0-3세(복지부 또는 타부처)로 연령별 이원화
- ④ 기타()

* 참고 : 의무교육(義務教育)은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 일정한 나이에 이른 아동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통 교육을 의미함. 무상교육을 기반으로 하며, 취학의무가 있음.

7. [(영)유아학교] 교육부 체제 유보통합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체제에서 유아들이 다니는 학교 체제로 초등과 영아가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영)유아학교’로 부르는데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 ④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7-1. (문7에서 ‘①, ②’ 응답자만) 그럼, 동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학교라는 명칭 자체가 영아 돌봄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② 학교는 공부만 가르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③ 새로운 더 나은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시대에 맞기 때문에
④ 기타()

7-1-1. (문7에서 ‘①, ②’ 응답자만) 교육부 산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면서도 공공성을 담보한, 미래지향적인 기관 이름으로 적당한 이름이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

7-2. (문7에서 ‘④, ⑤’ 응답자만) 그럼, 동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교육부 산하 상급학교와 연계를 위해서 (영)유아학교로 불리는 것이 적합하다
- ②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
- ③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부로 통합이 되면 학교 정체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영)유아학교라고 불리는 것이 적합하다
- ④ 유아들을 위한 학교라는 명칭은 헌법에 명시된 유아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강조하기에 적합하다
- ⑤ 기타()

8. [(영)유아학교] 교육부에서 만 0-5세 (영)유아학교를 구축하다면, 가장 기대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영유아의 교육권과 평등권 보장
- ②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의 실현
- ③ 양질의 교원 시스템 구축
- ④ 영아의 교육기능 강화
- ⑤ 기타()

9. [(영)유아학교] 교육부에서 만 0-5세 (영)유아학교를 구축하다면, 가장 우려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영아보육, 시간제 보육 등의 기존 보육 서비스의 유연한 연계

- ② 경직된 학습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우려
- ③ 만 0-2세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등 가정보육시설의 학교 제도화
- ④ 기타()

10. [교직원] 교육부에서 만 0-5세 (영)유아학교를 구축한다면 자녀의 담임 교사가 갖추었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영유아교육 전문성이 높은 교사
- ② 경력이 많은 교사
- ③ 인성이 좋은 교사
- ④ 아이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
- ⑤ 학력이 높은 교사
- ⑥ 부모와 소통을 잘하는 교사
- ⑦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교사(외국어 등)
- ⑧ 기타()

11. [교직원] 교육부에서 만 0-5세 (영)유아학교를 구축한다면 만 3-5세반 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교사의 학력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졸
- ② 전문대졸
- ③ 4년제대졸
- ④ 대학원 졸
- ⑤ 학력은 중요하지 않음

11-1. [교직원] 교육부에서 만 0-5세 (영)유아학교를 구축한다면 만 0-2세반 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교사의 학력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졸
- ② 전문대졸
- ③ 4년제대졸
- ④ 대학원 졸
- ⑤ 학력은 중요하지 않음

12. [교직원] 담임교사는 몇 명의 유아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자녀에 해당하는 연령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⑥ 교육과정에 미래대응 요소가 부족함

⑦ 기타 ()

15. 만 0-5세 (영)유아학교 방과후과정/오후 돌봄은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온종일 교육+보호 체제로 구성

②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운영의 지역화, 다양화(돌봄, 특성화, 오후반 등 운영체계의 다양화)

③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교사 자격의 상향화

④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2교사 배치

⑤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전면 무상(프로그램, 급간식 등)

⑥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후 하원시 차량 지원

⑦ 기타 ()

16.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이 잘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6-1. (문16에서 '②' 응답자만) 그럼, 잘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① 유보통합 자체가 어려운 과제이므로

② 유보통합 정책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정이 어려울 것이므로

③ 유보통합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④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⑤ 정부의 정책추진력(속도와 방향 등)을 보다 높여야 하기 때문에

⑥ 기타()

17.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 정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선행해야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① 핵심관계제자들간의 정책 목표의 공유 및 내면화

② 국민들의 합의 도출

③ 정부의 의지와 유능함

④ 유아교육과 돌봄, 양육을 포괄하는 범부처 통합 시스템 구축

⑤ 부처간 긴밀한 협력과 갈등의 최소화

⑥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의 유능한 조정

⑦ 실현가능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⑧ 기타()

18.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입해 주십시오.

Ⅱ.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의 대안 모색: 학제개편 및 무상의무교육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여전히 학제개편과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현장의 관심도 높습니다. 다음은 학제개편과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제개편/기간학제화]

1. 지난 8월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화 정책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귀하는 만 5세를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하향화하는 학제개편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찬성한다 ④ 매우 찬성한다 ⑤ 모르겠다

- 1-1. (문1에서 ‘①, ②’ 응답자만) 그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놀이를 통해 가장 잘 배우는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 ② 학부모, 유아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 ③ 이미 만 3-5세 유아교육은 공교육이므로
- ④ 공약이나 국정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 ⑤ 특정연령 학생들(유아들)을 25%씩 분할하여 정원을 늘려 입학하게 되면 해당 학생들(유아들)에게 불이익이 되어서
- ⑥ 초등준비로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 ⑦ 장애 및 위험군 영유아의 입학유예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 ⑧ 기타()

1-2. (문1에서 ‘③, ④’ 응답자만) 그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학제와 교사양성과정, 교육과정제도가 상호 불일치하므로
- ② 유초등생과 청소년의 신체적·인지적 발달이 빨라졌기 때문에
- ③ 유치원 만 5세반 유아는 과거 초등학교 1학년과 비슷한 언어신체 발달을 보이는 듯하므로
- ④ 해외에서 만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해도 무리가 없었으므로
- ⑤ 한글교육과 수습하기 등의 기초학습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어디에서 지도해야 할지 불분명하므로
- ⑥ 입직연령이 너무 느려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 ⑦ 고등학생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만 17세 이전에 조기 졸업을 해야하므로
- ⑧ 기타 ()

2.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교육과 보육체제를 개편할 때 초·중등 학제와의 연계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 5세 초등 하향화가 아니라도, 인구구조의 변화 및 미래 산업구조의 개편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현행 학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참고: 우리나라 현행 학제는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제입니다. 만3-5세 유아교육은 공교육시스템에 있으나 현재 학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3. 만 3-5세 유아단계를 기본 학제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적합하지 않다 ② 적합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적합하다 ⑤ 매우 적합하다

3-1. (문3에서 ‘①, ②’ 응답자만) 그럼,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연령을 만5세만 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 ② 연령을 만4-5만 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 ③ 기본학제화하면 의무교육화되고 취학의무(강제성)가 생기므로
- ④ 기본학제화하면 의무교육화되고 기관을 선택할 부모의 선택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 ⑤ 학교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함께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 ⑥ 유아의 놀이할 권리가 침해당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 ⑦ 기타()

3-2. (문3에서 ‘㉔, ㉕’ 응답자만) 그럼, 적합하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초중등학교처럼 공교육이 확실히 보장됨
- ② 전면 무상교육이 확실하게 실현됨
- ③ 영유아 사교육이 절감됨
- ④ 유아의 교육권, 학습권, 평등권 등이 확실히 보장됨
- ⑤ 기본생활습관, 인성교육, 생활교육 등을 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실천함
- ⑥ 기타()

4. 만 5세 유아는 초등 직전에 있으므로 초등 준비 등과 관련하여 학제개편 대상 연령으로 늘 고려되고 있습니다. 만 5세 유아의 초등준비는 어떤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안을 우선 순위대로 2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만 5세가 되면 유아학교에서 학교갈 준비(읽고쓰고 셈하기 교육)를 학기초부터 실시하기를 바람
- ② 만 5세 2학기가 되면 유아학교에서 학교갈 준비(읽고쓰고 셈하기 교육)를 실시하기를 바람
- ③ 유아학교에서 충분히 놀고, 초등학교 1학년에 가서 본격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함
- ④ 초등학교 1학년을 만 7세로 하고, 만 6세(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에 기초학습준비반(preschool class)을 구성하여 읽고쓰고 셈하는 교육에 적응하도록 함
- ⑤ 현행과 같이 유아교육은 놀이중심으로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연계교육을 놀이중심으로 진행함
- ⑥ 기타()

5. 만 5세(초등학교 직전 연령) 자녀를 조기입학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만 2세 영아반과 만 3세 유아반의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만 5세 또는 초등 1학년에 초등학습적응을 위한 준비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1. 유아들이 초등학교 학습을 준비한다면, 다음 각 항목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일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전혀 필요 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필요 하다	⑤ 매우 필요 하다
1) 한글교육(읽고, 쓰기)	①	②	③	④	⑤
2) 수교육(수세기와 수읽기, 초보적인 덧셈뺄셈 하기)	①	②	③	④	⑤
3) 간단한 영어 듣고 말하기	①	②	③	④	⑤
4) 디지털 및 컴퓨테이팅 교육	①	②	③	④	⑤
5) 학습하고자 하는 태도	①	②	③	④	⑤
6) 자기조절능력 및 자기 통제력 교육	①	②	③	④	⑤
7) 신변처리교육(배변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8)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정서교육	①	②	③	④	⑤
9) 의사소통 교육					
10) 인지 및 일반적 지식					
11) 기타()	①	②	③	④	⑤

8. [무상교육] 만 3-5세 무상교육을 위한 운영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시간(온종일)
 ②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4-5시간만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
 ③ 기타()

9. [무상교육] 만 3-5세 대상 무상교육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정도에 따라 응답해주세요. (*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명에게 누리과정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함)

항목	① 전혀 필요 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 하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필요 하다	⑤ 매우 필요 하다
1)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재정지원하고 교 육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함	①	②	③	④	⑤
2)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모든 아이이 게 실현해야함	①	②	③	④	⑤
3) 특성화/특별활동비를 제외한 모든 돌봄을 무상으로 해야함	①	②	③	④	⑤
4) 기타()	①	②	③	④	⑤

10. 이외에도 학제 개편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록해 주십시오.

긴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부록 2. 빅데이터 분석: 맘카페 목록

참고) 수집 카페 목록

유보통합 수집 카페 상위 Top 20			만 5세 입학수집 카페 상위 Top 20		
No.	카페이름	카페URL	No.	카페이름	카페URL
1	맘아빠베	https://cafe.naver.com/kybluev4h	1	맘아빠베	https://cafe.naver.com/kybluev4h
2	맘스홀릭베아비	https://cafe.naver.com/mamibu	2	맘스홀릭베아비	https://cafe.naver.com/mamibu
3	광교맘모아라	https://cafe.naver.com/het1974	3	세종맘카페	https://cafe.naver.com/hotsejong
4	성동구중구영아들의모임	https://cafe.naver.com/jnoms	4	천안아산맘아일랜드	https://cafe.naver.com/hotchoan
5	경주아이맘	https://cafe.naver.com/2005mam	5	인천아파도	https://cafe.naver.com/kyungnammo
6	마포에서아이키우기	https://cafe.naver.com/hapcommy	6	고우리일산아파	https://cafe.naver.com/ksme
7	대전세종안스베아비	https://cafe.naver.com/hnbaby	7	달콤한창모맘스	https://cafe.naver.com/hengrammle
8	인천아파도	https://cafe.naver.com/kyungnammo	8	가북맘스토크맘	https://cafe.naver.com/gstempstkh
9	나눔카페(구광영맘88부대)	https://cafe.naver.com/nbgm1	9	마포에서아이키우기	https://cafe.naver.com/hapcommy
10	순관맘	https://cafe.naver.com/kjam	10	광주맘수디맘	https://cafe.naver.com/hongam09
11	구별맘	https://cafe.naver.com/210%4ddp	11	성동구중구영아들의모임	https://cafe.naver.com/jnoms
12	노원구월계맘모아라	https://cafe.naver.com/wdgyemom	12	원주파랑맘	https://cafe.naver.com/duega28sc
13	세종시닷컴	https://cafe.naver.com/sejongdy	13	대우맘365	https://cafe.naver.com/dynom365
14	경단맘블리	https://cafe.naver.com/gdravdy1144	14	광교맘모아라	https://cafe.naver.com/het1974
15	영종국제도시영아들의모임	https://cafe.naver.com/yeongjongbbue	15	대전세종안스베아비	https://cafe.naver.com/hnbaby
16	자유상동(상동구영아)맘	https://cafe.naver.com/sdfoesd	16	창원꿈아일랜드	https://cafe.naver.com/masamm
17	키즈배틀	https://cafe.naver.com/kidbbatl6	17	송도국제도시맘	https://cafe.naver.com/momsoongdoibae
18	죽전마복보경영아들의카페	https://cafe.naver.com/bokjonnom	18	미시원스클럽	https://cafe.naver.com/m111
19	배리맘	https://cafe.naver.com/bd6634	19	죽전마복보경영아들의?맘	https://cafe.naver.com/bokjonnom
20	택솔맘	https://cafe.naver.com/taxom	20	김해꿈아일랜드	https://cafe.naver.com/gimhaesumma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학제개편 방안